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사회지표

출산율 추이에 대한 집중조명(A SPOTLIGHT ON FERTILITY TRENDS)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사회지표

출산율 추이에 대한 집중조명
(OECD SOCIAL INDICATORS)

본 보고서에 표현된 의견과 언급된 논의들이 반드시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자료 및 지도는 특정 영토에 대한 주권, 국경과 경계의 결정, 영토와 도시 그리고 지역의 명칭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이 그 책임하에 제공하였습니다. OECD가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및 요르단강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한국어판 번역은 공식적인 OECD의 번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원본과 한국어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의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출판물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문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사회지표*는 OECD 사회지표 개요의 10번째 버전입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웰빙과 그 추세에 대한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에디션은 25개의 사회지표를 제시하며, 38개 OECD 회원국과 가능한 경우 가입국 및 주요 협력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즉, 불가리아, 브라질, 크로아티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기타 G20 국가인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출산율에 관한 특별 정책 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관찰되는 합계출산율(TFR)의 장기적인 감소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녀를 갖는 개인의 선택은 양육 비용, 자녀가 가져다주는 행복, 경제적 및 재정적 안정, 사회적 규범, 개인 및 의료 상태,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 및 가족 정책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 결과, 주거 비용, 가족 정책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측면(예: 육아휴직, 유아교육 및 보육(ECFC), 재정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OECD 분석의 증거를 제시하고 논의합니다. 또한 출산율의 동인에 대한 국제 문헌의 증거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가 간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비교합니다. 2장에서는 독자들이 OECD 사회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3장은 사회적·경제적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2022 *OECD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사회*는 이전 판과 마찬가지로 4~8장에 각각 5개씩 총 25개의 사회지표를 일반, 자활(self-sufficiency), 형평성(equity), 보건,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영역에 걸쳐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윌렘 아데마(프로젝트 리더 및 제1장)와 막심 라다이크가 작성했으며, OECD 사회정책국의 로렌츠 베르트쉬, 줄리아 코츠-카펠, 요나스 플루흐트만, 파블로 미논도 칸도, 알리시아 타케우치가 기여했습니다. 초기 초안에 대한 OECD 고용노동사회국(ELS)과 OECD WISE 센터의 동료들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4년 4월 초안에 대해 의견을 주신 고용노동사회위원회와 사회정책작업반 대표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ELS 이사)와 마크 피어슨(ELS 부이사)의 지휘 아래 모니카 콰이서(ELS 수석 카운슬러 겸 사회정책 부문 책임자)가 이 프로젝트를 감독했습니다.

목차

서문	3
약어 및 관용기호	7
개요 요약	9
1 OECD 국가별 출산율 추이: 근본적인 동인과 정책의 역할	13
서론 및 주요 결과	14
주요 조사 결과	14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더 적은 수의 출생과 늦은 출생	15
가족 형성과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22
가족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	28
주거비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33
태도와 규범의 변화는 출산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34
정책 고려사항	36
참고문헌	37
참고 사항	46
2 OECD 사회지표 해석	47
한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48
지표의 선정과 설명	48
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51
참고문헌	51
3 사회적 위험과 정부 효과성에 대한 인식	53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우려	54
사회 정책 및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만족도	56
정부 개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도	58
4 일반 지표	61
가구소득	62
출산율	64
이민	66
결혼과 이혼	68
인구 추이	70

5 자활 지표	73
고용	74
실업률	76
기술	78
학생의 학업성취도	80
은퇴 후 기대여명	82
6 형평성 지표	85
소득 및 자산 불평등	86
소득 빈곤	88
실업 및 사회 안전망 혜택	90
사회 지출	92
구매 가능한 주택	94
7 보건 지표	97
기대여명	98
자살	100
보건 지출	102
보건 및 의료 인력	104
흡연 및 음주	106
8 사회 통합 지표	109
삶의 만족도	110
기관에 대한 신뢰	112
여성에 대한 폭력	114
투표	116
온라인 활동	118

OECD 간행물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https://twitter.com/OECD>



<https://www.facebook.com/theOECD>



<https://www.linkedin.com/company/organisation-eco-cooperation-development-organisation-cooperation-developpement-eco/>



<https://www.youtube.com/user/OECDiLibrary>



<https://www.oecd.org/newsletters/>

이 보고서에는...

StatLinks 

인쇄된 페이지의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 책에 포함된 표나 그래프 하단에 있는 **StatLink**  를 확인하세요. 인터넷 브라우저에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링크를 입력하거나 전자책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약어 및 관용기호

OECD 회원국 ISO 코드

호주	AUS	일본	JPN
오스트리아	AUT	한국	KOR
벨기에	BEL	라트비아	LVA
캐나다	CAN	리투아니아	LTU
칠레	CHL	룩셈부르크	LUX
콜롬비아	COL	멕시코	MEX
체코	CZE	네덜란드	NLD
코스타리카	CRI	뉴질랜드	NZL
덴마크	DNK	노르웨이	NOR
에스토니아	EST	폴란드	POL
핀란드	FIN	포르투갈	PRT
프랑스	FRA	슬로바키아	SVK
독일	DEU	슬로베니아	SVN
그리스	GRC	스페인	ESP
헝가리	HUN	스웨덴	SWE
아이슬란드	ISL	스위스	CHE
아일랜드	IRL	튀르키예	TUR
이스라엘	ISR	영국	GBR
이탈리아	ITA	미국	USA

기타 가입, 주요 경제국 및 G20 국가 ISO 코드

아르헨티나	ARG	인도	IND
브라질	BRA	인도네시아	IDN
불가리아	BGR	페루	PER
크로아티아	HRV	루마니아	ROU
중국	CHN	사우디아라비아	SAU
홍콩, 중국	HKG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마카오, 중국	MAC		

관례적 표시

.. 자료 없음.

그림에서 OECD는 입수 가능한 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들의 비가중평균을 의미합니다.

범례의(\\) / (/)는 국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소/증가하는 순서로 순위가 매겨지는 변수를 나타냅니다.

개요 요약

OECD 회원국은 합계출산율(TFR)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감소세가 멈췄지만 2007~08년 금융 위기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5명으로 '대체 수준'인 여성 1인당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OECD 회원국 중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이스라엘이 2.9명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와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 1인당 1.8명.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여성 1인당 1.2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한국은 2023년 여성 1인당 0.7명으로 추정됩니다. TFR의 감소는 산모의 첫 자녀 출산 연령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OECD 평균 2000년 26.5세에서 2022년 29.5세로 높아졌다.

OECD 전체에서 자녀를 갖지 않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강도는 다양합니다. 1935년과 1975년 출생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OECD 회원국 7개국에서 영구 무자녀 발생률이 최소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975년 코호트 여성의 23%와 24%가, 일본에서는 1975년 코호트 여성의 28%가 각각 영구 무자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고려사항은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소득, 부모가 소득을 나누는 방식, 보육 및 주거 비용과 같은 주요 경제 변수는 모두 자녀를 가질지 여부, 자녀를 가질 시기, 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드는 직간접적인 비용의 증가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젊은 층의 자녀 출산에 대한 선호도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 참여가 강화되면서** 자녀를 더 많이 낳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여성이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부는(더 많은) 자녀를 선택해 노동력 참여를 제한하고, 일부는 유급 노동을 선택하고 자녀 수를 줄이거나 아예 낳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면 이는 더 나은 경제적 성과와 더 높은 출산율로 이어집니다. 이는 과거에는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여성 고용률이 이제는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은 부모의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헝가리,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규정과 유아교육 및 보육(ECEC)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GDP의 약 3% 이상을 가족 혜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상당수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과 가족 정책만으로는 이들 국가의 출산율 감소와 국가 간 편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거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자녀를(더 많이) 낳는 데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주거 비용의 증가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사교육비 역시 한국처럼 자녀를(더 많이) 낳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OECD 전체 회귀 분석 결과, TFR, 남녀 고용, 육아휴직 및 ECEC에 대한 공공 지출, 그리고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 사이에는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귀 분석에서는 TFR과 주거비,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업률 사이에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추세 변화의 대부분은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는 불안감, 사회적 태도 및 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기후 문제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글로벌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확산되고 노동시장과 주거 불안이 증가하여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는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가 아닌 삶에서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찾고 있으며,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증가했으며, 자녀를 낳는 데 드는 비용과 혜택(재정적, 비재정적)의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보다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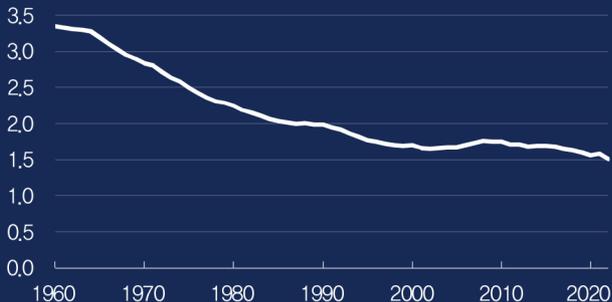
출산율을 걱정하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일과 육아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 가족 정책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녀 양육비, 특히 주거비에 더 중점을 두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으로 국가가 다시 대체 출산율에 근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정책**이 “저출산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출산율 증가는 20년 후 노동 연령 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뿐입니다. 가족 정책과 이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정책에는 이민, 더 많은 소외 계층의 노동력 유입, 잠재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노동력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1. 주요 통계

최근 수십 년 동안 출산율 급감

여성 1인당 자녀 수, 1960~2022년, OECD 평균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960년 여성 1인당 3.3명이 넘었던 것이 2022년에는 1.5명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의 출산율 감소

여성 1인당 자녀 수



많은 국가에서 200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2007~08년 금융 위기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전 대비 고령출산(노산) 증가

첫 출산시 산모의 평균 연령 OECD 평균



2000년 26세였던 첫 출산 평균 연령이 2022년에는 29세로 높아지는 등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무자녀 가정 증가

영구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 비율



1935년과 1975년에 태어난 여성의 출산율을 비교하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무자녀가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출산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성과 여성 모두의 고용률

긍정적인 영향



공공 가족 혜택



실업률

부정적인 영향



주택 비용

젊은 세대의 낮은 경제적 독립 비율

부모와 함께 사는 20~29세 청년의 비율, OECD 평균



1935년과 1975년에 태어난 여성의 출산율을 비교하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무자녀가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 OECD 국가별 출산율 추이: 근본적인 동인과 정책의 역할

서론 및 주요 결과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지난 수년간 출산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1960년 여성 1인당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OECD 평균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이하 TFR)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사회, 지역사회, 가족의 모습을 바꾸고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왜 성인이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지, 그리고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경제적 및 재정적 안정, 자녀 양육 비용, 사회적 규범, 개인 및 건강 상태,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과 가족 정책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요인 중 많은 부분이 변화하여 자녀 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변화로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효과적인 피임 수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맞벌이 가구의 증가, 부모가 일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돕는 공공 정책(유급 휴가 및 공적 유아 교육 및 보육(ECEC) 서비스 등)의 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이은 글로벌 위기로 인해 특히 젊은 층의 경제, 노동시장 및 주거 불안이 증가하여 부모가 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출산율 변화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양성평등과 함께 부모가 개별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집중적인 양육 규범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아버지가 부모의 역할에 따른(기회) 비용에 노출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 역할 이외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경력 제고와 자아실현(즉, 개인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심리적 발달(Maslow, 1943^{[11])})을 포함한 다른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녀를 갖는 것을 더 자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출산율의 근본적인 동인에 대한 국제 문헌의 증거를 종합하고, 노동시장 결과, 가계 예산의 변화, 가족 정책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측면들이 출산율과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평균 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OECD 분석 결과를 제시합니다(Fluchtmann, van Veen and Adema, 2023^[2]). 이 장은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

주요 조사 결과

OECD 회원국은 196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TFR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일시적으로 감소세가 멈췄지만 2007~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22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불과해 '대체 수준'인 여성 1인당 2.1명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2022년 OECD 회원국 중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이스라엘이 2.9명으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와 프랑스가 1.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여성 1인당 1.2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한국은 2023년 여성 1인당 0.7명으로 추정됩니다. 출산 연령은 점점 늦어져 2021년 평균 출산 연령은 30.9세로 2000년 28.5세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가족 계획의 자율성과 주체성의 증가는 196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와 출산 시 산모의 연령 증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가족 형성과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변화시킨 주요 사회 및 경제적 발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OECD 전역에서 무자녀가 증가하는 추세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강도는 다양합니다. 1935년과 1975년에 태어난 여성의 코호트 출산율을 비교하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영구 무자녀 발생률이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975년 코호트 여성 4명 중 1명이 거의 무자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28%입니다.
- OECD 평균적으로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순위에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안정성은 중요한 국가별 차이를 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에서는 3순위 이상의 출생 비율이 5% 포인트 이상 증가하여 20%를 넘었습니다. 반면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25%와 14%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대부분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자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고려사항이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베커(Becker)의 획기적인 연구(seminal work)(1960^[3]) 이후 많은 연구에서 가구소득, 부모에게 분배되는 방식, 보육 및 주거 비용과 같은 주요 경제적 변수가 사람들이 자녀를 가질지, 언제, 얼마나 많은 자녀를 가질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출산율에 대한 베커의 경제적 접근법도 "...소득의 증가 또는 자녀 비용의 감소는 자녀의 양과 질(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둘 다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결국 자녀 비용의 증가는 출산율 하락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며 광범위한 근본적인 "비용 요인"은 무엇입니까?
- 그 해답의 일부는 사회의 성 역할 변화에 있습니다. 1960년만 해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3.3명이었고,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더 많이 낳는 데 드는 기회비용이 높아졌습니다(OECD, 2023^[4]). 여성이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부는(더 많은) 자녀를 선택하고 노동력 참여를 제한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유급 육아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합니다.
- 그러나 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고 동등하게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는 더 나은 경제적 성과와 더 높은 출산율로 이어집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강조는 가족 내 성 역할 변화에 기여했으며, 평균적으로 이전보다 맞벌이 가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여성 고용률이 현재 OECD 평균적으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가족 소득을 유지하여 출산율을 지지한다는 이론에 따라 정책은 부모의 일과 가족에 대한 헌신 간의 조정을 지원하는 데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Becker, 1960^[3]). 예를 들어, OECD 회원국 중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출산/육아휴직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은 다양한 수준으로 유아 및 보육(ECEC)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헝가리, 북유럽 국가와 같이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국가는 GDP의 약 3% 이상을 가족 복지에 지출합니다. 가장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조항과 ECEC 시스템이 잘 연계되어 있어 취학 전 시기에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2022/23년에는 이러한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 또한 TFR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헝가리에서는 지난 10년 간 가족 혜택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TFR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과 가족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의 국가 간 편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자녀에 대한 다른 직접적인 비용도 중요합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거비 증가가 상당히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우려가 자녀를(더 많이) 낳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OECD, 2023^[6]). 사교육비 역시 한국처럼 자녀를(더 많이) 낳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이러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OECD 전체 회귀 분석 결과, TFR, 남녀 고용, 육아휴직 및 ECEC에 대한 공공 지출,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 사이에는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반면, 그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귀 분석에서는 TFR과 주거비,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업률 사이에는 분명한 음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추세 변화의 대부분은 이러한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는 인지된 불안감과 사회적 태도 및 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기후 문제 심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등 글로벌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확산되어 일부 잠재적 부모는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출산을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근 몇 년 동안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가 아닌 삶에서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찾고 있으며,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평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자녀를 낳는 데 드는 비용과 혜택(재정적, 비재정적)의 균형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보다 자녀를 적게, 혹은 아예 낳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가족 정책에 대한 친출산주의(pro-natalist)적 입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에 대한 우려는 일본, 헝가리, 한국에서 가족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인구 추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책 개발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일과 육아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 가족 정책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녀 양육비, 특히 주택 비용에 더 중점을 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으로 국가가 대체 출산율에 다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출산율 증가는 20년 후 노동 연령 인구 증가로 이어질 뿐이므로 '저출산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가족 정책과 이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정책에는 이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더 많은 소외 계층의 노동력 유입, 잠재적 노동력 감소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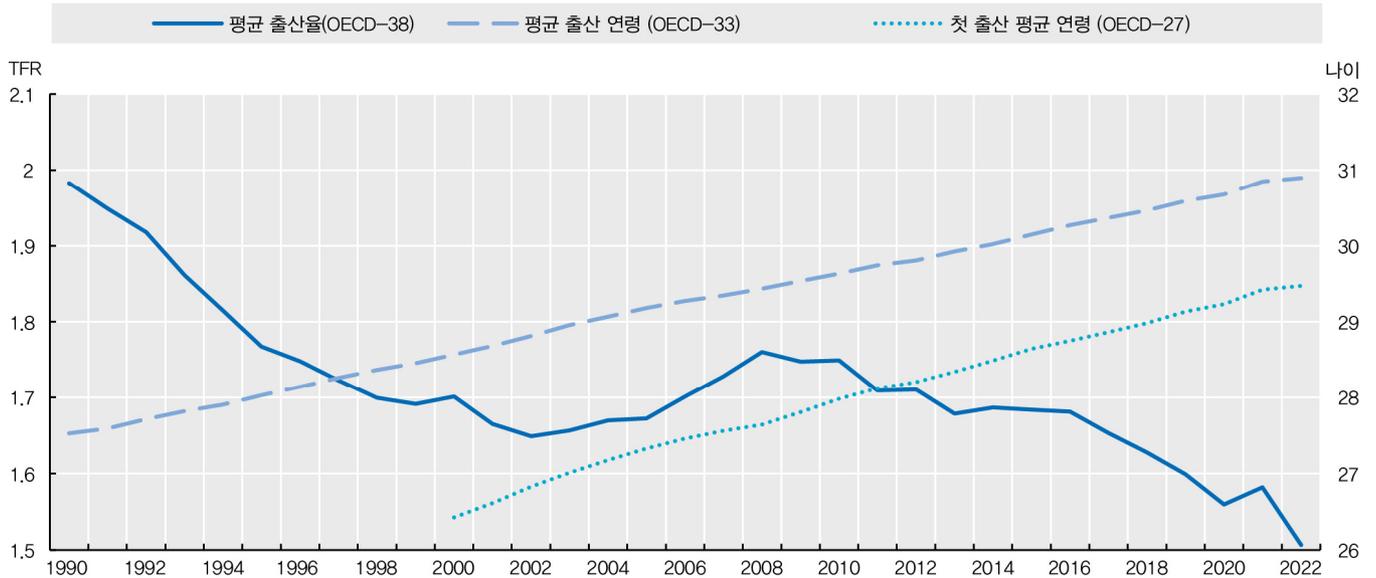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더 적은 수의 출생과 늦은 출생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여전히 높고 대체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예상되는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2023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부상한 인도(UN DESA, 2023^[6]),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등 단 8개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2100년까지 계속 성장하여 2050년까지 예상되는 전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 들조차도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21세기에는 대체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UN DESA Population Division, 2022^[7]). 가장 최근의 세계 출산율 전망에 따르면 세계 합계출산율은 2022년 2.21명에서 2050년 1.83명, 2100년 1.59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hattacharjee et al., 2024^[8]). 자녀를 적게 낳는 장기적인 추세는 경제 발전, 생식 보건의 눈에 띄는 개선, 여성의 경제 및 사회적 권한 부여를 반영합니다(Skirbekk, 2022^[9]).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TFR - 정의는 그림 1.1의 주석 참조)은 이미 오랫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 1990년에는 여성 1인 당 2명을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이주가 없을 경우 인구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체 수준인 2.1명에 비교적 근접해 있었습니다(그림 1.1).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2년에는 여성 1명당 1.6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첫 출산 연기로 인해 발생했으며, 2000년대에는 출산율이 반등하여 2008년에 1.76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Burkimsher, 2015^[10]; Beaujouan and Berghammer, 2019^[11]). 그 후 몇 년 동안 TFR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1.5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산모가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은 2000년 28.5세에서 2022년 OECD 평균 31세로 증가했습니다.

그림 1.1. 출생아 수 감소와 늦은 출생의 동시 추세

합계출산율(왼쪽 세로축)과 (첫)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오른쪽 세로축), 1990년 또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평균



주: 특정 연도의 합계 출산율은 각 여성이 가임기까지 생존하여 일반적인 연령별 출산율에 따라 자녀를 출산할 경우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자녀 수로 정의됩니다. 합계출산율은 5년 간격으로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OECD 평균은 가중치가 없는 평균입니다. 합계출산율 자료의 OECD 평균은 OECD 회원국 38개국을 모두 포함합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에 대한 OECD 평균은 프랑스, 독일, 한국, 라트비아, 터키를 제외합니다. 첫 출산 시 산모의 평균 연령에 대한 OECD 평균에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OECD (2024_[12]), Indicators SF2.1 and SF2.3,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vxdl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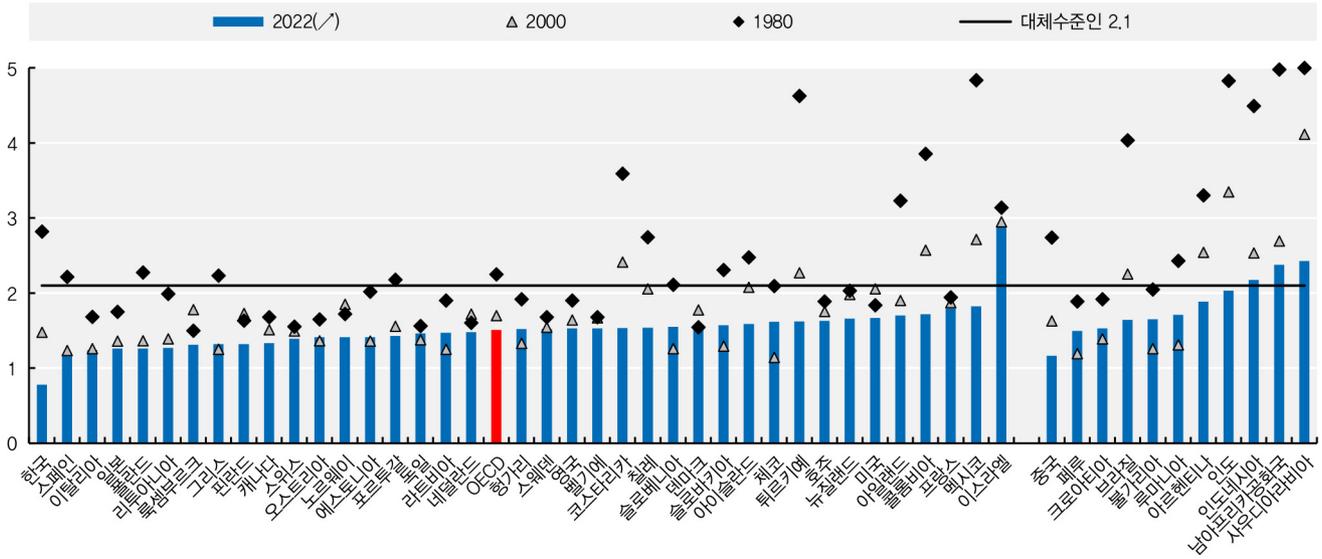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별로 출생률과 출산율(births and fertility rates)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그 영향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2019년과 2020년(팬데믹이 시작된 해)에는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했고, 2021년에는 2020년 비교 기준이 다소 낮긴 하지만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OECD (2024_[12]), 지표 SF2.1).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의 봉쇄 조치로 2021년 초 많은 유럽 국가에서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2021년 1분기 말에는 출산율이 빠르게 반등했습니다(Pomar et al., 2022_[13]).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미국은 2021년에 합계출산율이 증가했습니다(Bailey, Currie and Schwandt, 2022_[14]; Lappegård et al., 2022_[15]). 대부분 OECD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보트카 등(2023_[16])은 이러한 패턴을 확인했지만, 팬데믹 조치가 대부분 완화되고 백신접종이 추진력을 얻고 있던 2021년 봄에 예기치 않게 2022년 1월에 출생이 다시 감소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이는 백신 접종 캠페인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이 연기되고, 일반적인 직장 복귀와 팬데믹 이전의 출산율 행동(Sobotka et al., 2023_[16]) 때문일 수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TFR 추세의 구체적인 궤적은 국가마다 현저하게 다르며,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훨씬 먼저 대부분이 감소를 경험했습니다(그림 1.2). 1980~2000년 기간 동안 6개 OECD 회원국에서, 2000~22년 기간 동안 5개 국가에서 TFR이 증가했지만, 1980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는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TFR이 하락했습니다.

그림 1.2. 1980년 이후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1980년, 2000년, 2022년(또는 최근 연도)의 합계출산율



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영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대신 2021년으로 그림 1.1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세요.

출처: OECD(2024_[12]), Indicator SF2.1,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ofa9z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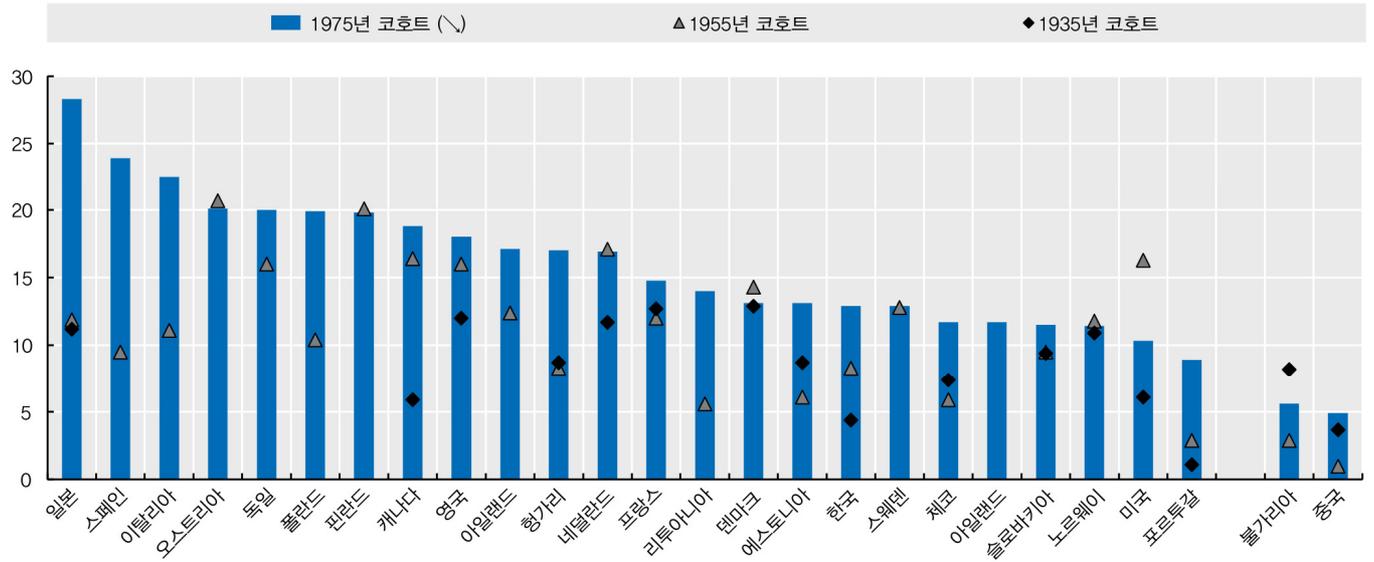
1980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등 5개국은 여성 1인당 3명을 훨씬 상회하던 수준에서 1.5명 이상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레디(초정통파) 인구 집단 중 여성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추세를 깨고 있습니다(OECD, 2010_[17]; Weinreb, 2023_[18]).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바키아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초기에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가 완만하게 회복되어 2022년에는 2000년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자녀와 자녀의 출생 순서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이 자녀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OECD 전역에서 무자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시기와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그림 1.3).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1935년에서 1955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 코호트에서 영구적 무자녀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1955년과 1975년(2024년 49세 여성) 코호트 사이에 변화가 더 최근에 발생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에서는 1975년 출생 여성의 28%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1975년에 태어난 여성 중 20~24%가 무자녀인 반면, 다른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10~20%에 불과합니다(그림 1.3). 코호트 출산율 자료를 통해서는 확실한 무자녀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녀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특히 유럽과 미국 고학력 여성의 경우 실제와 의도된 자녀 없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Beaujouan and Berghammer, 2019_[11]; Tanturri et al., 2015_[19]).

그림 1.3. 많은 국가에서 젊은 여성 집단에서 무자녀 출산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1935년, 1955년, 1975년에 태어난 여성 중 영구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성의 비율



1. 중국의 경우 코호트 1935는 1931~35년 출생 여성을, 코호트 1955는 1951~55년 출생 여성을 의미하며, 이 자료는 1995년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코호트 1970은 2015년 데이터 세트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중국은 0으로 끝나는 해에는 10년 주기의 인구 총 조사를, 5로 끝나는 해에는 1년 주기의 인구 표본 조사("마이크로 센서스"라고도 함)를 실시합니다.
2. 1975년 코호트 자료의 경우, 한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1970년 코호트, 독일(동독과 서독 모두)은 1975~77년 출생 여성, 이탈리아는 1978년 코호트 자료를 사용합니다. 프랑스의 1975년 코호트 자료는 쿠펜, 마주이, 툴레몬(2017^[20])을 참조하세요.
3. 1955년 코호트 자료: 이탈리아의 경우 1950년 코호트, 프랑스의 경우 1951~55년 출생 여성, 독일의 경우 1954~56년 출생 여성(동독과 서독 모두), 폴란드의 경우 1956년 코호트, 스페인의 경우 1960년, 핀란드의 경우 1967년, 슬로베니아의 경우 1968년, 오스트리아의 경우 1969년 자료에 관한 자료입니다.
4. 1935년 코호트 자료: 프랑스의 경우 1931~35년, 헝가리는 1937년, 에스토니아는 1944년, 노르웨이는 1952년, 덴마크는 1953년, 일본은 1953년에 태어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입니다.
5.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기혼 여성에게만 자녀 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외 출산이 흔하지 않습니다.

출처: Human Fertility Databas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 Destatis (Germany), Statistics Korea, the "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and Köppen, Mazuy and Toulemon (2017^[20]), "Demographic Research Monographs,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www.doi.org/10.1007/978-3-319-44667-7_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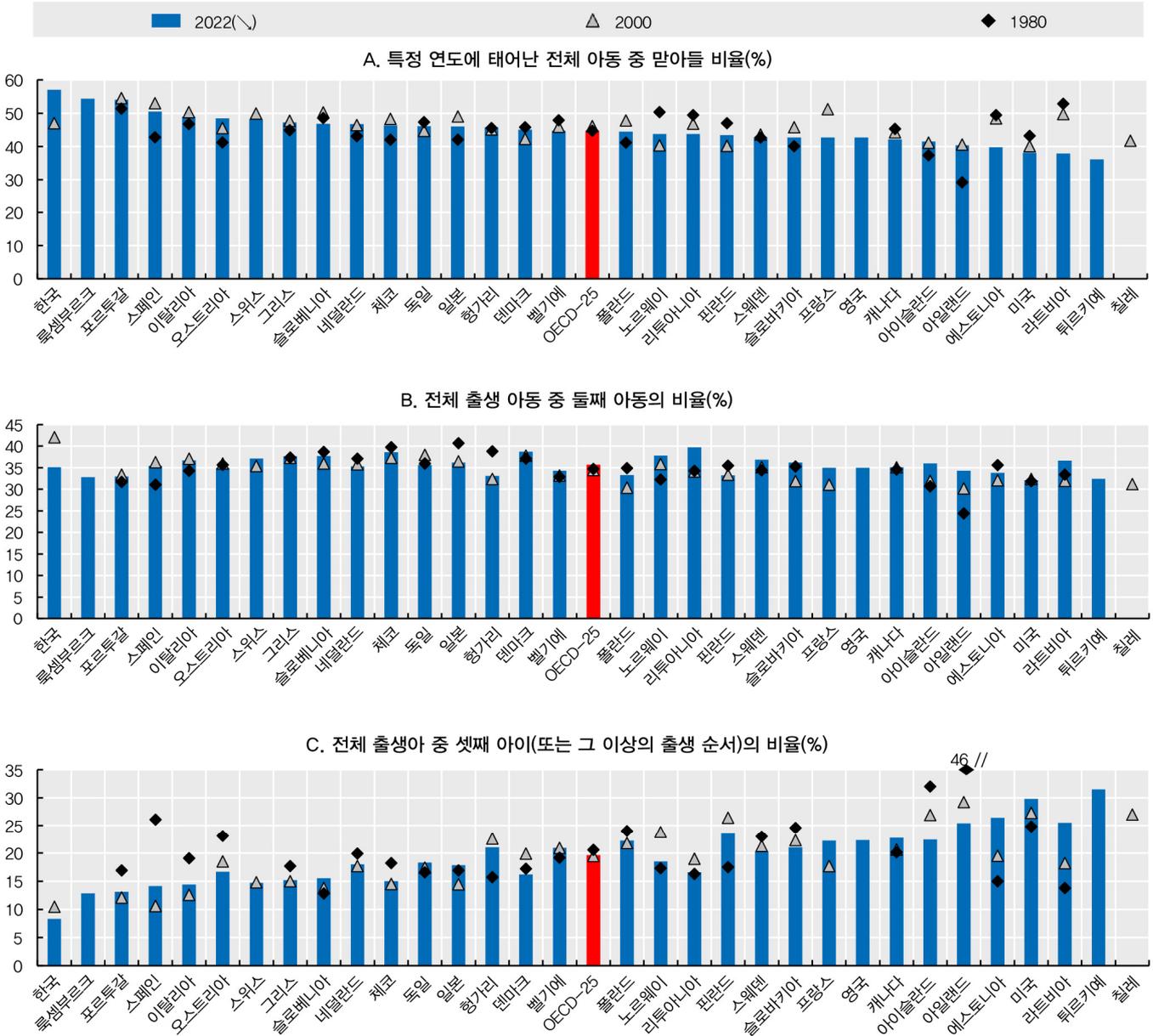
StatLinks <https://stat.link/mvkw3b>

OECD 평균적으로 출생 순서에 따른 자녀 수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습니다(그림 1.4). 특정 연도에 태어난 자녀 중 첫째 자녀의 비중은 약 45%, 둘째 자녀의 비중은 약 35%,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은 약 20%입니다. 출생아 중 첫째 아이 비중은 1980년과 2022년 OECD 평균이 동일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둘째 자녀의 평균 비중은 상승한 반면,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안정성은 '출산율 역학(fertility dynamics)'에서 중요한 국가별 차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에서는 셋째 이상 출생 비율이 20% 이상으로 5% 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25%와 14%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는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이 15% 미만인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OECD 평균 출생아 수 추이는 '출산율 역학'에서 중요한 국가별 차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1.3은 1975년에 태어난 여성 중 무자녀 비율이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일본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림 1.4는 한국의 셋째 이상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첫째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 여성이 출산을 결심하면 한국 여성보다 2~3명(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일본의 합계출산율(2021년 여성 1인당 1.3명)이 한국(2021년 0.8명)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1.4. 한국은 첫째 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고 둘째 자녀의 비중은 가장 낮습니다.

선택한 연도, 1980년, 2000년, 2022년의 출생 순서



- 2022년 자료는 영국의 경우 2018년, 캐나다의 경우 2019년, 한국의 경우 2020년, 독일, 일본, 리투아니아, 터키, 미국의 경우 2021년에 해당합니다.
- 2000년 자료는 프랑스의 경우 1999년, 이탈리아의 경우 1997년, 몰타의 경우 2005년, 스위스의 경우 2006년에 해당합니다.
- 1980년 자료는 크로아티아의 경우 1992년, 독일, 포르투갈, 스웨덴의 경우 1990년에 해당합니다.
- OECD-25는 3년 동안의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OECD 회원국의 평균입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및 미국입니다.

출처: Eurostat and the Human Fertility Database.

StatLinks <https://stat.link/kf84v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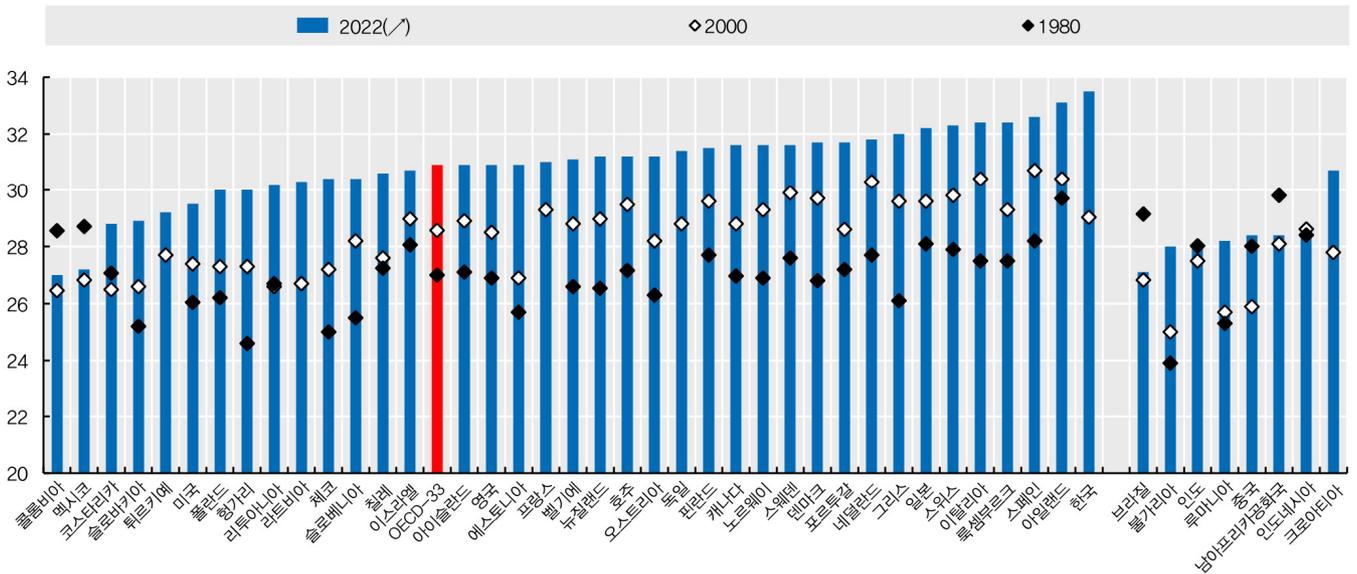
여성이 출산하는 평균 연령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감소한 반면, 여성이 출산하는 평균 연령은 증가했으며 30세 이상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증가했습니다 (이 책의 일반적 맥락 섹션(General context section)에서 출산율 지표 참조). OECD 전체에서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80년 27세에서 2000년 28.6세, 2022년 30.9세로 증가했습니다(그림 1.5).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높은 10대 출산율로 인해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 유일한 예외였으며(OECD(2024_[12]), SF2.3 출산 시 산모 연령 및 연령별 출산율 참조), 이 두 국가에서는 20~24세 산모에게서 가장 많은 자녀가 태어났습니다(DANE, 2023_[21]; INEGI, 2023_[22]).

지난 20년간 OECD 평균적으로 여성이 첫 출산을 하는 연령은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28.5세에서 30.8세로, 같은 기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7.4세에서 31.5세로 증가했습니다(이 책의 4장 출산율 지표 참조). 첫 결혼 평균 연령이 첫 출산 평균 연령보다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2020년 출생아 중 40% 이상이 혼외 출생아이며,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4개국에서는 그해 출생아 중 혼외 출생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OECD(2024_[12]), SF2.4 혼외 출생 비중 참조). 2020년 혼외 출생 비중이 3% 미만인 한국, 일본, 터키의 출산율은 여전히 결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90년 인구 1,000명당 9.3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한국의 혼인율(이 책의 4장 참조)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그림 1.5. 지난 40년 동안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4세 증가했습니다.

여성들이 출산하는 평균 연령, 1980, 2000 및 2022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1. 영국에 대한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만 참조합니다.
2. OECD-33 평균은 1980년, 2000년, 2022년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3. 대체 연도: 영국은 2022년 대신 2021년, 브라질과 인도는 2022년 대신 2017년, 중국은 2021년 대신 2016년, 인도네시아는 2022년 대신 2014년, 남아공은 2011년, 크로아티아는 2000년 대신 2001년, 남아공은 2002년, 폴란드 1990년, 슬로베니아 1982년, 남아공은 1980년 대신 1981년으로 변경됩니다.

출처: OECD (2024_[12]),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Indicators SF2.1 and SF2.3,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based on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product/view/DEMO_FIND,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tatLinks <https://stat.link/163n2d>

이 기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그리스에서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이 5세 이상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OECD 전체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는 33세 이상인 한국입니다. 최근 OECD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는 머지않은 미래에 2000년대와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 반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OECD 전반의 출산 연기 추세는 잠재적으로 전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녀를 갖기를 더 오래 기다림에 따라 가족 형태가 생식력 문제, 즉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원하는 출산율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생식 의학의 발전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여성들이 고령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박스 1.1).

박스 1.1. 생식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적으로 더 많은 출산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 연기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남성과 여성은 의도한 자녀 수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첫 번째 출산보다 두 번째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늦게 가족을 이루면 나이가 들면서 임신 관련 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Bhasin et al., 2019^[23]). 불임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여성이 주로 불임의 낙인을 찍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의 불임에 동등하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Turner et al., 2020^[24]). 정자 수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감소하고 고환암과 사춘기 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Skakkebaek et al., 2019^[25]), 남성 생식 건강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악화되어 왔습니다(Huang et al., 2023^[26]). 그러나 보루만드니아 등(2022^[27])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원발성 남성 불임(primary male infertility)이 감소하고 저소득 국가에서는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문헌에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불임을 가리는 고소득 국가의 TFR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불임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식이 부족과 환경 및 작업 관련 독성 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임법, 출산율 치료, 보조 생식 기술(ART)을 포함한 의학의 발전은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과거에 비해 출산 선택에 대한 통제권을 평균적으로 더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율성의 증가는 특히 계획되지 않은 출산이 감소하고 청소년 임신이 감소하는 등 출산율 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Tridenti and Vezzani, 2022^[28]; Lindberg, Santelli, Desai, 2018^[29]).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출산율 감소의 3분의 1 이상이 특히 젊은 여성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Buckles, Guldi and Schmidt, 2019^[30]). 동시에, 출산율 치료와 ART의 존재는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갖는 선택을 연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ART가 젊은 여성의 결혼을 늦추고 여성의 출산 연령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Gershoni and Low, 2021^[31]).

반면에 불임 치료와 ART는 불임 문제에 노출된 부부에게(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ART가 포함된 출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Doepke et al., 2022^[32]), 2019년에는 ART 선도 국가인 덴마크에서 전체 출생의 9.2%를 차지했습니다(Sundhedsdatastyrelsen, 2021^[33]).

인구 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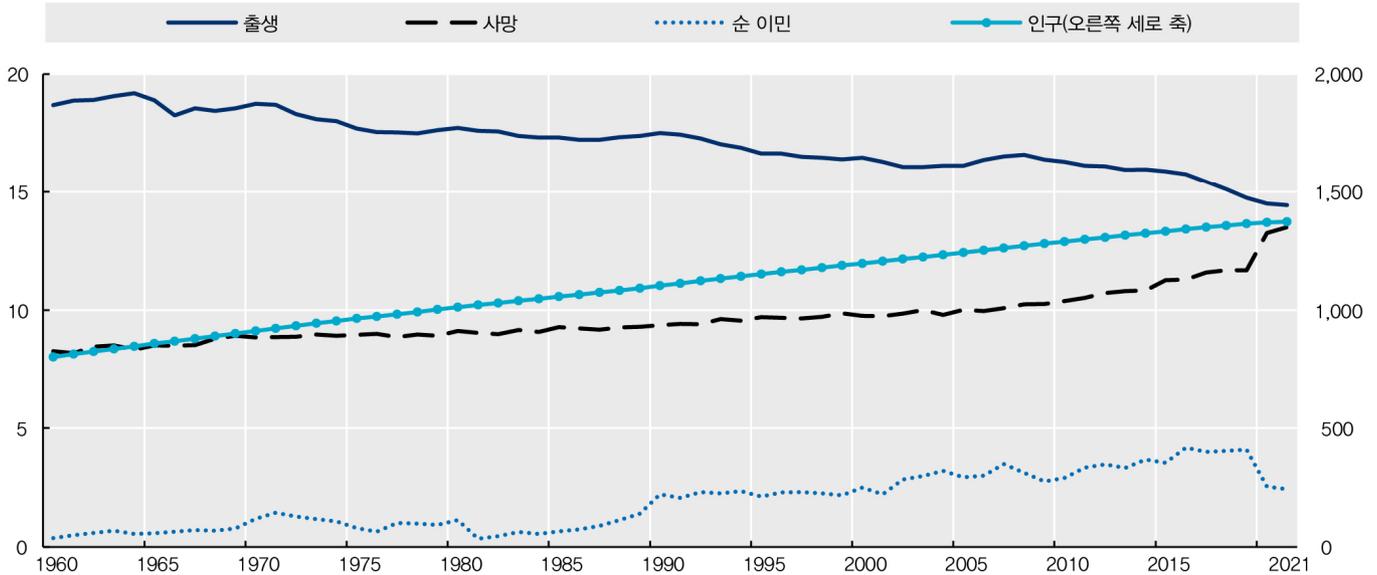
지난 몇 년 동안 출산율 감소로 인해 OECD 전체에서 연간 출생아 수가 감소했습니다(그림 1.6). 동시에 연간 사망자 수는 증가했지만, 기대여명 증가로 인해 그 증가세는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2021년에는 OECD 전체 사망자 수(2021년 1,350만 명)가 출생자 수(1,44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유엔 인구 전망(중간 변형)에 따르면 2035년경에는 OECD 전체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UN DESA Population Division, 2022^[7]).

코로나19로 인해 순 이민은 감소했지만, 2021년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외하더라도 OECD에서 이민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민의 전체 출산율에 대한 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많은 이주민이 가임기에 OECD 회원국에 도착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출신 국가에서 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주민과 원주민의 출산율 패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세대에 걸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자세한 논의는 OECD (2023^[34]) 참조).

최근 세계 출산율 전망에 따르면 세계 합계출산율은 2022년 2.21명에서 2050년 1.83명, 2100년 1.59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hattacharjee et al., 2024^[8]). OECD 전체의 인구 증가는 향후에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상당히 광범위한 정책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박스 1.2).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심각한 인구 감소를 기록한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이 있습니다(OECD 인구 자료).

그림 1.6. 2021년 OECD 전체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에 근접했습니다.

출생, 사망, 순 이민 및 인구, 1960~2021년, OECD 합계, 백만 명 단위



주: 순 이민은 이민을 온 사람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수치입니다. 여기서 이민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일반적인 거주지 변경으로 정의됩니다.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22 Revisions.

StatLinks <https://stat.link/t3jsrz>

박스 1.2.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광범위한 정책적 영향

출산율과 출생아의 감소 추세는 기대여명 증가와 일치합니다(OECD, 2023^[35]).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련 개인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저출산율과 맞물려 향후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OECD(2023^[36]) 및 UN DESA 인구 부문(2022^[7]) 및 이 책의 일반적 맥락 섹션(General context section) 참조).

인구 고령화는 연금, 보건 서비스, 노인 서비스 등 정부 지출 증가와 함께 노동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공공 수입 감소로 재정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Guillemette and Turner, 2021^[37]; OECD, 2023^[36]; Rouzet et al., 2019^[38]).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예: 근로자 고용률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에서 노동연령 인구의 감소는 향후 30년간 OECD 지역의 1인당 소득에서 약 8%, 즉 연간 1인당 성장률에서 1/4%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André, Gal and Schieff, forthcoming^[39]).

노동 연령 인구의 상대적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민의 여지가 더 많아지고(OECD, 2023^[34]) 여성의 노동력 통합이 더 잘 이루어질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Fluchtmann, Keese and Adema, 2024^[40]). 젊은 남녀의 학력 향상은 경제 생산성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 여성 고용률 증가, 생산성 향상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경제 생산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OECD, 2017^[41]). 또한, 근로 수명이 연장되면(예: 향후 기대여명 증가와 함께 유효 퇴직 연령을 높이는 것) 연금 시스템이 처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형성과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1960년, 게리 베커는 경제학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최초의 논문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Doepke et al., 2022^[32]). 이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부분의 부모에게 자녀는 정신적 소득 또는 만족의 원천이다”(Becker, 1960^[3]). 베커의 출산율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또한 “... 자녀는 소비재로 간주될 것이며... 소득의 증가 또는 자녀 비용의 감소는 자녀의 양과 질(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둘 다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피임 지식의 증가도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은 감소하는 반면 질은 증가합니다...”(Becker, 1960^[3]).

수년에 걸쳐 피임 사용의 증가는 계획되지 않은 출산 감소와 출산율 감소에 기여했지만(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0^[42]), OECD 평균적으로 교육 성취도, 소득 및 소득은 증가했지만 총 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베커의 접근 방식에 따르면 이는 자녀의 직간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교육비나 주거비와 같은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 시간을 보내는 기회비용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회비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합니다.

Fluchtmann, van Veen, Adema (2023^[2])는 출산을 추세가 남성과 여성의 고용, 공공 출산 정책, 주택 비용, (재정적) 불안감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추세의 변화의 대부분은 설명되지 않았으며, 이는 불안감에 대한 인지 정도와 사회적 태도 및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 사이의 연관성이 변화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평균 학교 교육 기간과 학력은 크게 증가했습니다(Barro and Lee, 2013^[43]; OECD, 2023^[44]).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시기는 국가마다 다름)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출산이 감소하고 공공 및 민간의 일과 삶의 균형 지원이 늘어나면서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효과는 약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OECD 회원국(예: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Jalovaara et al., 2019^[45]; Ciganda, Lorenti, Dommermuth, 2021^[46]). 또한 고학력 여성일수록 둘째 출산으로의 전환이 더 빠른 경우가 많으며, 부부 모두가 고학력인 많은 유럽 국가에서 둘째 및 셋째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Nitsche et al., 2018^[47]). 미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이 고학력 여성의 출산율과 거의 비슷하며 자녀를 갖지 않을 가능성도 거의 비슷합니다(Bar et al., 2018^[48]; Hazan, Weiss and Zoabi, 2021^[49]).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에 따라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효과는 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이 '결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보다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합니다(Trimarchi and van Bavel, 2017^[50]).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 또는 자녀가 없는 상태 사이의 동반자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에 띄게 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Jalovaara et al., 2019^[45]; Chudnovskaya, 20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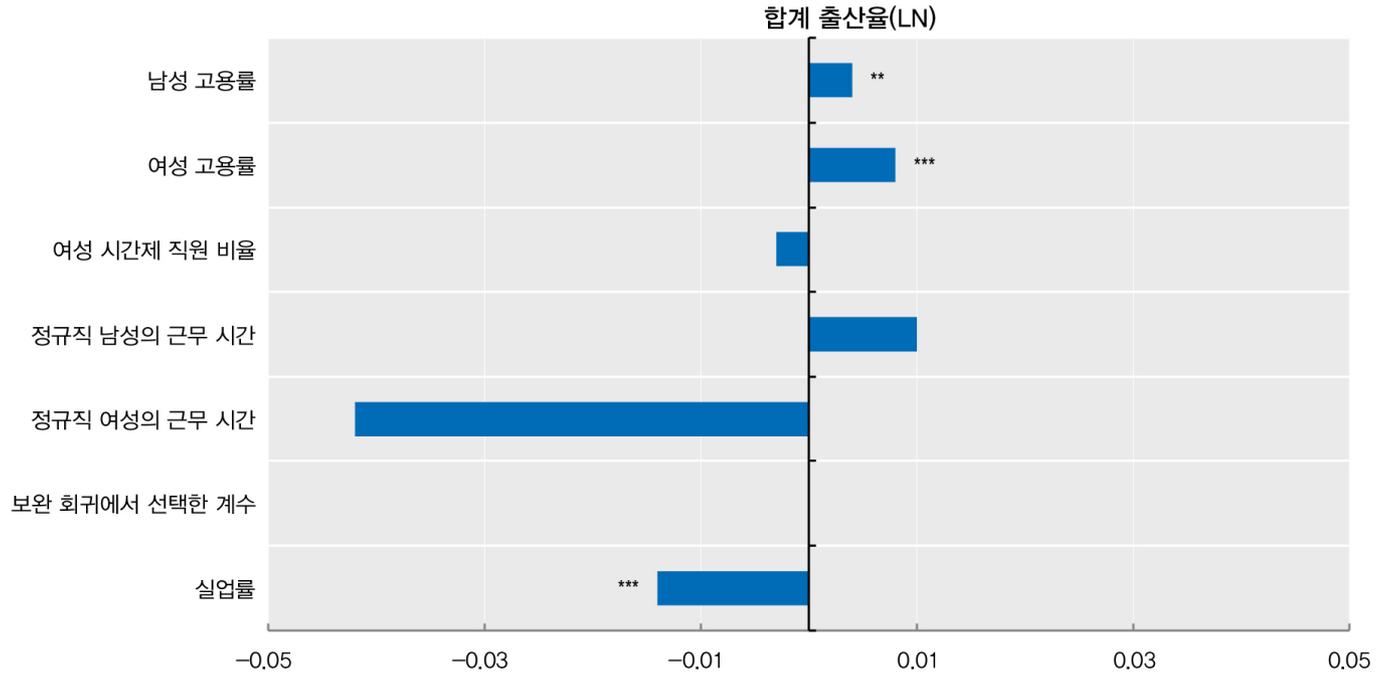
남성과 여성의 고용 모두 TFR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산율 선택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예비)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의 노동시장 상황은 출산율 행동에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이는 성인이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직접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부모가 되면 경력 단절과 노동 시간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기회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Adema, Fluchtmann and Patrini, 2023^[52]). 국가 간 회귀 분석은 개인(또는 부부)의 노동시장 상황이 출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노동시장 여건이 출산율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노동시장 변수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공공 정책 요인보다 출산율 결과의 변화를 더 많이 설명합니다(Fluchtmann, van Veen and Adema, 2023^[2]).

그림 1.7은 남성과 여성의 총고용이 TFR과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는 결과입니다(Adema, Ali and Thévenon, 2014^[53]; Comolli et al., 2021^[54]; Doepke et al., 2022^[32]; Luci-Greulich and Thévenon, 2013^[55]; Oshio, 2019^[56]). 또한 여성 고용률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남성 고용률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여성 고용이 출산율 결과에 특히 중요한 동인임을 시사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Fluchtmann, van Veen and Adema (2023^[2])는 1970년대에는 분명 음의 관계가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여성 고용은 TFR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1.7은 또한 열악한 노동시장 여건이 출산율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업률 증가는 TFR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귀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시간 또는 풀타임 근무시간 및 출산율 간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¹

그림 1.7. 노동시장 성과와 출산율 간의 연관성

클러스터 표준 오차를 사용한 OECD 전체 이원 고정 효과 회귀 분석의 요약 결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참고: 통계적 한계와 상대적으로 작은 표본 규모를 염두에 두고, 결과 추정치는 특정 국가의 결과/정책과 각 출산율 사이의 단순한 연관성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출산율과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분석은 선형 국가 시간 추세와 평균 교육 연도 및 로그 GDP를 통제한 이원 고정 효과 모형입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국가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되었습니다. 표준 오차는 이분산성 및 패널 보정(고정 효과 모형의 경우)입니다. ***, ** 및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냅니다. “...”는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10% 수준 미만)를 나타냅니다. “+”는 유의미한 점의 추정치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는 음의 부호를 나타냅니다.

출처: See Tables 4 and 5 for the main baseline regressions and Annex Tables 5.B.9 and 5.B.10 for the supplementary regression results, in Fluchtmann, J., V. van Veen and W. Adema (2023_[2]), “Fertili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y: A cross-country panel analysis”, www.doi.org/10.1787/326844f0-en.

StatLinks <https://stat.link/8zu7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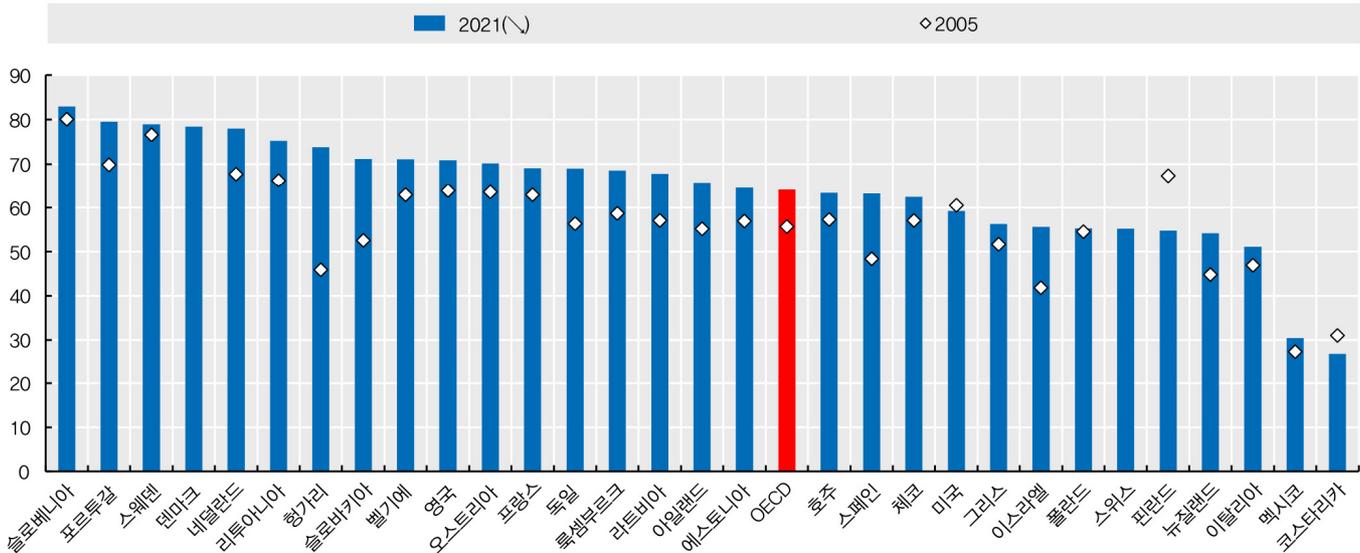
여성 소득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더 높은 임금과 소득은 더 많은 가계 자원과 “자녀에 대한 더 많은 소비”, 즉 더 많은 자녀 또는 자녀당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합니다(Becker, 1960_[3]). 그러나 임금이 높아지면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도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이 출산 후 초기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육아를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소득 여성의 소득 상실 비용이 크다 보니 소득 분포의 상층부에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기회비용이 특히 높습니다(Kleven et al., 2019_[57]; OECD, 2022_[58]). 이러한 출산 기회비용은 1990년 이후 여성들이 고임금 일자리에 더 자주 일하고 저임금 일자리에 더 적게 일함에 따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OECD, 2023_[59]).

여성의 경우, 국제 문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가 오랫동안 일반적이었던 덴마크(Berninger, 2013_[60])와 노르웨이(Hart, 2015_[61])에서 여성의 소득과 출산율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림 1.8).² 그러나 이탈리아,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이 여전히 강하고 여성 소득자는 부모 역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패턴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Alderotti, 2022_[62]). 미국은 1980년대에는 소득-출산율 그래프가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육 및 가사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소득 분포 상단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이 패턴이 평평해졌습니다(Bar et al., 2018_[48]).

그림 1.8.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14세 자녀가 1명 이상인 부부 중 맞벌이(전일제 및 풀타임/파트타임)의 비율



주: 2005년 자료는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의 경우 2006년, 미국의 경우 2007년, 핀란드의 경우 2008년, 호주와 스웨덴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자료는 뉴질랜드와 스웨덴의 경우 2020년, 호주와 영국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OECD (2024_[12]), Indicator LMF2.2,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tpdb82>

직업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직업의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고용은 출산율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와 관련된 1차, 즉 정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집단의 열악한 노동시장 조건은(더 많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Ayllón, 2019_[63]; Seltzer, 2019_[64]; Vignoli, Tocchioni and Mattei, 2020_[65]; Yoo., 2022_[66]). 예를 들어, 알데로티 등(2021_[67])은 임시 고용이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남성의 경우 특히 실업이 출산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했으며, 특히 젊은 근로자에게 실업 위험 증가와 임시직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Chung, Bekker and Houwing, 2012_[68]; Causa, Luu and Abendschein, 2021_[69]).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교육을 떠난 젊은이들을 추적한 네덜란드 등록 자료를 사용한 van Wijk, de Valk, Liefbroer(2022_[70])는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정성이 축적되고 여러 차원(고용, 소득)에서 젊은 남녀의 첫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용 불안의 감소는 출산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스페인의 여러 지방 정부가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을 때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1.43% 증가했으며, 이는 출생아 당 약 19,000유로의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로의 전환에 대한 효과는 남성 직원에게 집중된 반면,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에게 증가했습니다(Nieto, 2022_[71]). 성별 차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정규직 고용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력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나은 경력관리를 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소득 효과와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비용(또는 대체 효과)을 수반합니다. 대체 효과는 특히 여성에게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출산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노동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및 인식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산을 연기하는 가족들

출산율은 어느 정도 경기 사이클의 기복을 따라 움직입니다.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경기 침체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에 대한 증거는 Comolli(2017_[72]), 2011년 국가 부채 위기로 인해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1.5~5% 하락한 결과에 대한 Comolli와 Vignoli(2021_[73])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다른 많은 OECD 회원국의 최근 출산율 감소 시기는 2008-09년에 확산된 금융 위기와의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저출산 현상은 국가별로 경제적 영향보다 더 지속적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의 폭이 상대적으로 얇고 회복이 빨랐던 북유럽 국가에서도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2010년대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경제는 2008-09년 이후 빠르게 반등하여 2010년대 내내 OECD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유지한 반면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OECD, 2023_[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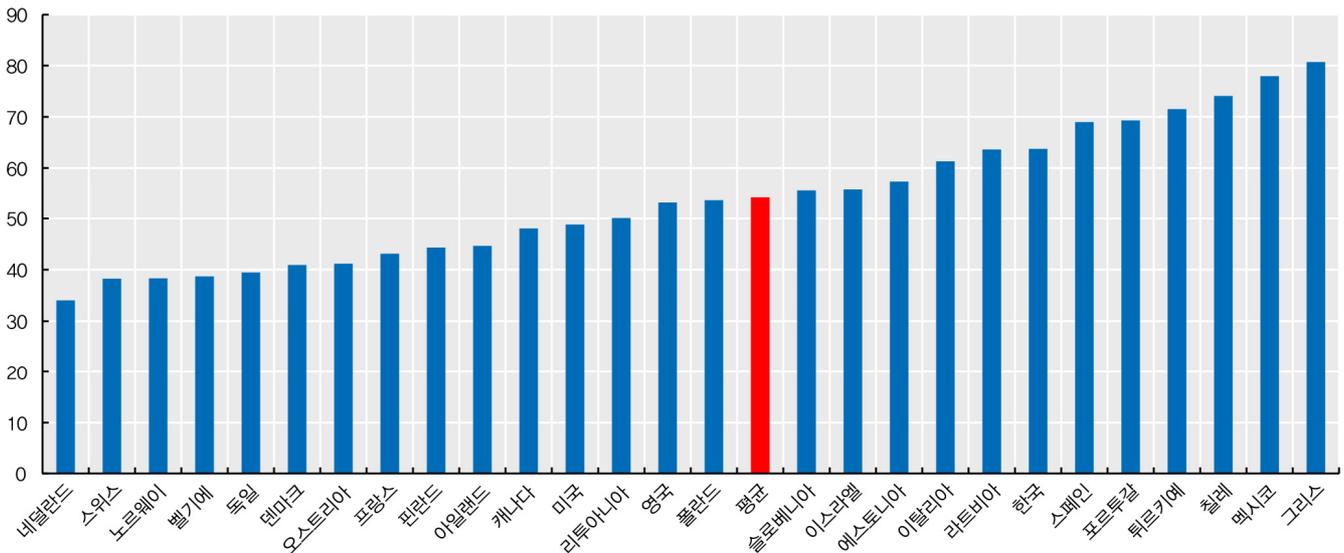
사실, 실제 경제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산율 선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지된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전망에 대한 기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Buckles, Hungerman and Lugauer, 2020^[75]; Comolli and Vignoli, 2021^[73]; Gatta et al., 2021^[76]). 2022년,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전망이 불확실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와 가계 재정애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실업률은 2022년에 5.3%로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OECD 사회적·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에 참여한 25~54세 응답자의 48%는 여전히 실직 또는 소득 상실 위험이 그해 3대 걱정거리라고 답했습니다(그림 1.9).

출산 시 예상되는 소득 손실과 관련된 공적 지원의 실질적 또는 이해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칩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정부가 육아휴직 수당을 확대했지만(OECD(2024^[12]), 지표 PF2.5 “출산 관련 휴가 자격 동향”),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림 1.10은 *OECD 사회적·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25~54세의 평균 44%가 정부가 자녀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거나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1.9. 2022년, 많은 근로자가 실직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25~54세, 향후 1~2년 동안 본인 또는 직계 가족에게 가장 큰 3대 위험 중 하나로 ‘실직 또는 자영업 소득 상실’을 꼽은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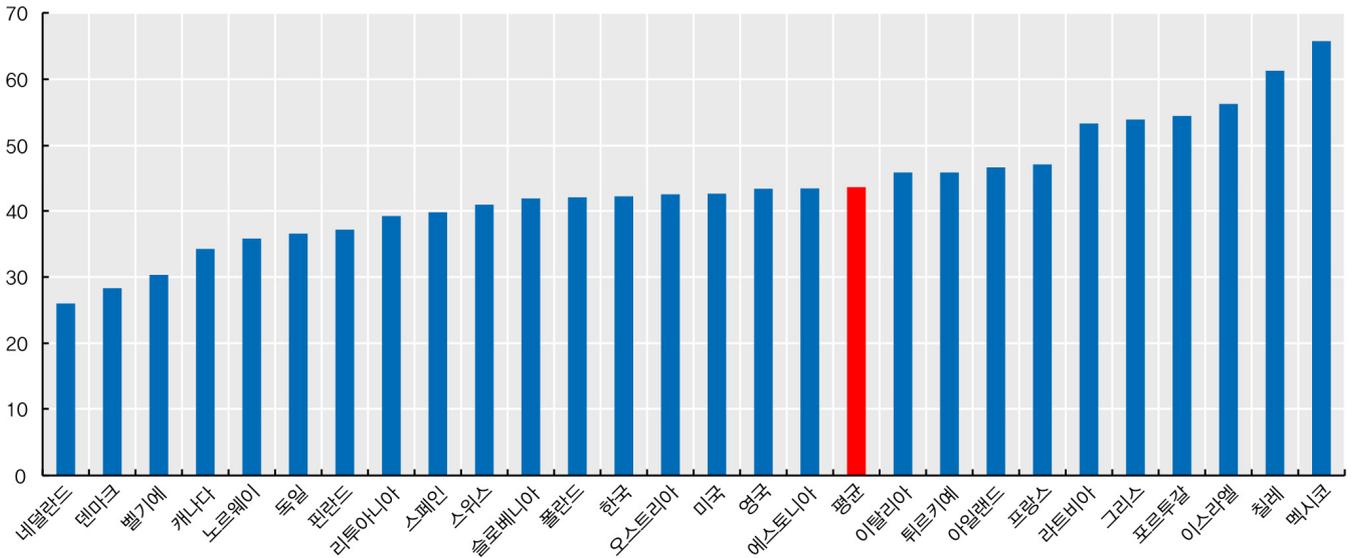
주: 응답자들에게 향후 1~2년 내로 가까운 미래에 자신과 직계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응답자에게는 (a)질병 또는 장애 발생, (b)실직 또는 자기 고용 소득 상실, (c)저렴한 주택 마련/유지 불가, (d)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음, (e)자녀(또는 가족의 젊은 구성원)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 10가지 사회/경제적 위험이 제시되었습니다. (f)고령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g)젊은 층을 위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h)범죄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 (i)자녀, 노인 친척,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친척을 돌보기 위해 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j)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응답 옵션은 ‘전혀 걱정되지 않음’, ‘별로 걱정되지 않음’, ‘어느 정도 걱정됨’, ‘매우 걱정됨’, ‘선택할 수 없음/ 해당 없음’이었습니다.

출처: Estimates based on the OECD (2023^[77]),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doi.org/10.1787/70aea928-en.

StatLinks <https://stat.link/wedtbi>

그림 1.10. 아동 소득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

“부모가 되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나와 내 가족에게 적절한 소득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 25~54세, 2022년



주: 응답자들에게 소득 상실의 다양한 이유에 대해 “어떤 이유들로 인해... 소득 상실의 경우 정부가 나와 내 가구에 적절한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응답 내용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강하게 동의함”, “선택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출처: Estimates based on the OECD (2023^[77]),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www.doi.org/10.1787/70aea928-en.

StatLinks <https://stat.link/egoux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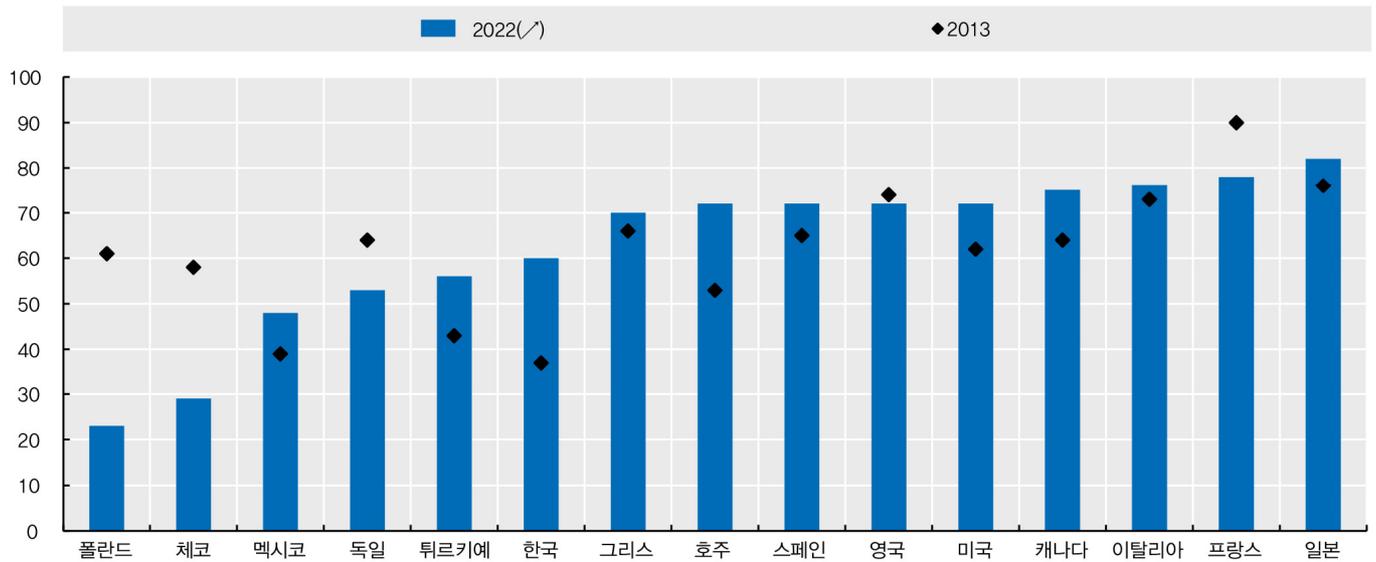
알고 있는 불확실성과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중요합니다.

출산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예상은 미디어의 어조, 친구들 간의 경험, 가족 간의 저녁 식사 대화 등 사회의 지배적인 내러티브(narrative)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뉴스 보도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정보를 필터링하고 단순화하며, 이는 점점 더 글로벌화 되는 세상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강점 또는 약점에 대한 인식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대중의 내러티브에 강하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Vignoli et al., 2020^[78]; 2021^[79]). 실제로 스웨덴의 증거에 따르면 다양한 차원의 인지된 글로벌 불확실성이 출산 의도에 실제 경제적 불확실성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Guetto, Bazzani, Vignoli, 2020^[80]).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에너지, 식량 및/또는 주택 비용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있으며(OECD, 2023^[77]),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적 불안정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10년 동안의 전망은 현저히 더 부정적입니다(WEF, 2024^[81]). 또한 오늘날의 자녀가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50% 이상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강화되었습니다(그림 1.11). 체코와 폴란드에서만 응답자의 30% 미만이 자녀가 부모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세계가 나쁜 상태라는 인식이 출산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직면할 미래에 대한 선입견이 실제로 출산율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Ivanova와 Balbo(2024^[82])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글로벌 내러티브의 확산이 증가하면 자녀를 낳으려는 의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림 1.11. 대다수의 많은 국가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발전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녀가 성장했을 때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참고: 체코, 멕시코, 폴란드의 경우 2022년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설문조사 질문: “(조사 대상 국가의) 오늘날 어린이들이 자랐을 때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s Survey, www.pewresearch.org/global/question-search/.

StatLinks <https://stat.link/5vng9t>

미래에 대한 우려는 2008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넘어 2015년 난민 위기에 대한 외국인 혐오적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유로 회의주의, 포퓰리즘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모두 예비 부모들이 자녀를 가질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Comolli et al., 2021^[54]; Joris, Puustinen and d’Haenens, 2018^[83]; Vignoli et al., 2020^[78]).

또한 딜라스톤 등(2023^[84])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일반적으로 생식에 대한 덜 긍정적인 태도와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거나 전혀 원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들의 체계적인 검토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국가,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인구 증가는 소비 증가와 함께 자원에 부담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기후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Guzmán, 2009^[85]). 전 세계 출산율은 2022년 2.21명에서 2050년 1.83명, 2010년 1.59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hattacharjee et al., 2024^[8]). 이는 인구 증가 둔화에 기여할 것이지만, CO₂ 배출량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는 유럽의 50세 이상 인구의 경우 노년기에만 1인당 배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Natale, Ueffing and Deuster, 2023^[86]).

가족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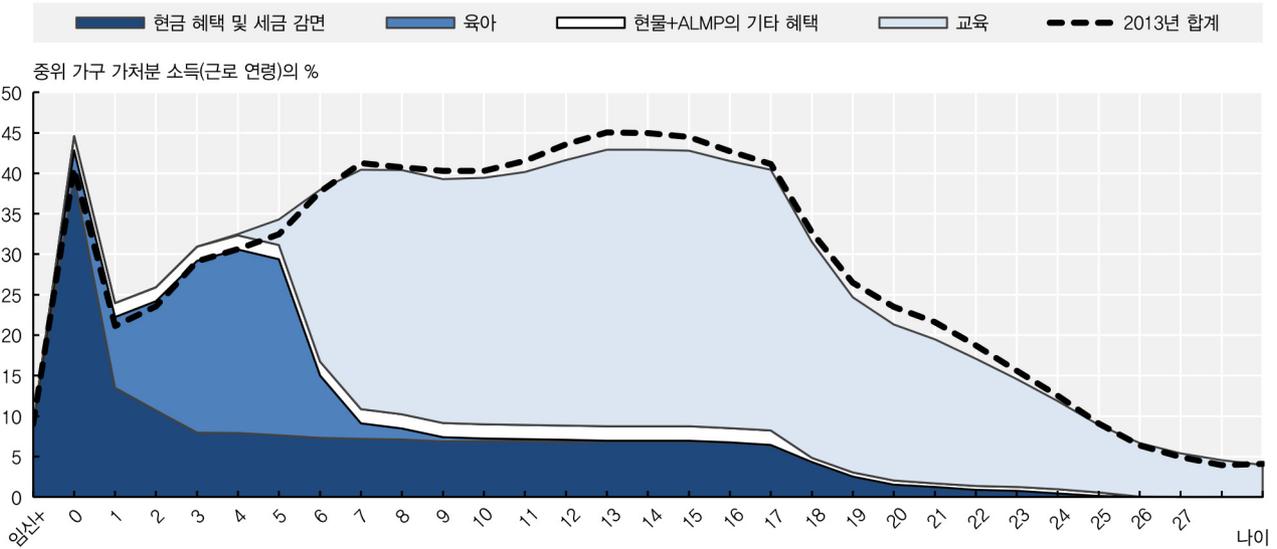
가족 정책은 자녀의 초기 생애 과정에서 가족에게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가족을 꾸려 나갈지 여부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조치에는 출산 전후 가족 휴가, ECEC 서비스, 아동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구소득의 감소, 경력 개발의 포기, 높은 보육 비용 등 출산으로 인한(기회) 비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정책은(예비) 부모에게 부모가 되는 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같은 개별적인 지원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애 초기 과정에 걸쳐 연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대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자격이 소진되면 ECEC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외 시간(OSH) 서비스, 아동 혜택 및 유연한 직장 지원이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Adema, 2006^[87]). 이러한 의미에서 양육 비용 감소는 가족 규모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충분히 포괄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Thévenon and Gauthier, 2011^[88]). 부모를 돕기 위해 전체적으로 일관된 지원을 제공한다는 개념은 아동기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시작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아동기 내내 지속해야 한다는 아동기에 대한 생산적 투자 개념과 일치됩니다(Heckman and Masterov, 2007^[89]).

그림 1.12는 생애 초기의 가족 혜택에 대한 지출을 보여줍니다. OECD 평균적으로 아동에 대한 지출은 출산 후 감소하다가 많은 국가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ECEC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3세 무렵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아동기 초기에 아동에 대한 지출 수준이 보다 평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OECD(2024_[12]), 지표 PF1.6, '아동 연령별 공공지출').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서비스 부족 및/또는 유급 육아휴직이 소진되는 시점과 공적 지원 ECEC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 사이의 격차를 반영할 수 있는 초기에 '지출 급감(spending dips)'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일과 가족 간의 약속을 조화롭게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됩니다.

그림 1.12. 아동기 전반에 걸친 가족 지원의 연속성

2019년 아동 및 연령별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근로 연령) 대비 정책 수단(intervention)별 평균 사회 지출(PPP 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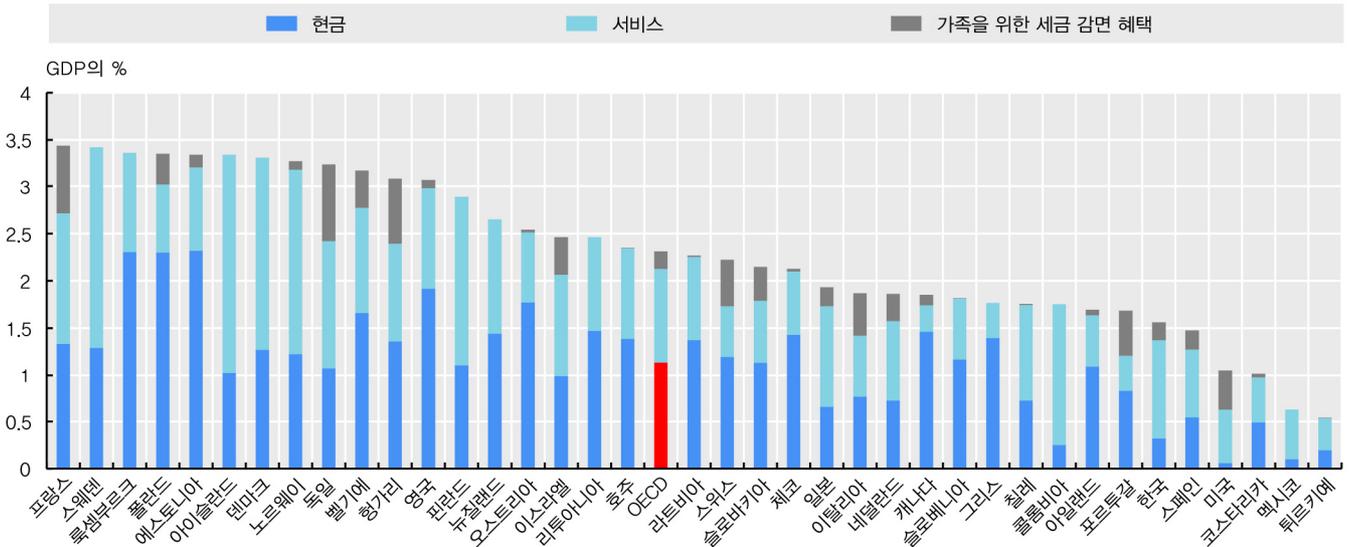
주: 2019년 OECD 회원국 평균- 점선은 2013년 평균 지출을 반영합니다.

출처: OECD (2024_[12]), Indicator PF1.6, "Public spending by age of children",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p2sg9m>

가족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은 OECD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그림 1.13). 최근까지 합계출산율이 여성 1인당 2명에 가까웠던 북유럽 국가들은 GDP의 약 3% 이상을 가족 복지에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 ECEC 지원을 포함한 가족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독일, 영국은 지출의 약 3분의 2를 현금 또는 재정 혜택을 통해 가족 혜택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단점은 매우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두 번째 소득자의 근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는 점이지만(OECD, 2007_[90]; 2011_[91]; 2024_[92])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국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림 1.13. 공공 지출 가족 지원은 OECD 회원국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지출 유형별 가족 혜택에 대한 공공 지출, GDP 대비 비율, 2019년 또는 최근 사용 가능



주: 여기서 집계된 공공 지출은 가족만을 위한 공공 지원(예: 아동 수당 및 수당, 육아휴직 수당 및 보육 지원)에만 해당합니다. 보건 및 주택 지원과 같은 다른 사회정책 분야의 지출도 가족을 지원하지만 배타적이지는 않으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거나 공동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ECD 사회 지출 자료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후자는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블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앙 통계 기관이 지역 지출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기에는 보고 요건이 충분히 상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서비스 제공에 크게 관여하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지출 측정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캐나다와 스위스처럼 연방제 구조를 가진 일부 국가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의 가족에 대한 세금 감면 자료는 OECD에서 추정된 것입니다. 영국의 자료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스위스의 세금 감면액에 대한 추정치는 국가 당국에서 제공했습니다.

출처: OECD (2024_[12]), Indicator PF1.1.,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5z76xg>

육아 휴직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 보호 유급 가족 휴가 자격은 OECD 회원국 가족 정책의 주요 특징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정 돌봄 휴직으로 관리되는 이러한 자격은 출산 전후의 영유아와 산모를 보호하고 신생아의 생후 초기에 부모 모두에게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휴직 기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장에 복귀하고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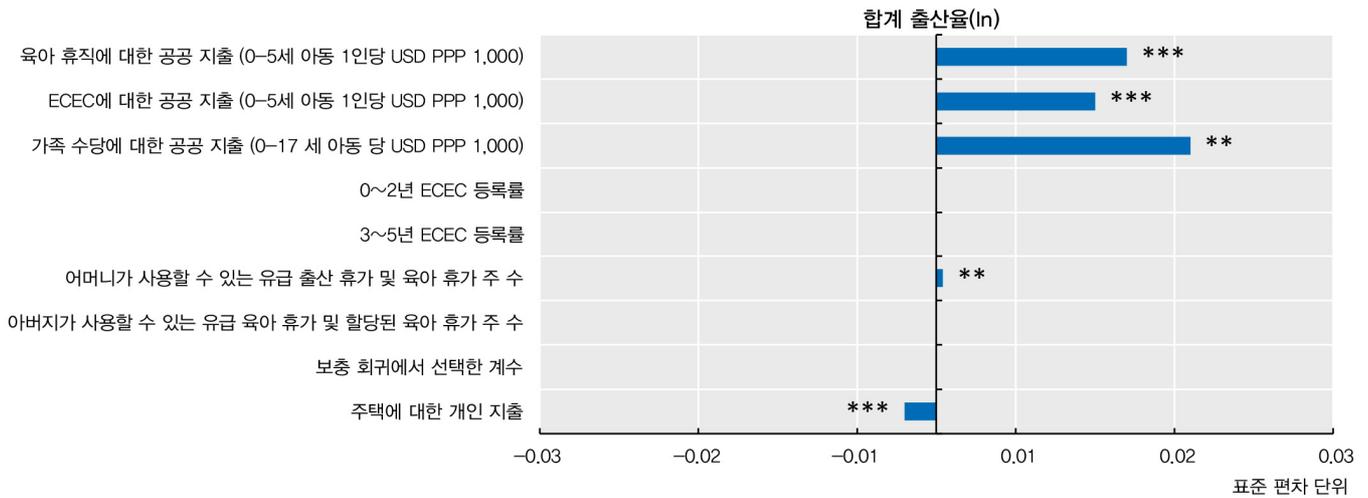
2021년에 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은 출산 전후와 자녀의 생후 몇 개월 및 몇 년 동안 국가/연방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했습니다(OECD(2024_[12]), 지표 PF2.1). 미국은 국가/연방 유급 휴가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1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2024년1월1일까지 의무 유급 가족 휴가를 제정했습니다(Bipartisan Policy Centre, 2024_[93]).

OECD 평균 25.7주는 어머니가, 12.7주는 아버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두 부모는 필요에 따라 26.4주의 육아 및 가정 돌봄 휴가를 추가로 공유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전반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휴가 자격은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습니다(OECD (2024_[12]), 지표 PF2.2, "출산 관련 휴가 혜택의 사용" 참조).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자격은 3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스웨덴은 1995년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2023년까지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이 최소 8~10주 이상의 육아휴직 제도(예: '아빠 할당제(daddy quota)', '보너스 개월(bonus months)')을 통해 아버지의 휴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평균 출산 연령에 대한 전체 유급 육아휴직 기간과 아버지의 배타적 자격을 OECD 전체 회귀 분석 결과, 어머니의 유급휴직 기간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1.14). 다양한 범위의 정책 개혁에 대한 국가별 평가에 주로 의존하는 가족 휴가 자격과 출산율 사이의 연관성은 파악하기 복잡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Bergsvik, Fauske and Hart, 2021_[94]; Thomas et al., 2022_[95]). 예를 들어, Thomas 등(2022_[95])은 혜택이 충분히 관대하다면 육아휴직과 출산율 사이에는 실제로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ng(2015_[96])은 2006년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 대체율과 최대 급여 지급액을 높인 퀘벡 부모 보험 프로그램의 개혁이 출산율을 크게 높이고, 가임기 여성의 노동 공급 증가를 유도한 반면, 현금 이전 출산 장려금은 출산율을 약간만 증가시키고 여성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에서 1987년과 1992년 사이에 육아휴직 자격을 확대한 여러 개혁은 개혁 이후 14년 동안 기껏해야 출산율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Dahl et al., 2016_[97]).

그림 1.14. 가족 정책과 출산율 결과 사이의 연관성

클러스터 표준 오차를 사용한 OECD 전체 양방향 고정 효과 회귀 분석의 요약 결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주: 모든 사양은 선형 국가 시간 추세와 평균 교육 연도 및 로그 GDP에 대한 통제가 포함된 양방향 고정 효과 모델입니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국가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되었습니다. 표준 오차는 이질 공적분 및 패널 보정(고정 효과 모델의 경우)입니다.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냅니다. “...”는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10% 수준 미만)를 나타냅니다. “+”는 유의미한 포인트 추정치의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는 음의 부호를 나타냅니다.

출처: See Fluchtmann, van Veen and Adema(2023_[2]), Tables 4 and 5 for the main baseline regressions and Annex Tables 5.B.9 and 5.B.10 for the supplementary regression results in “Fertili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y: A cross-country panel analysis”, www.doi.org/10.1787/326844f0-en.

StatLinks <https://stat.link/ois3k8>

아버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할당 육아휴직에 대한 자격도 잠재적으로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가정 내 무급 노동을 더 많이 분담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출산율 계획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독일의 개혁은 아버지가 휴가를 떠날 경우 2개월의 “보너스 개월(bonus months)”을 도입하고 낮은 평균 출산 정액 급여를 소득에 따른 급여로 대체하여 고학력 여성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출산 가능성을 높였지만(Raute, 2019_[98]), 개혁은 또한 휴가 기간을 단축하고 저소득 산모에게 손실을 초래하여 그들 사이에서 후속 출산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Cygan-Rehm, 2015_[99]). 또한 같은 개혁으로 가정 내 교섭 지위가 개선된 아버지의 경우, 출산 1년 후 휴가 대상 아버지의 주당 육아 참여 시간이 0.6시간, 실제 휴가를 사용한 경우 2.45시간 증가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가족에 대한 사례에 의해 더욱 뒷받침됩니다(Duvander et al., 2019_[100]; Duvander, Lappégård and Andersson, 2010_[101]).

그러나 스페인, 한국, 노르웨이에서는 반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이 도입된 후 첫 출산이 늦어졌습니다(Farré and González, 2019_[102]).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가족 휴가를 사용한 아버지는 휴가를 막 시작한 아버지에 비해 다른 자녀를 원할 가능성이 낮았고(Lee, 2022_[103]),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 할당제 확대가 이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art, Andersen and Drange, 2022_[104])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한국과 스페인의 경우, 출생 후 초기에 가족과 직장 생활의 조화가 복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자녀의 긴 학업 시간, 저렴한 ECEC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OECD, 2022_[105]; 2019_[106]) 등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의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의 비금전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녀 출산에 대한 열의가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출산율에 따른 효과는 다양합니다.

양질의 저렴한 ECEC를 이용할 수 있다면 부모 모두 가족에 대한 헌신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급 육아휴직 자격이 만료된 후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ECEC의 가용성은 출산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처럼 가족이 유아기 동안 지속적인 휴가와 육아 지원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때, 직업과 가족의 헌신은 더욱 양립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완화합니다(Gray et al., 2022_[107]).

지난 15년 동안 OECD 회원국 전반에서 ECEC 제공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0~2세 아동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OECD(2024_[12]), 지표 PF3.2, “보육 및 유아원 등록”). 2005년 22%에 불과했던 3세 미만 아동의 ECEC 등록률은 2019년 OECD 회원국 평균 35%로

증가했으며,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국가별 ECEC 이용률의 차이는 육아휴직 자격, 공공 보육 지원, 영유아 돌봄 제공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차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를 동안만 공식적인 ECEC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네덜란드에서는 0~2세 아동의 ECEC 등록률이 가장 높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부모 모두의 풀타임 고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CEC 참여율이 높고, 풀타임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이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지속되는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가족 지원에 대한 공공 투자가 제한적이고 사회 규범이 공공 보육보다 모성 보호를 선호하는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등록률이 특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가족 정책을 통해 가변적이며, 과거에 진화하는 공급 구조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Chung and Meuleman, 2017_[108]). 특히 벨기에, 독일, 그리스, 스페인,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최연소 아동에 대한 ECEC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아동 등록률이 2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림 1.14는 ECEC의 접근성, 가용성, 사용 강도, 경제성 및 품질을 포함하는 ECEC에 대한 공공 지출이 출산율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ECEC의 가용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ECEC 등록률은 모든 회귀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문헌에서는 ECEC 가용성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그 효과는 출생 기회의 평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ECEC 가용성의 확대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의 소폭 증가와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습니다(Fukai, 2017_[109]). 독일과 노르웨이에서는 ECEC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이 특히 둘째 및 셋째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율 증가와 관련이 있었지만(Rindfuss et al., 2007_[110]; Rindfuss et al., 2010_[111]), 오스트리아나 한국에서의 ECEC 확대는 명확한 효과가 없었습니다(Kleven et al., 2022_[112]).

그러나 한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 지원을 전반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 이하로 떨어지고 2023년에는 0.72를 기록한 TFR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Jeong et al., 2022_[113]). 이는 장시간 근로 등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잠재적 요인으로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관념의 변화, 노동시장 이중주의, 출산 전후 유급 휴가 사용을 꺼리거나 제공받지 못한 부모가 많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및 일본 부모들 역시 아동기 내내 현금과 시간으로 상당한(방과 후) 교육 비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자녀 양육 비용은 여성이 자녀를 더 낳지 않는 주요 이유입니다(Jones, 2019_[114]; OECD, 2019_[106]; OECD, 2024_[115]; Tan, Morgan and Zagheni, 2016_[116]).

현금 혜택은 기껏해야 출산율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수당이나 아동 수당과 같이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면 자녀를 낳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이 낮아져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자녀를 낳는 대신 이미 태어난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대체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Bergsvik, Fauske and Hart, 2021_[94]). 대부분의 국제 연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금전적 이전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약간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 실험이 부족하여 분석이 어렵습니다(Skirbekk, 2022_[9]). 그림 1.14는 OECD 전체에서 가족 현금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TFR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만 유급 휴가 지출이나 ECEC 투자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구 대상 국가에 따라 현금 지원의 효과는 전체 가족 지원 패키지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2년간 높은 지급률을 보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일시불 및 보조금 대출로 구성된 주택 프로그램, 만 2세부터 3세까지의 ECEC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현금 및 세금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그림 1.13)(OECD, 2022_[117]). 이 지원 패키지는 공식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을 둔 로마족 가족(Roma families)을 포함하여 공식적인 고용 관계가 덜한 소득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누락되었습니다(Szántó, 2021_[118]). 1995년과 2020년 헝가리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약 1.5명으로 비슷했지만, 2010/11년 합계출산율은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성 1인당 자녀 수 1.25명(OECD, 2024_[12]). 헝가리의 지원 정책 패키지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을 약 1.5명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모든 저소득층 가족을 포함하여 ECEC 네트워크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성평등(OECD, 2022_[117])과 출산율을 높일 것입니다(Szabó-Morvai et al., 2019_[119]).

폴란드의 500+ 아동수당 프로그램은 (극심한) 아동 빈곤을 크게 줄였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Magda et al., 2019_[120]; Ekert, 2022_[121]). 2024년 2월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PLN 800(200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800+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Ministry of Family, Labour and Social Policy, Republic of Poland, 2024_[122]). 폴란드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인구 통계 전략 2040도 일과 가족 화해의 장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Polish Government, 2022_[123]). 호주 베이비 보너스는 출산율에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이 낮은 이민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Bonner and Sarkar, 2020_[124]; Parr and Guest, 2011_[125]). 저학력 이민 여성에게 효과가 집중된 것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그룹이 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적 비용에 특히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첫 출산에 대한 지급액을 늘린 독일의 아동수당 개혁은 이 그룹의 첫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연령 및 국내 이민 이력과 동서 출산율 차이에 따른 제한적인 표본 추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iphahn and Wiyneck, 2017_[126]).

가족 현금 혜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여러 주에서 도입된 출산 수당은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5.5% 증가시켰는데, 이는 둘째 출산보다 첫째 출산에 약간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 그러나 이 효과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Chuard and Chuard-Keller, 2021_[127]). 스페인에서는 보편적 아동 이전이 시행되면서 TFR이 3% 증가했지만, 2010년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TFR이 6% 감소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동안의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González and Trommlerová, 2021_[128]).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아 수당 자격 기준의

제한은 출산을 후기 연령으로 연기함으로써 출산을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어린 연령의 출산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EI-Mallakh, 2021_[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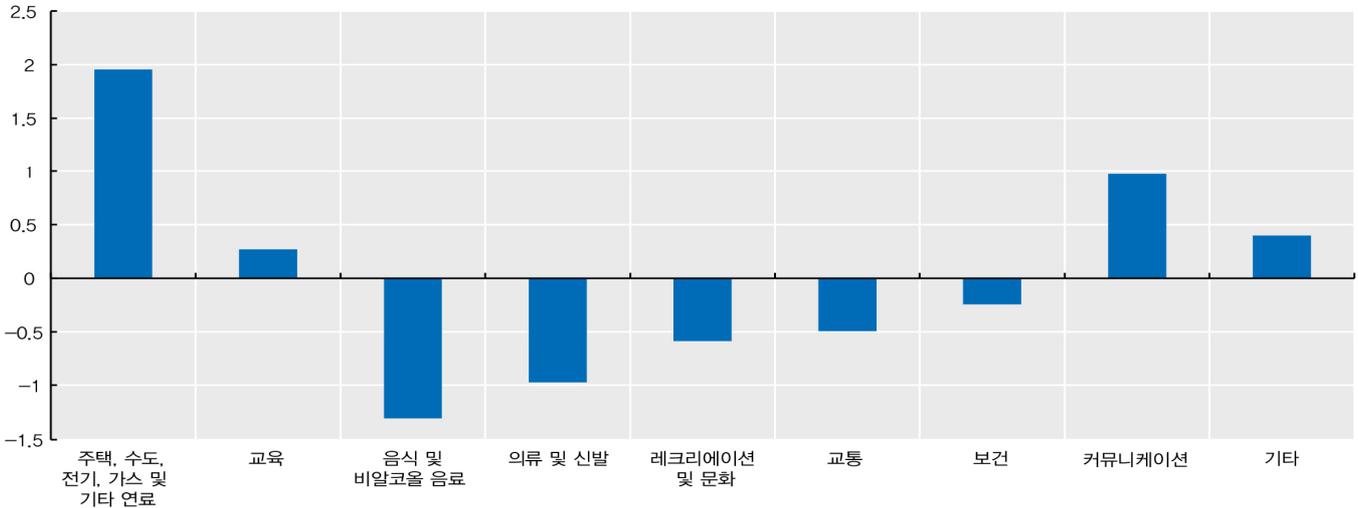
주거비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공식적인 보육, 교육, 식료품, 주거는 가족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화는 출산율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 1.15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실질)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주택 및 공공요금에 대한 가계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OECD, 2023_[15]).

자녀를 (더)많이 낳는다는 것은 종종 더 큰 가족 규모를 수용하기 위해 더 큰 주거 공간으로 이사함으로써 주거비 지출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 비용이 증가하면 자녀를 (더 많이)낳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플루흐트만, 반 빈, 아데마(2023_[2])는 주택에 대한 가계 지출의 증가가 TFR에 유의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주택 자산은 OECD 전체에서 가계 자산의 주요 원천이며, 일부에게는 출산에 필요한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Kim and Sparks, 2019_[130]).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초 주택 소유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자산은 주로 주택 자산 사다리를 오를 충분한 시간(및 축적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로 고소득층의 둘째 이상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림 1.15. 2000년 이후 가계 지출의 변화

가계 예산 항목별 지출 비중의 백분율 포인트 변화, 2000년 대 2019년, OECD-33 평균



주: 해당 지역 및 해외 거주자의 최종 소비지출 중 가계 지출 항목별 비중 변화는 목적에 따른 개인소비 분류(COICOP) 및 국민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료입니다. OECD 33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출처: OECD (2022_[131]),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

StatLinks <https://stat.link/2nrxsh>

정부는 임차인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예를 들어 도시 개발 경계 재검토 또는 건물 높이 규제 완화와 같은 토지 이용 및 건축 허가 규제 완화(OECD, 2021_[132]), 사회 주택 정책 지원, 저소득층 및 기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수당(OECD, 2021_[133]; 2020_[134]) 등의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보다 저렴한 임대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Brauner-Otto, 2021_[135]). 또한 보조금과 보증을 통해 젊은 층이 모기지 및 주택 소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Gurov and Kulikova, 2022_[136]). 예를 들어 헝가리에서는 주택 소유 지원 확대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zabó-Morvai et al., 2019_[119]).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주택 및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20~30대까지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더 오랜 기간 동거해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동반자 관계와 가족 형성이 부분적으로 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Esteve et al., 2020_[137]; Cournède and Plouin, 2022_[138]). 실제로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그림 1.16).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중이 높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출생 연령이 높고 전반적으로 낮은 TFR과 일치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모 집 밖에서 사는 청년의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미국 등 몇 개국입니다(그림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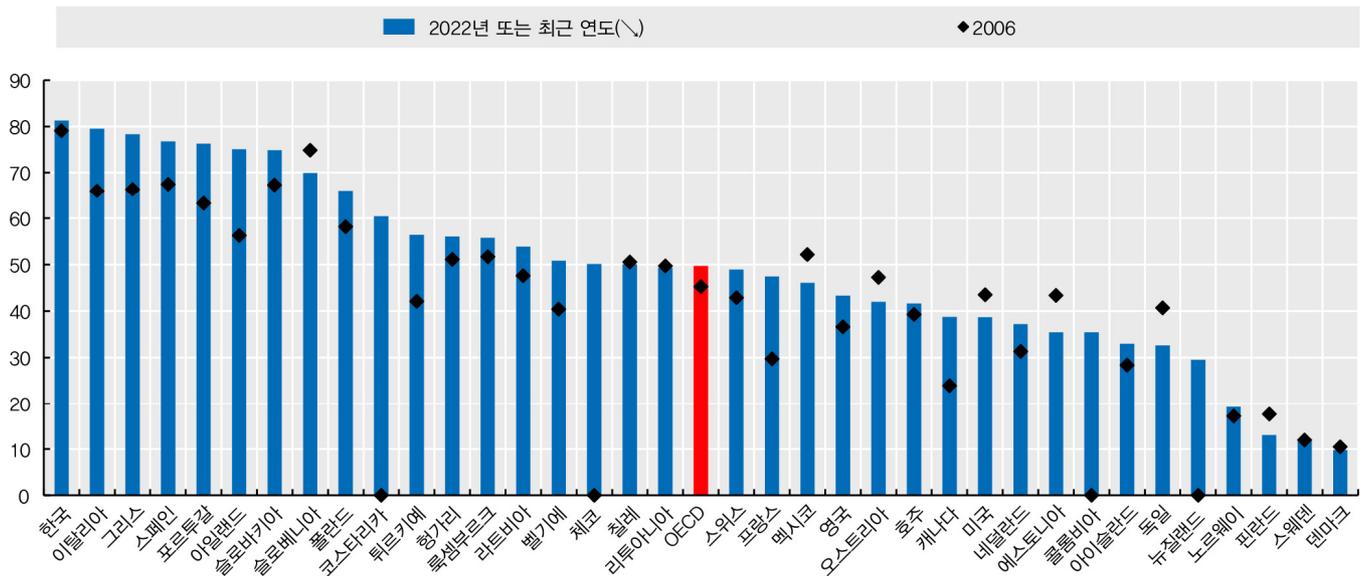
태도와 규범의 변화는 출산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경쟁적인 삶의 목표에 직면할 때 자녀를 갖는 데 따른 심리사회적 비용과 혜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가지 요인은 태도와 규범이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범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최근의 규범과 태도가 젊은 성인들의 행동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출산율 감소와 부부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학적 전환 이론*은 2000년대와 2010년대 가족 형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심 이론으로 부상했습니다(Sobotka, 2008^[139]). 이 이론은 사회가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에 도달함에 따라 자아실현과 같은 비물질주의적 가치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해진다고 가정합니다. 개인의 자율성, 선택, 자아실현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족 이상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를 낳고 사회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다른 삶의 목표와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실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동반자 관계의 질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반자 관계 형성을 지연시키고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일 경우 떠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Hellstrand, Nisén and Myrskylä, 2022^[140]).

그림 1.16. 많은 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20~29세 청년의 비율



1. OECD 평균은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뉴질랜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최신 자료는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스위스, 미국의 경우 2021년,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영국의 경우 2020년, 아이슬란드 2018년, 캐나다와 칠레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3. 2006년 자료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2007년, 멕시코와 스위스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EU-SILC, HILDA (Australia), CIS (Canada), CASEN (Chile), KLIPS (Korea), ENIGH (Mexico), estimates provided by Statistics New Zealand (2021); and CPS (United States).

StatLinks  <https://stat.link/8izn31>

가족 vs. 자아실현

대부분의 출산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며(물론 의도하지 않은 출산도 여전히 발생하지만),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갖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자녀를 적게 낳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Rotkirch(2020_[141])는 핀란드에서 새로운 '자녀 없는 이상'이 부상하고 있음을 관찰했으며, Guzzo(2022_[142])는 미국에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젊은 성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를 갖지 않거나 늦추는 이유로는 현재의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Alakärppä et al., 2022_[143]; Rotkirch, 2020_[141]) 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족 및 자녀 이외의 삶의 목표가 중요해졌습니다(OECD, 2023_[74]).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력 개발과 자아실현 활동 등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Savelieva, Jokela and Rotkirch, 2022_[144]; Rotkirch, 2020_[141]). Rotkirch(2020_[141])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것보다 아이를 갖는 것이 '희생'으로 묘사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요구가 커졌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더 적은 수의 자녀를 갖기로 선택한 이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재정적 및 비재정적 자녀 양육의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맞추는 행위가 널리 연구되었습니다(Mynarska and Rytel, 2022_[145]; Cools and Strøm, 2020_[146]; Lebano and Jamieson, 2020_[147]). 부모는 자녀가 별다른 개입 없이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Ellingsæter, Kitterød and Hansen, 2022_[148])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Becker, 1960_[3])의 가정처럼 말이죠. 일례로 노르웨이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하루 가족 돌봄 시간은 남성은 39분에서 54분으로, 여성은 1시간 12분에서 1시간 19분으로 증가했습니다(SSB, 2022_[149]). 한국의 부모들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교육 환경에서 자녀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모, 특히 엄마가 자녀의 하루를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헬리콥터 육아' 또는 '과잉 육아'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헬리콥터 육아' 문화는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능력은 물론 자녀의 자율성, 독립성, 행복감 발달 능력까지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OECD, 2019_[106]).

집중적인 양육의 이상에 부응할 수 없다는 두려움은 가족 형성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럽의 정성적 증거에 따르면 30대 초반의 일부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모성의 이상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Lebano and Jamieson, 2020_[147]; Rotkirch, 2020_[141]). 복지 국가에서 제공되는 광범위한 공공 지원으로 인해 필요한 경제적 투자가 많은 유럽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Guzzo, 2022_[142]).

무자녀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청년들이 출산율을 선택할 때 미래의 잠재적 자녀가 자랄 세상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질적 증거에 따르면 청년과 청소년은 기후에 대한 자녀의 영향과 기후 변화가 미래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가 살기 힘들어지면 미래의 아이들이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이기적인 선택으로 여깁니다(Bodin and Björklund, 2022_[150]).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녀가 없는 성인의 26%가 기후 변화가 자녀를 갖지 않는 '주요 이유' 또는 '사소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Jenkins, 2020_[151]). 호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세 미만 여성 응답자의 33%가 "자녀를 낳으면 기후 변화로 인해 자녀가 안전하지 않은 미래에 직면할 것이라는 걱정이 커져서 자녀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을 재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2019_[152]). 캐나다에서는 10대들이 '미래가 없으면 아이도 없다 서약서'에 서명하여 아이를 낳을 자신이 생기기 전에 정부에 단호한 기후 행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Climate Strike Canada, 2019_[153]). 중국의 증거에 따르면 출산율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우려는 아니지만, 기후 걱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Fu, Schneider-Mayerson and Montefrio, 2022_[154]).

성평등의 확대는 가정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성의 노동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은 경력관리 전략과 자녀 양육 책임의 균형을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공평하다고 인식되는 커리어와 돌봄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성공하는 것이 출산 의향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되거나 또 다른 자녀를 갖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 책임과 노동시장 경력에서 향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돌봄과 가사를 계속 짊어지고 있는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수십 년 동안 경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Pew Research Center, 2019_[155]). 이러한 태도와 관행의 변화는 부부의 일과 가족 간의 균형을 완화하고 출산을 증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_[156]). 성평등 규범의 진화를 다룬 체계적인 문헌 검토에서 Raybould와 Sear(2021_[157])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주부 모델로 전문화하거나 평등주의적 공동 공급자-공동 돌봄자 모델로 결합할 때, 어머니가 노동시장 참여와 대부분의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기보다는 출생 수가 실제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규범적 상태 사이의 전환은 간단하지 않으며, 가족 및 일의 조직에 대한 가정의 불일치는 출산율 의도를 약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부 가구 내에서 출산율 선택을 이해하려고 할 때 돌봄과 가사 부담의 실제 및 인식된 공정성이 퍼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합니다(Kolk, 2019_[158]; Lappegård, 2020_[159]). Doepke와 Kindermann(2019_[160])은 불평등한 돌봄 노동 부담과 다음과 같은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출산율 의도에 대한 의견 불일치. 배우자 간의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여성이 대부분의 무급 노동을 할 때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출산 국가에서 가장 흔합니다.

돌봄과 가사에 대한 남성의 참여가 OECD에서 가장 높은 노르웨이에서는 남성 배우자가 자녀를 갖는 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Cools and Strøm, 2020^[146]). 이러한 남성의 자녀 출산 주저는 성평등 사회에서 아버지의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다른 기회비용과 함께 출산 시기와 참여를 고려하는 것은 예비 어머니보다 예비 아버지에게 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시간 및 정서적 헌신에 대한 요구 증가가 자녀 출산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제안되었습니다(Jensen, 2013^[161]; 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ård, 2015^[156]). 노르웨이의 질적 연구에서도 자녀가 없는 남성 응답자들은 동반자 관계에 대한 확신, 안전한 재정 상태, 가족을 위해 “결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모(특히 아버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규범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Cools and Strøm, 2020^[146]).

정책 고려 사항

OECD 회원국에서 가족은 모든 사회의 초석이며(OECD, 2011^[91]), 현대 가족 정책은 상호 의존적인 다양한 정책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Adema, 2012^[162]). 여기에는 특별한 순서 없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아동 및 가족 빈곤 퇴치
-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초기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아동의 웰빙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양성평등 강화
- 여성 노동력 공급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 보호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부모가 일과 가족의 책임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홍보하세요.

이러한 가족 정책 목표의 일반적인 균형은 국가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일본, 헝가리, 한국에서는 저출산율로 인한 친출산주의적 관념이 정책 개발의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인구 추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발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Staatscommissie Demografische Ontwikkelingen 2025, 2024^[163]).

가계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성인 두 명이 유급으로 일해야 하는 가정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유급 육아휴직 규정과 ECEC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연속적인 지원 제공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GDP의 3% 이상을 가족 지원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들 국가는 대체 수준 바로 아래에서 출산율을 유지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23년에는 이들 국가 중 상당수에서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헝가리는 지난 10년간 가족 복지에 대한 지출을 GDP의 3% 이상으로 늘리고 TFR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과 가족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의 국가 간 편차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거비 상승이 상당히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자녀를 (더 많이) 낳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족 형성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각국은 주택을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OECD, 2021^[133]). 주택 정책의 대응은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는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부문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헝가리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주택 소유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가지 문제(예: 자녀 돌봄 지원)를 해결한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데 있어 다른 장벽(예: 주택 비용 또는 장시간 노동)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공공 정책은 혼자서 할 수 없으며, 고용주와 노조가 함께 결정하는 노동시장 제도 및 직장에서의 관행과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람들이 그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일시적일 것으로 여겨지는 정책은 기껏해야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한 재정적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출산율을 걱정하는 국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일과 육아를 더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돕는 가족 정책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녀 양육비, 특히 주택 비용에 더 큰 초점을 맞춘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으로 국가가 다시 대체 출산율에 근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출산율의 증가는 20년 정도 후 노동 연령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인구학적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정책과 이 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러한 정책(박스 1.2 참조)에는 순 이민, 더 많은 소외 계층의 노동력 유입, 잠재적 노동력 감소의 경제적,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구 보건을 보장하고 근로 수명을 연장하면 이러한 노력을 더욱 뒷받침하고 미래의 재정적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Adema, W. (2012), "Setting the scene: The mix of family policy objectives and packages across the OEC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34/3, pp. 487-498,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1.10.007>. [162]
- Adema, W. (2006), "Towards coherent care and education support policies for New Zealand families",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 Te Puna Whakaaro* 28, pp. pp. 46-76, <https://www.msd.govt.nz/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resources/journals-and-magazines/social-policy-journal/spj28/28-towards-coherent-care-and-education-support-policies-for-new-zealand-families-p46-76.html>. [87]
- Adema, W., N. Ali and O. Thévenon (2014), "Changes in Family Policies and Outcomes: Is there Convergence?",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jz13wllxgzt-en>. [53]
- Adema, W., J. Fluchtmann and V. Patrini (2023), "Mainstreaming gender equality", in *Joining Forces for Gender Equality: What is Holding us Bac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3452d6b-en>. [52]
- Ahn, J. et al. (2021), "The Association Between Long Working Hours and Infertility", *Safety and Health at Work*, Vol. 12/4, pp. 517-521, <https://doi.org/10.1016/j.shaw.2021.07.005>. [164]
- Alakärppä, O. et al. (2022), "Young women's contradictory expectations and their perceived capabilities for future work-family reconciliation in Finland", *Journal of Youth Studies*, <https://doi.org/10.1080/13676261.2022.2098703>. [143]
- Alderotti, G. (2022), "Female employment and first childbirth in Italy: what news?", *Genus*, Vol. 78/1, <https://doi.org/10.1186/s41118-022-00162-w>. [62]
- Alderotti, G. et al. (2021), "Employment Instability and Fertility in Europe: A Meta-Analysis", *Demography*, Vol. 58/3, pp. 871-900, <https://doi.org/10.1215/00703370-9164737>. [67]
- André, C., P. Gal and M. Schieff (forthcoming), *Enhancing Productivity and Growth in an Aging Society*. [39]
- Ang, X. (2015), "The Effects of Cash Transfer Fertility Incentives and Parental Leave Benefits on Fertility and Labor Supply: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36/2, pp. 263-288, <https://doi.org/10.1007/s10834-014-9394-3>. [96]
-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2019), *New survey shows women will change their lives - and votes - for climate action*, 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 https://www.acf.org.au/women_will_change_their_lives_and_votes_for_climate_action. [152]
- Ayllón, S. (2019), "Job insecurity and fertility in Europe",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Vol. 17/4, <https://doi.org/10.1007/s11150-019-09450-5>. [63]
- Bailey, M., J. Currie and H. Schwandt (2022), *The Covid-19 Baby Bump: The Unexpected Increase in U.S. Fertility Rat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30569>. [14]
- Bar, M. et al. (2018), "Why did rich families increase their fertility? Inequality and marketization of child care",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23/4, pp. 427-463, <https://doi.org/10.1007/s10887-018-9160-8>. [48]
- Barro, R. and J. Lee (2013), "A new data 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world, 1950-2010",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04, pp. 184-198, <https://doi.org/10.1016/j.jdeveco.2012.10.001>. [43]
- Beaujouan, E. and C. Berghammer (2019), "The Gap Between Lifetime Fertility Intentions and Completed Fertilit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 Cohort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38/4, pp.507-535, <https://doi.org/10.1007/s11113-019-09516-3>. [11]
- Becker, G.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209-240, <http://www.nber.org/chapters/c2387.pdf>. [3]

- Bergsvik, J., A. Fauske and R. Hart (2021), "Can Policies Stall the Fertility Fall? A Systematic Review of the (Quasi-) Experimental Literatur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7/4, pp. 913–964, <https://doi.org/10.1111/padr.12431>. [94]
- Berninger, I. (2013), "Women's income and childbearing in context: First births in Denmark and Finland", *Acta Sociologica (United Kingdom)*, Vol. 56/2, <https://doi.org/10.1177/0001699312444933>. [60]
- Bhasin, S. et al. (2019), "The Implications of Reproductive Aging for the Health, Vitality, and Economic Welfare of Human Societies", *The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 Metabolism*, Vol. 104/9, pp. 3821–3825, <https://doi.org/10.1210/jc.2019-00315>. [23]
- Bhattacharjee, N. et al. (2024), "Global fertility in 204 countries and territories, 1950–2021, with forecasts to 2100: a comprehensive demograph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21", *The Lancet*, [https://doi.org/10.1016/s0140-6736\(24\)00550-6](https://doi.org/10.1016/s0140-6736(24)00550-6). [8]
- Bipartisan Policy Centre (2024), *State Paid Family Leave Laws Across the U.S.*, <https://bipartisanpolicy.org/explainer/state-paid-family-leave-laws-across-the-u-s/> (accessed on 8 March 2024). [93]
- Bodin, M. and J. Björklund (2022), "'Can I take responsibility for bringing a person to this world who will be part of the apocalypse?': Ideological dilemmas and concerns for future well-being when bringing the climate crisis into reproductive decision-making",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302,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22.114985>. [150]
- Bonner, S. and D. Sarkar (2020), "Who responds to fertility-boosting incentives? Evidence from pro-natal policies in Australia", *Demographic Research*, Vol. 42, pp. 513–548, <https://doi.org/10.4054/demres.2020.42.18>. [124]
- Borumandnia, N. et al. (2022), "Worldwide trend analysis of primary and secondary infertility rates over past decades: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Reproductive BioMedicine (IJRM)*, pp. 37–46, <https://doi.org/10.18502/ijrm.v20i1.10407>. [27]
- Brauner-Otto, S. (2021), "Housing and fertility: a macro-level, multi-country investigation, 1993–2017", *Housing Studies*, pp. 1–28, <https://doi.org/10.1080/02673037.2021.1893279>. [135]
- Buckles, K., M. Guldi and L. Schmidt (2019), *Fertilit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1980–2017: The Role of Unintended Birth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25521>. [30]
- Buckles, K., D. Hungerman and S. Lugauer (2020), "Is Fertility a Leading Economic Indicator?", *The Economic Journal*, Vol. 131/634, pp. 541–565, <https://doi.org/10.1093/ej/ueaa068>. [75]
- Burkimsher, M. (2015), "Europe-wide fertility trends since the 1990s: Turning the corner from declining first birth rates", *Demographic Research*, Vol. 32, pp. 621–656, <https://doi.org/10.4054/demres.2015.32.21>. [10]
- Causa, O., N. Luu and M. Abendschein (2021), "Labour market transitions across OECD countries: Stylised fact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69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2c85872-en>. [69]
- Chuard, C. and P. Chuard-Keller (2021), "Baby bonus in Switzerland: Effects on fertility, newborn health, and birth-scheduling", *Health Economics (United Kingdom)*, Vol. 30/9, <https://doi.org/10.1002/hec.4366>. [127]
- Chudnovskaya, M. (2019), "Trends in Childlessness Among Highly Educated Men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35/5, pp. 939–958, <https://doi.org/10.1007/s10680-018-9511-3>. [51]
- Chung, H., S. Bekker and H. Houwing (2012), "Young people and the post-recession labour market in the context of Europe 2020",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Vol. 18/3, pp. 301–317, <https://doi.org/10.1177/1024258912448590>. [68]
- Chung, H. and B. Meuleman (2017), "European parents' attitudes towards public childcare provision: the role of current provisions, interests and ideologies", *European Societies*, Vol. 19/1, pp. 49–68, <https://doi.org/10.1080/14616696.2016.1235218>. [108]

- Ciganda, D., A. Lorenti and L. Dommermuth (2021), "Changes in the educational gradient of fertility not driven by changes in preferences", *MPIDR Working Paper*, Vol. 2021/016, <https://www.demogr.mpg.de/papers/working/wp-2021-016.pdf>. [46]
- Climate Strike Canada (2019), *No Future No Children Pledge*, <https://www.climatestrikecanada.org/no-future-no-children>. [153]
- Comolli, C. (2017), "The fertility response to the Great Recess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ructural economic conditions and perceived economic uncertainty", *Demographic Research*, Vol. 36, pp. 1549–1600, <https://doi.org/10.4054/demres.2017.36.51>. [72]
- Comolli, C. et al. (2021), "Beyond the Economic Gaze: Childbearing During and After Recessions in the Nordic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37/2, pp. 473–520, <https://doi.org/10.1007/s10680-020-09570-0>. [54]
- Comolli, C. and D. Vignoli (2021), "Spreading Uncertainty, Shrinking Birth Rates: A Natural Experiment for Ital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37/4, pp. 555–570, <https://doi.org/10.1093/esr/jcab001>. [73]
- Cools, S. and M. Strøm (2020), *Ønsker om barn: en spørreundersøkelse om fertilitet, arbeidsliv og familiepolitikk*, Institut for samfunnsforskning, <https://samfunnsforskning.brage.unit.no/samfunnsforskning-xmlui/handle/11250/2645776>. [146]
- Cournède, B. and M. Plouin (2022), *No Home for The Young? Stylised Facts and Policy Challenges*, OECD, Paris, <https://www.oecd.org/housing/no-home-for-the-young.pdf>. [138]
- Cygan-Rehm, K. (2015), "Parental leave benefit and differential fertility responses: evidence from a German reform",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29/1, pp. 73–103, <https://doi.org/10.1007/s00148-015-0562-z>. [99]
- Dahl, G. et al. (2016), "What is the case for paid maternity leav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8/4, https://doi.org/10.1162/REST_a_00602. [97]
- DANE (2023), *Estadísticas Vitales (EEVV), Nacimientos en Colombia*, <https://www.dane.gov.co/files/operaciones/EEVV/bol-EEVV-Nacimientos-IIItrim2023.pdf> (accessed on 14 March 2024). [21]
- Doepke, M. et al. (2022),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29948>. [32]
- Doepke, M. and F. Kindermann (2019), "Bargaining over Babie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9/9, pp. 3264–3306, <https://doi.org/10.1257/aer.20160328>. [160]
- Duvander, A. et al. (2019), "Parental leave policies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Iceland, Norway, and Sweden", *Demographic Research*, Vol. 40, pp. 1501–1528, <https://doi.org/10.4054/demres.2019.40.51>. [100]
- Duvander, A., T. Lappegård and G. Andersson (2010), "Family policy and fertility: fathers' and mothers' use of parental leave and continued childbearing in Norway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Vol. 20/1, pp. 45–57, <https://doi.org/10.1177/0958928709352541>. [101]
- Ekert, M. (2022), "Subject: Econometric analysis of the "family 500+" program – a study of the impact of the social benefit on the fertility of poles", <https://doi.org/10.19253/reme.2022.01.001>. [121]
- Ellingsæter, A., R. Kitterød and M. Hansen (2022), "How does parental time relate to social class in a Nordic welfare state?", *Acta Sociologica*, Vol. 65/2, <https://doi.org/10.1177/00016993211052079>. [148]
- El-Mallakh, N. (2021), "Fertility, Family Policy, and Labor Supply: Quasi-Experimental Evidence from France",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3969868>. [129]
- Esteve, A. et al. (2020), *Moving out the parental home and partnership formation as social determinants of low fertility*,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https://doi.org/10.1553/populationyearbook2020.deb02>. [137]
- Farré, L. and L. González (2019), "Does paternity leave reduce fert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72, pp. 52–66, <https://doi.org/10.1016/j.jpubeco.2018.12.002>. [102]

- Fluchtmann, J., M. Keese and W. Adema (2024),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Past progress and future potential",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30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b0a0a93-en>. [40]
- Fluchtmann, J., V. van Veen and W. Adema (2023), "Fertility, employment and family policy: A cross-country panel analysi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9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26844f0-en>. [2]
- Fukai, T. (2017), "Child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Evidence from municipalities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 43, pp. 1–18, <https://doi.org/10.1016/j.jjie.2016.11.003>. [109]
- Fu, X., M. Schneider-Mayerson and M. Montefrio (2022), "The reproductive climate concerns of young, educated Chinese: 'when the nest is upset, no egg is left intact'", *Environmental Sociology*, <https://doi.org/10.1080/23251042.2022.2132629>. [154]
- Gaskins, A. et al. (2015), "Work schedule and physical factors in relation to fecundity in nurses",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72/11, pp. 777–783, <https://doi.org/10.1136/oemed-2015-103026>. [165]
- Gatta, A. et al. (2021), "Employment uncertainty and fertility intentions: Stability or resilience?", *Population Studies*, <https://doi.org/10.1080/00324728.2021.1939406>. [76]
- Gershoni, N. and C. Low (2021), "Older Yet Fairer: How Extended Reproductive Time Horizons Reshaped Marriage Patterns in Israel",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13/1, pp. 198–234, <https://doi.org/10.1257/app.20180780>. [31]
- Goldscheider, F., E. Bernhardt and T. Lappegård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1/2, pp. 207–239,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5.00045.x>. [156]
- González, L. and S. Trommlerová (2021), "Cash Transfers and Fertility: How the Introduction and Cancellation of a Child Benefit Affected Births and Abor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pp. 0220–10725R2, <https://doi.org/10.3368/jhr.59.1.0220-10725r2>. [128]
- Gray, E. et al. (2022), *Impacts of Policies on Fertility Rates*, https://population.gov.au/sites/population.gov.au/files/2022-03/ANU_Impacts-of-Policies-on-Fertility-Rates-Full-report.pdf. [107]
- Guetto, R., G. Bazzani and D. Vignoli (2020), "Narratives of the future shape fertility in uncertain times. Evidence from the COVID-19 pandemic", *DISIA Working Paper*, Vol. 11, https://EconPapers.repec.org/RePEc:fir:econom:wp2020_11. [80]
- Guillemette, Y. and D. Turner (2021),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2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112307e-en>. [37]
- Gurov, I. and E. Kulikova (2022), "Fertility-Household Credit Burden Nexus at the Present Stage", *Population and Economics*, Vol. 6/1, pp. 36–61, <https://doi.org/10.3897/popecon.6.e76066>. [136]
- Guzmán, J. (2009), *Population Dynamics and Climate Change*, UNFPA and IIED,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resource-pdf/pop_dynamics_climate_change_0.pdf. [85]
- Guzzo, K. (2022), "The Formation and Realization of Fertility Goals Among a US Cohort in the Post-Recession Year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pp. 1–36, <https://doi.org/10.1111/padr.12509>. [142]
- Hart, R. (2015), "Earnings and first birth probability among Norwegian men and women 1995–2010", *Demographic Research*, Vol. 33/1, <https://doi.org/10.4054/DemRes.2015.33.38>. [61]
- Hart, R., S. Andersen and N. Drange (2022), "Effects of extended paternity leave on family dynam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84/3, pp. 814–839, <https://doi.org/10.1111/jomf.12818>. [104]
- Hazan, M., D. Weiss and H. Zoabi (2021), "Marketization and the Fertility of Highly Educated Women along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 No. 16647, <https://cepr.org/publications/dp16647>. [49]

- Heckman, J. and D. Masterov (2007), "The Productivity Argument for Investing in Young Childre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29/3, pp. 446–493, <https://doi.org/10.1111/j.1467-9353.2007.00359.x>. [89]
- Hellstrand, J., J. Nisén and M. Myrskylä (2022), "Less Partnering, Less Children, or Both? Analysis of the Drivers of First Birth Decline in Finland Since 2010",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38, pp. 191–221, <https://doi.org/10.1007/s10680-022-09605-8>. [140]
- Huang, B. et al. (2023),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burden of male infertility in 204 countries and territories between 1990 and 2019: an analysis of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BMC Public Health*, Vol. 23/1, <https://doi.org/10.1186/s12889-023-16793-3>. [26]
- INEGI (2023), *Estadística de Nacimientos Registrados (ENR) 2022*, <https://www.inegi.org.mx/contenidos/saladeprensa/boletines/2023/NR/NR2022.pdf>(accessed on 14 March 2024). [22]
- Ivanova, K. and N. Balbo (2024), "Societal Pessimism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Future Too Bleak to Have Childre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https://doi.org/10.1111/padr.12620>. [82]
- Jalovaara, M. et al. (2019), "Education, Gender, and Cohort Fertility in the Nordic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35/3, pp. 563–586, <https://doi.org/10.1007/s10680-018-9492-2>. [45]
- Jenkins, L. (2020), *1 in 4 Childless Adults Say Climate Change Has Factored Into Their Reproductive Decisions*, <https://morningconsult.com/2020/09/28/adults-children-climate-change-polling/>. [151]
- Jensen, A. (2013), *A gender boomerang on fertility? How increasing expectations of fatherhood may prevent men from having children*, Ralentissements, résistances et ruptures dans les transitions démographiques Chaire Quetelet 2010, <https://hdl.handle.net/2078.1/pul:29303100278500>. [161]
- Jeong, K. et al.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he Korean fertility rate and policies to encourage fertility", *BMC Public Health*, Vol. 22/1, <https://doi.org/10.1186/s12889-022-14722-4>. [113]
- Jia, F. (ed.) (2023), "Climate change, mental health, and reproductive decision-making: A systematic review", *PLOS Climate*, Vol. 2/11, p. e0000236, <https://doi.org/10.1371/journal.pclm.0000236>. [84]
- Jones, G. (2019), "Ultra-low fertility in East Asia: policy responses and challenges", *Asian Population Studies*, Vol. 15/2, pp. 131–149, <https://doi.org/10.1080/17441730.2019.1594656>. [114]
- Joris, W., L. Puustinen and L. d'Haenens (2018), "More news from the Euro front: How the press has been framing the Euro crisis in five EU count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Vol. 80/6, <https://doi.org/10.1177/1748048518754375>. [83]
- Kim, J. and C. Sparks (2019), "The influence of housing on family size in South Korea: Unstable housing and parity specific risk.", *Working Paper*, <https://doi.org/10.31235/osf.io/89gcu>. [130]
- Kleven, H. et al. (2022), *Do Family Policies Reduce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60 Years of Policy Experiment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28082>. [112]
- Kleven, H. et al. (2019), "Child Penalties across Countries: Evidence and Explanations", *AEA Papers and Proceedings*, Vol. 109, pp. 122–126, <https://doi.org/10.1257/pandp.20191078>. [57]
- Kolk, M. (2019), "Weak support for a U-shaped pattern between societal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en comparing societies across time", *Demographic Research*, Vol. 40, pp. 27–48, <https://www.jstor.org/stable/26726991>. [158]
- Köppen, K., M. Mazuy and L. Toulemon (2017), "Childlessness in France", in *Demographic Research Monographs,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Cham, https://doi.org/10.1007/978-3-319-44667-7_4. [20]
- Kornstad, T. and M. Rønsen (2017), "Women's Wages and Fertility Revisited Evidence from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34/4, pp. 491–518, <https://doi.org/10.1007/s10680-017-9435-3>. [166]

- Lambert, A., M. Segú and C. Tiwari (2023), "Working Hours and Fertility: The Impact of Nonstandard Work Schedules on Childbearing in France", *Journal of Family Issues*, p. 0192513X2211509, <https://doi.org/10.1177/0192513x221150975>. [167]
- Lappegård, T. (2020), "Future fertility trends are shaped at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social stratification",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Vol. 18, pp. 43–48, <https://doi.org/10.1553/populationyearbook2020.deb04>. [159]
- Lappegård, T. et al. (2022), "Understanding the positiv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women's fertility in Norway", *Statistics Norway Discussion Papers*, Vol. 979, https://www.ssb.no/befolkning/fodte-og-dode/artikler/understanding-the-positive-effects-of-the-covid-19-pandemic-on-womens-fertility-in-norway/_attachment/inline/9c05a6f9-0100-4218-bccd-1659e96ae303:86ccb07957174d85769bb67c8e9a5ccbc0247814/DP979_web.pdf. [15]
- Lebano, A. and L. Jamieson (2020), "Childbearing in Italy and Spain: Postponement Narrativ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1/1, pp. 121–144, <https://doi.org/10.1111/padr.12313>. [147]
- Lee, Y. (2022), "Is Leave for Fathers Pronatalist? A Mixed-Methods Study of the Impact of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uples' Childbearing Intentions in South Kore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41/4, pp. 1471–1500, <https://doi.org/10.1007/s11113-022-09697-4>. [103]
- Lindberg, L., J. Santelli and S. Desai (2018), "Changing Patterns of Contraceptive Use and the Decline in Rates of Pregnancy and Birth Among U.S. Adolescents, 2007–2014",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63/2, pp. 253–256,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8.05.017>. [29]
- Luci-Greulich, A. and O. Thévenon (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 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Vol. 29/4, pp. 387–416, <https://doi.org/10.1007/s10680-013-9295-4>. [55]
- Magda, I. et al. (2019), "Family 500+" – program evaluation and proposed changes, <https://for.org.pl/en/publications/for-reports/report-family-500-program-evaluation-and-proposed-changes>. [120]
-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50/4, pp. 370–396, <https://doi.org/10.1037/h0054346>. [1]
- Ministry of Family, Labour and Social Policy, Republic of Poland (2024), *Family 800+. call for applications for the new benefit period starts on February 1*, [https://www.gov.pl/web/family/family-800-call-for-applications-for-the-new-benefit-period-starts-on-february-1#\(accessed on 12 March 2024\)](https://www.gov.pl/web/family/family-800-call-for-applications-for-the-new-benefit-period-starts-on-february-1#(accessed%20on%2012%20March%202024)). [122]
- Mynarska, M. and J. Rytel (2022), "Childbearing motivation at the onset of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https://doi.org/10.1080/13676261.2022.2080536>. [145]
- Natale, F., P. Ueffing and C. Deuster (2023), "How does population influence climate change? Evidence from Europe, 2023, Population and Societies, no. 614", *Population and Societies*, Vol. 614, <https://www.ined.fr/en/publications/editions/population-and-societies/how-does-population-influence-climate-change-evidence-from/>. [86]
- Nieto, A. (2022), "Can subsidies to permanent employment change fertility decisions?", *Labour Economics*, Vol. 78, p. 102219, <https://doi.org/10.1016/j.labeco.2022.102219>. [71]
- Nitsche, N. et al. (2018), "Partners' Educational Pairings and Fertility Across Europe", *Demography*, Vol. 55/4, pp. 1195–1232, <https://doi.org/10.1007/s13524-018-0681-8>. [47]
- OECD (2024), *OECD Economic Surveys: Japan 20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1e807f9-en>. [115]
- OECD (2024),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12]
- OECD (2024), *The OECD tax-benefit data portal*, <https://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data/>. [92]
-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44]

- OECD (2023), *Employment Database*, <https://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59]
- OECD (2023), *Exploring Norway's Fertility, Work, and Family Policy Trend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0c7bddf-en>. [74]
-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a7afb35-en>. [35]
-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0f40584-en>. [34]
- OECD (2023), *Joining Forces for Gender Equality: What is Holding us Bac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d48024-en>. [4]
- OECD (2023),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0aea928-en>. [77]
- OECD (2023),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s://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 [5]
-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8055dd-en>. [36]
- OECD (2022), *Evolving Family Models in Spain: A New National Framework for Improved Support and Protection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27e63ab-en>. [105]
- OECD (2022),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accessed_on_2022\)](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accessed_on_2022)). [131]
- OECD (2022), *Reducing the Gender Employment Gap in Hungary*, Gender Equality at 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e5bc945-en>. [117]
- OECD (2022), *The Role of Firms in the Gender Wage Gap in Germany*, Gender Equality at 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8623d6f-en>. [58]
- OECD (2021), *Brick by Brick: Building Better Housing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53b043-en>. [132]
- OECD (2021), *Building for a Better Tomorrow: Policies to Make Housing more Affordab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060_1060075-0eik3l4uil&title=ENG_OECD-affordable-housing-policies-brief. [133]
- OECD (2020), *Social Housing: A Key Part of Past and Future Housing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social/social-housing-policy-brief-2020.pdf>. [134]
- OECD (2019), *Rejuvenating Korea: Policies for a Changing Society*, Gender Equality at 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5eed747-en>. [106]
- OECD (2017),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An Uphill Batt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1318-en>. [41]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098732-en>. [91]
- OECD (2010), *OECD Reviews of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Israel*, OECD Reviews of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079267-en>. [17]
- OECD (2007), *Babies and Bosses –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032477-en>. [90]
- Oshio, T. (2019),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female employment and fertility still spurious in developed countries?", *Demographic Research*, Vol. 41, pp. 1277–1288, <https://doi.org/10.4054/demres.2019.41.45>. [56]

- Parr, N. and R. Guest (2011), "The contribution of increases in family benefits to Australia's early 21st-century fertility increase: An empirical analysis", *Demographic Research*, Vol. 25, pp. 215–244, [125]
<https://doi.org/10.4054/demres.2011.25.6>.
- Pew Research Center (2019), *A Changing World: Global Views on Diversity, Gender Equality, Family Life and the Importance of Religion*,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9/04/22/a-changing-world-global-views-on-diversity-gender-equality-family-life-and-the-importance-of-religion/>. [155]
- Polish Government (2022), *Strategia Demograficzna 2040*, <https://www.gov.pl/web/demografia/strategia>. [123]
- Pomar, L. et al. (2022), "Impact of the first wave of the COVID-19 pandemic on birth rates in Europe: a time series analysis in 24 countries", *Human Reproduction*, <https://doi.org/10.1093/humrep/deac215>. [13]
- Raute, A. (2019), "Can financial incentives reduce the baby gap? Evidence from a reform in maternity leave benefi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69, pp. 203–222, <https://doi.org/10.1016/j.jpubeco.2018.07.010>. [98]
- Raybould, A. and R. Sear (2021), "Children of the (gender) revolution: A theoretical and empirical synthesis of how gendered division of labour influences fertility", *Population Studies*, Vol. 75/2, pp. 169–190, [157]
<https://doi.org/10.1080/00324728.2020.1851748>.
- Rindfuss, R. et al. (2007), "Child care availability and first-birth timing in Norway", *Demography*, Vol. 44/2, [110]
<https://doi.org/10.1353/dem.2007.0017>.
- Rindfuss, R. et al. (2010), "Child-Care Availability and Fertility in Norwa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36/4, [111]
 pp. 725–748,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0.00355.x>.
- Riphahn, R. and F. Wynnck (2017), "Fertility effects of child benefi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30/4, pp. 1135–1184, [126]
<https://doi.org/10.1007/s00148-017-0647-y>.
- Rotkirch, A. (2020), "The wish for a child",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Vol. 18, pp. 49–61, [141]
<https://doi.org/10.1553/populationyearbook2020.deb05>.
- Rouzet, D. et al. (2019), "Fiscal challenges and inclusive growth in ageing societie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27, OECD Publishing, Paris, [38]
<https://doi.org/10.1787/c553d8d2-en>.
- Savelieva, K., M. Jokela and A. Rotkirch (2022), "Reasons to postpone childbearing during fertility decline in Finland", *Marriage & Family Review*, <https://doi.org/10.1080/01494929.2022.2083283>. [144]
- Seltzer, N. (2019), "Beyond the Great Recession: Labor Market Polarization and Ongoing Fertility Decline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Vol. 56/4, pp. 1463–1493, [64]
<https://doi.org/10.1007/s13524-019-00790-6>.
- Skakkebaek, N. et al. (2019), "Populations, decreasing fertility, and reproductive health", *The Lancet*, Vol. 393/10180, pp. 1500–1501, [25]
[https://doi.org/10.1016/s0140-6736\(19\)30690-7](https://doi.org/10.1016/s0140-6736(19)30690-7).
- Skirbekk, V. (2022), *Decline and Prosper!*,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Cham, [9]
<https://doi.org/10.1007/978-3-030-91611-4>.
- Sobotka, T. (2008), "Overview Chapter 6: The diverse faces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Vol. 19, pp. 171–224, [139]
<https://doi.org/10.4054/DemRes.2008.19.8>.
- Sobotka, T. et al. (2023), "Pandemic Roller-Coaster? Birth Trends in Higher-Income Countr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https://doi.org/10.1111/padr.12544>. [16]
- SSB (2022), *Time spent on different activities an average day (hours and minutes), by all activities, sex, age, contents and year*, Statistics Norway, <https://www.ssb.no/en/statbank/table/05994/tableViewLayout1/>. [149]
- Staatscommissie Demografische Ontwikkelingen 2025 (2024), *Gematigde Groei*, [163]
<https://open.overheid.nl/documenten/c06c6800-351f-401f-9d7f-942c756a264a/file>.

- Sundhedsdatastyrelsen (2021), *Assisteret reproduktion 2019*, [33]
<https://sundhedsdatastyrelsen.dk/da/tal-og-analyser/analyser-og-rapporter/sygdomme-og-behandlinger/assisteret-reproduktion>.
- Szabó-Morvai, Á. et al. (2019), *Evaluation of family policy measures and their impact on fertility*, HÉTFA Research Institute, [119]
https://hetfa.hu/wp-content/uploads/2019/12/2019_fertilitymodels-family-policy.pdf.
- Szántó, I. (2021), *Child and Family Benefits to Halt Hungary's Population Decline, 1965–2020. A Comparison with Polish and Romanian Family Policies*, <http://ahea.pitt.edu/ojs/index.php/ahea/article/view/429>. [118]
- Tan, P., S. Morgan and E. Zagheni (2016), "A Case for "Reverse One-Child" Policies in Japan and South Korea? Examining the Link Between Education Costs and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35/3, pp. 327–350, <https://doi.org/10.1007/s11113-016-9390-4>. [116]
- Tanturri, M. et al. (2015), *State-of-the-art report Childlessness in Europe*, https://www.ssb.no/befolkning/fodte-og-dode/artikler/understanding-the-positive-effects-of-the-covid-19-pandemic-on-womens-fertility-in-norway/_attachment/inline/9c05a6f9-0100-4218-bccd-1659e96ae303:86ccb07957174d85769bb67c8e9a5ccbc0247814/DP979_web.pdf. [19]
- Thévenon, O. and A. Gauthier (2011), "Family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a 'fertility-booster' with side-effects", *Community, Work & Family*, Vol. 14/2, pp. 197–216, <https://doi.org/10.1080/13668803.2011.571400>. [88]
- Thomas, J. et al. (2022), "The effect of leave policies on increasing fertility: a systematic review",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Vol. 9/1, <https://doi.org/10.1057/s41599-022-01270-w>. [95]
- Tridenti, G. and C. Vezzani (2022), "035 What to do when it fails? Teenage pregnancy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and Reproductive Biology*, Vol. 273, pp. e13–e14, <https://doi.org/10.1016/j.ejogrb.2022.02.064>. [28]
- Trimarchi, A. and J. van Bavel (2017), "Education and the Transition to Fatherhood: The Role of Selection Into Union", *Demography*, Vol. 54/1, pp. 119–144, <https://doi.org/10.1007/s13524-016-0533-3>. [50]
- Turner, K. et al. (2020), "Male Infertility is a Women's Health Issue—Research and Clinical Evaluation of Male Infertility Is Needed", *Cells*, Vol. 9/4, p. 990, <https://doi.org/10.3390/cells9040990>. [24]
- UN DESA (2023), *UN DESA Policy Brief No. 153. India overtakes China as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6]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wp-content/uploads/sites/45/PB153.pdf>.
- UN DESA Population Division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UN DESA/POP/2022/TR/NO. 3*, [7]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sites/www.un.org.development.desa.pd/files/wpp2022_summary_of_results.pdf.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0), *World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2020: Highlights*, [42]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pdf/family/World_Fertility_and_Family_Planning_2020_Highlights.pdf.
- van Wijk, D., H. de Valk and A. Liefbroer (2022), "Economic Precariousness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Dynamic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38/3, pp. 457–483, [70]
<https://doi.org/10.1007/s10680-022-09617-4>.
- Vignoli, D. et al. (2020), "A reflection on economic uncertainty and fertility in Europe: A Narrative Framework", *Genus*, Vol. 76/28, <https://doi.org/10.1186/s41118-020-00094-3>. [78]
- Vignoli, D. et al. (2021), "Economic Uncertainty and Fertility Intentions: The Causal Effect of Narratives of the Future", *DISTA working papers*. [79]
- Vignoli, D., V. Tocchioni and A. Mattei (2020), "The impact of job uncertainty on first-birth postponement",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Vol. 45, p. 100308, <https://doi.org/10.1016/j.alcr.2019.100308>. [65]

- WEF (2024), *The Global Risks Report 2024*, [81]
https://www3.weforum.org/docs/WEF_The_Global_Risks_Report_2024.pdf.
- Weinreb, A. (2023), *Israel's Demography 2023. Declining Fertility, Migration, and Mortality*, Taub Center for Social Policy Studies in Israel, <https://www.taubcenter.org.il/en/research/demography-2023-overview/>(accessed on 16 May 2024). [18]
- Yoo., J. (2022), *Comparative analysis of marriage and birth rates according to employee characteristics.*, [66]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accessed on November 2023).

참고 사항

¹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은 여성의 생식 보건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Ahn et al., 2021^[164]; Gaskins et al., 2015^[165]). 램버트 등(2023^[167])은 프랑스 패널데이터(panel-date)를 사용하여 비표준 시간 근무가 여성의 첫 자녀 출산 성향을 감소시키고, 출산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아침, 저녁 또는 주말 근무보다 야간 근무에서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²소득과 출산율의 관계는 출생 성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스타드와 뢰센(2017^[166])은 임금과 출산율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출산을 고려할 때 여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더 가파른 소득 프로필을 기다렸다가 활용하기를 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출산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타드와 뢰센(2017^[166])은 이를 임금-출산 관계의 하향 경사 부분으로 보고 임금 상승이 초기에 출산율을 감소시키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이상의 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곡선의 상향 경사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과 출산율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³니에토(2022^[71])는 인구 직원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비활동적이거나 실업 또는 자영업자일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남성 직원의 출산율을 증가시키지만 여성 직원의 출산율에는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OECD 사회지표 해석

한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한눈에 보는 사회2024*는 OECD 회원국에서 사회의 현재 상태, 전반적인 추세 및 가능한 동인에 대한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 목표는 현재 정책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사회적 대응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정책 조치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눈에 보는 사회’*에는 많은 OECD 회원국에서 발생한 출산율 감소를 분석하는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프레임워크의 변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엔, 1997^[1]) 여기에서는 지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 “**사회적 영역**”: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정책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인 일반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상태**”: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선택한 지표를 쉽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높은 빈곤율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원할 것입니다.
- “**사회적 대응**”: 사회적 상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NGO, 가족 및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그룹화합니다:

- “자활(self-sufficiency)”
- “형평성(equity)”
- “보건(health status)”
-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련 OECD 간행물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은 사회적 웰빙과 진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웰빙 지표를 제시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회*와 비교했을 때, *‘How's Life’*은 더 광범위한 결과 지표를 사용하지만, 정책 대응 지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OECD, 2020^[2]). 또한 한눈에 보는 사회의 특별 장(special chapter,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정책 분석과 권고 사항을 제공합니다.

OECD 회원국은 사회지표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지표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국가 간 지표의 비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보고서는 각 영역에 대해 최상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는 ‘절대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자는 사용된 자료의 특성과 비교 가능성의 한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는 최소 몇 개 국가인가?** 이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가 수준에서는 어떤 분류를 사용해야 하나요?** 사회지표는 국가 수준에서 연령, 성별, 가족 유형과 같은 사회적 하위 범주별 성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실용주의가 적용되며, 고려하는 지표에 따라 제시되는 분류는 다양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2장부터 8장까지는 주요 증거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표 중 일부는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입니다(예: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Health Statistics). 다른 지표는 임시로 수집되었거나 기존지표를 변형한 것입니다.

지표의 선정과 설명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가 이러한 위험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8년 OECD는 새로운 국가 간 설문조사, OECD 사회·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OECD, 2019^[3])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조사(3차)는 OECD 회원국 27개국의 18~64세 인구 27,000명 이상의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OECD, 2023^[4]).

설문조사는 위험 인식과 응답자 및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정부의 공공 서비스 및 혜택 제공에 대한 만족도, 향후 사회보호를 위한 희망 정책 또는 선호도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양자택일형 응답(binary-response) 또는 척도형 응답(scale-response)의 형태를 취하는 고정형 질문(fixed-response question)입니다. 설문은 각국의 언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2.1. 지표 목록

사회적 및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 및 우려
사회정책 및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만족도
정부 개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도

일반 사회적 영역 지표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할 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실적이 나쁘다거나 다른 국가에 비해 특정 분야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결혼 및 이혼, 인구 추이 등 일반적 맥락 지표는 이 보고서의 다른 지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3장 참조).

표 2.2. 일반 지표 목록

가구소득
출산율
이민
결혼 및 이혼
인구 추이

자활 지표

자활(self-sufficiency)은 근본적인 사회정책 목표입니다. 자활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 및 경제 참여와 일상생활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촉진됩니다. 일부 지표는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급 고용은 소득,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유급 고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유급 고용을 늘리는 것은 모든 OECD 회원국의 우선순위입니다(OECD, 2023^[6]). 실업 상태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또한 사람들이 고용을 찾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중요합니다(OECD, 2023^[6]). 학생 성과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OECD PISA가 측정하는 인적 자본 축적의 중요한 차원을 나타냅니다(OECD, 2023^[7]; 2023^[8]). 좋은 학생 성적은 유급 고용을 포함한 장기적인 자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퇴 후 기대여명은 노년층의 고용 옵션, 연금 수급 연령, 노년기 자활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적 대응입니다(OECD, 2023^[9]).

아래 표는 OECD 회원국이 국민과 그 가족의 자활보장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지표를 나열한 것입니다.

표 2.3. 자활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고용	은퇴 후 기대 수명
실업	
기술	
학생 성과	

형평성 지표

형평성(equity)은 또 다른 일반적인 사회 정책 목표입니다. 공평한 결과는 주로 사람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측정됩니다.

형평성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5장). 여기에는 사회적 서비스와 경제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성과에 대한 형평성이 포함됩니다. 기회나 결과의 공정한 분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또한 모든 형평성 차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사회적 상태 형평성 지표는 자원의 불평등에 국한됩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은 사회 전반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출발점입니다(OECD, 2023^[10]). 그러나 정책적 관심은 소득 분포의 하위 계층에 더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불평등과 더불어 빈곤 대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소 소득 급여 보장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생활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기간 동안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현금 이전은 주요 소득 안전망입니다. 실업률과 사회안전망 혜택 지표는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척도를 보완합니다. 모든 OECD 회원국은 자원을 재분배하고 다양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사람들을 보장하는 사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 사회 지출로 요약됩니다(OECD, 2023^[11]). 형평성 지표는 자활 지표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종합하면, 국가 사회 보호

시스템이 적절한 공급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및 시민의 자활(자급자족) 증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질의 *구매 가능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빈곤 위험을 줄이고 기회 평등을 개선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OECD, 2024_[12]).

표 2.4. 형평성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사회 지출
소득 빈곤	실업 및 사회 안전망 혜택
구매 가능한 주택	

보건지표

보건(health) 상태는 의료 시스템의 기본 목표이지만, 보건 상태를 개선하려면 사회적 결정 요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며, 건강을 사회정책의 중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6장).

사회와 보건 상태 사이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수준 향상, 공중 보건 지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기대여명*으로 측정되는 보건 상태의 상당한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자살*은 보건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살은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자살 행동의 원인은 복잡하며,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쉬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은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팬데믹이나 금융 위기와 같은 충격도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건 지출*은 보건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정책적 대응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건 및 의료 인력*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 접근성,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인구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와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보건지표는 *흡연 및 음주*이며, 둘 다 건강 및 사회적으로 수많은 해로운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문제는 보건 정책의 범위를 넘어 실업, 빈곤, 부적절한 주거와 같은 상호 관련된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 개입의 효과는 지출 수준 *자체보다* 의료 지원을 받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의 낮은 보장 범위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의 다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상태와 개입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지표는 *OECD 보건 통계*(OECD, 2023_[13])와 *한 눈에 보는 건강*(OECD, 2023_[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2.5. 보건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기대여명	보건 지출
자살	보건 및 의료인력
흡연 및 음주	

사회통합 지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종종 국가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됩니다. 그 의미에 대한 합의는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증상이 사회통합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사회통합(사회적 응집력)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드러납니다(7장).

*삶의 만족도*는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와 *투표 참여*는 사람들이 자국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척도입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측정은 이러한 폭력의 지속적이고 높은 유행률을 강조하기 위해 포함되었습니다(OECD, 2023_[15]; 2023_[16]). *온라인 활동*은 온라인 연결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또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과 같이 부정적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 지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통합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비교 가능한 대응 지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정책의 다른 차원(자활, 형평성, 보건)과 관련된 정책도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 2.6. 사회통합 지표 목록

사회적 상태	사회적 대응
삶의 만족도	투표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여성에 대한 폭력	
온라인 활동	

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3장부터 8장까지 다루는 각 지표는 텍스트 페이지와 차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패턴을 따릅니다. 변화를 고려하는 기간의 선택은 부분적으로 자료제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조사합니다: 1) 장기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지난 세대에 걸쳐, 또는 2) 최근 경제 변동이 사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기간에 걸쳐 변화를 조사합니다.

“정의 및 측정” 상자에는 사용된 자료의 정의와 잠재적인 측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와 있습니다.

각 지표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OECD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각 차트 오른쪽 하단의 통계 StatLink를 클릭하면 더 많은 국가의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OECD (2024),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s://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 [12]
- OECD (2023), *Breaking the Cycle of Gender-based Violence: Translating Evidence into Action for Victim/Survivor-centred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133e75c-en>. [16]
-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a7afb35-en>. [14]
- OECD (2023), *Joining Forces for Gender Equality: What is Holding us Bac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d48024-en>. [15]
- OECD (2023),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0aea928-en>. [4]
-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8785bba-en>. [5]
- OECD (2023),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13]
- OECD (2023), *OECD Income (IDD) and Wealth (WDD) Distribution Databases*,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10]
- OECD (2023), *OECD Skills Outlook 2023: Skills for a Resilient Green and Digital Transi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7452f29-en>. [6]
-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8055dd-en>. [9]
-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The State of Learning and Equity in Education*,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3f23881-en>. [7]
-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I): Learning During – and From – Disruption*,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97db61c-en>. [8]
- OECD (2023),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11]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2]
- OECD (2019), *Main Findings from the 2018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266e48a-en>. [3]
- United Nations (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https://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f/seriesf_67e.pdf. [1]

3

사회적 위험과 정부 효과성에 대한 인식

한눈에 보는 사회의 목적

*한눈에 보는 사회2024*는 OECD 회원국에서 사회의 현재 상태, 전반적인 추세 및 가능한 동인에 대한 정량적 증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 목표는 현재 정책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사회적 대응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정책 조치가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눈에 보는 사회’*에는 많은 OECD 회원국에서 발생한 출산율 감소를 분석하는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프레임워크의 변형을 기반으로 합니다 (유엔, 1997^[1]) 여기에서는 지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 “**사회적 영역**”: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정책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인 일반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들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상태**”: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선택한 지표를 쉽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높은 빈곤율보다는 낮은 빈곤율을 원할 것입니다.
- “**사회적 대응**”: 사회적 상태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NGO, 가족 및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한 한눈에 보는 사회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그룹화합니다:

- “자활(self-sufficiency)”
- “형평성(equity)”
- “보건(health status)”
- “사회통합(social cohesion)”

관련 OECD 간행물인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은 사회적 웰빙과 진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웰빙 지표를 제시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회*와 비교했을 때, *‘How's Life’*은 더 광범위한 결과 지표를 사용하지만, 정책 대응 지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OECD, 2020^[2]). 또한 한눈에 보는 사회의 특별 장(special chapter,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정책 분석과 권고 사항을 제공합니다.

OECD 회원국은 사회지표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지표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국가 간 지표의 비교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 보고서는 각 영역에 대해 최상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는 ‘절대적’ 비교 가능성이 있는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독자는 사용된 자료의 특성과 비교 가능성의 한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는 최소 몇 개 국가인가?** 이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가 수준에서는 어떤 분류를 사용해야 하나요?** 사회지표는 국가 수준에서 연령, 성별, 가족 유형과 같은 사회적 하위 범주별 성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실용주의가 적용되며, 고려하는 지표에 따라 제시되는 분류는 다양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2장부터 8장까지는 주요 증거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표 중 일부는 OECD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입니다(예: Social Expenditure Database and OECD Health Statistics). 다른 지표는 임시로 수집되었거나 기존지표를 변형한 것입니다.

지표의 선정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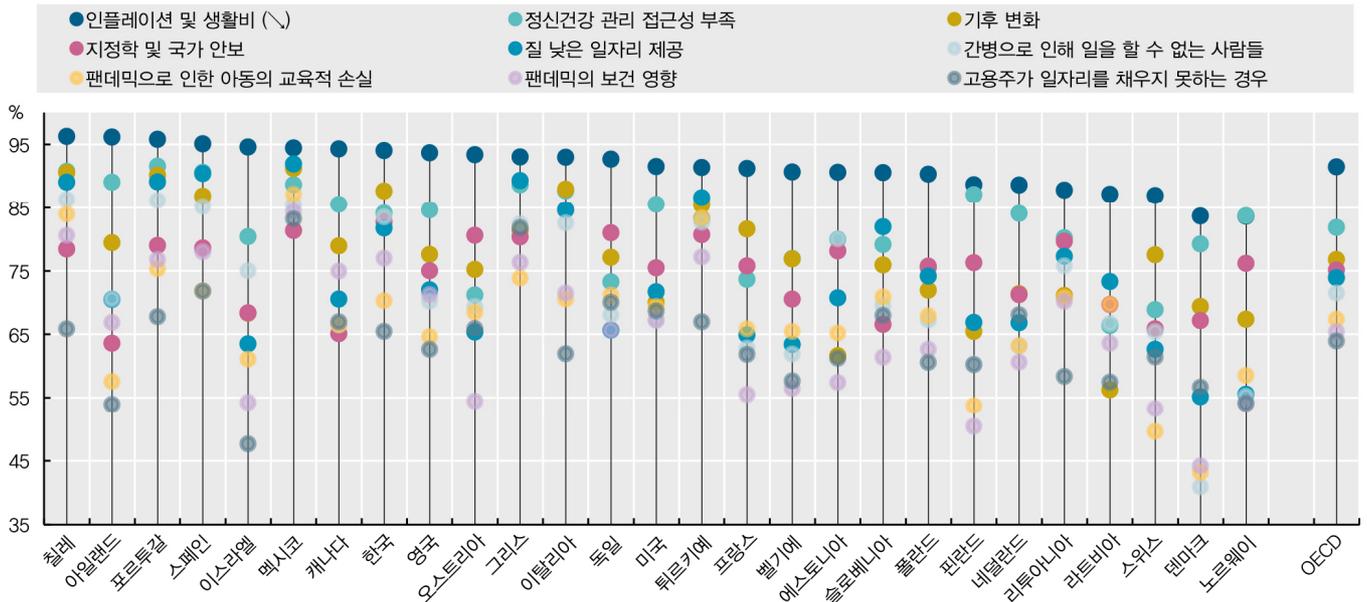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정부가 이러한 위험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8년 OECD는 새로운 국가 간 설문조사, OECD 사회·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OECD, 2019^[3])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조사(3차)는 OECD 회원국 27개국의 18~64세 인구 27,000명 이상의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및 미국(OECD, 2023^[4]).

설문조사는 위험 인식과 응답자 및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 정부의 공공 서비스 및 혜택 제공에 대한 만족도, 향후 사회보호를 위한 희망 정책 또는 선호도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양자택일형 응답(binary-response) 또는 척도형 응답(scale-response)의 형태를 취하는 고정형 질문(fixed-response question)입니다. 설문은 각국의 언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전반적으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각 '시사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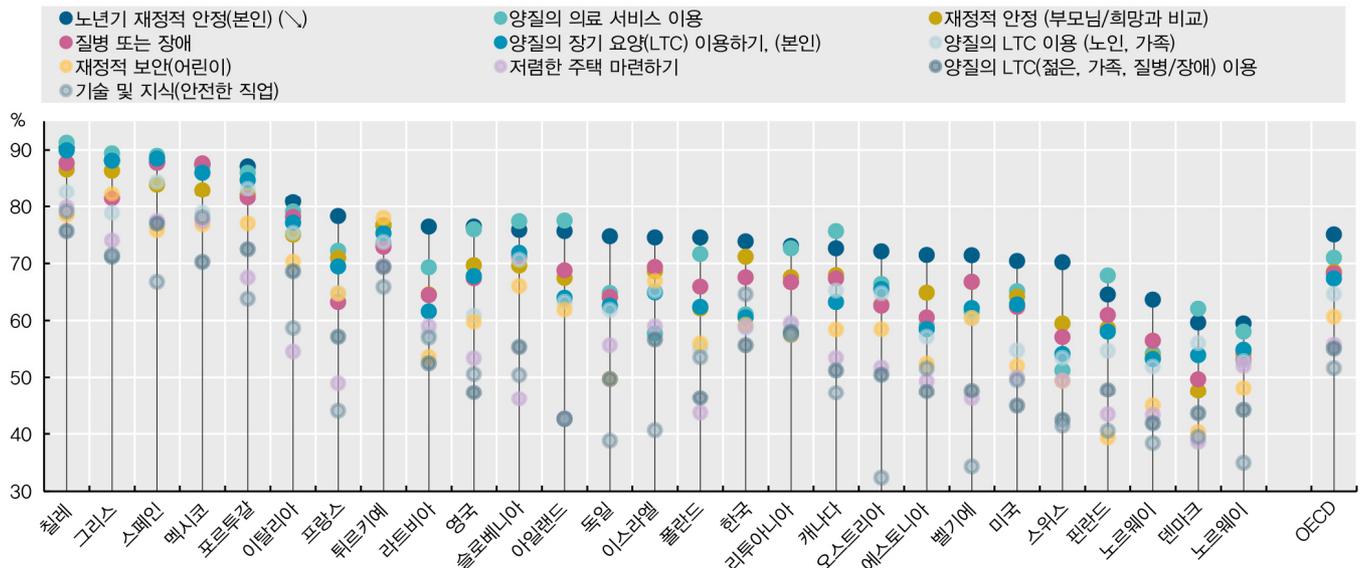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vxjmch>

그림 3.2. 장기적으로 응답자들은 노년기의 재정적 안정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식별된 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0y4ikt>

사회 정책 및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비OECD 국가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지만, 사회보장 중 일부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회적·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응답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응답자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조치에 불만족하고 있습니다(그림 3.3). 국가별 평균적으로 절반 미만(45%)이 정부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33%는 정부가 너무 많이 했다고, 14%는 너무 적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8개 국가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약간) 과반수였으며,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에서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라트비아(30%)와 폴란드(29%)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55%)이 가장 높았습니다. 2개 국가(덴마크와 핀란드)에서만 정부가 팬데믹 대응에 전반적으로 너무 적게 했다는 응답자보다 너무 많이 했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 두 국가에서는 사회 보호와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역사적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일반적인 사회 복지 혜택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좀 더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혜택 접근이 간단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그림 3.4).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6%)가 필요한 경우 공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으며, 약 1/4(26%)은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모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포르투갈 같은 국가에서는 특히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반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정책 영역의 사회 보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그림 3.5). 교육, 공공 안전, 보건, 고용, 가족 지원, 노인 장기요양, 장애/무능력 관련 요구, 주택 등 모든 영역에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별로 교육, 공공 안전, 보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2020년에 발표된 사회적·경제적 위험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11개 국가에서 양질의 저렴한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만족도가 낮은 순서대로): 핀란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페인(그림 3.5). 벨기에(55%), 네덜란드, 스위스(모두 53%)의 공공 보건 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등 일부 국가는 특정 정책 영역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응답자들은 공공 주택, 장애 및 무능력 관련 서비스,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 주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둘 다 17%).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또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스와 함께 공공 장애, 무능력 및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입니다(그림 3.5).

공급 부족과 투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겪은 후 현재의 도전에 직면한 정부는 더 많은 가구의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 및 측정

그림 3.3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23. “전반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너무 많이 했습니까, 적당히 했습니까, 아니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응답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이 했다”, “정부가 충분히 했다”,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선택할 수 없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3.4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13. “다음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까? 현재 서비스나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귀하의 경험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해 주십시오. 현재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면, 만약 혜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에 따라 답해 주세요: 나는 공공 혜택이 필요하다면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5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10. “다음 진술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나는[...]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양질의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4와 3.5 모두 응답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은 것도 아님”, “동의함”, “강하게 동의함”, “선택할 수 없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OECD 사회적·경제적 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 2022의 배경 설문지,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설문 조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2장을 참고하세요.

참고문헌

OECD (2023),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0aea928-en>.

OECD (2022), *Building Trust to Reinforce Democracy: Main Findings from the 2021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uilding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07f99c-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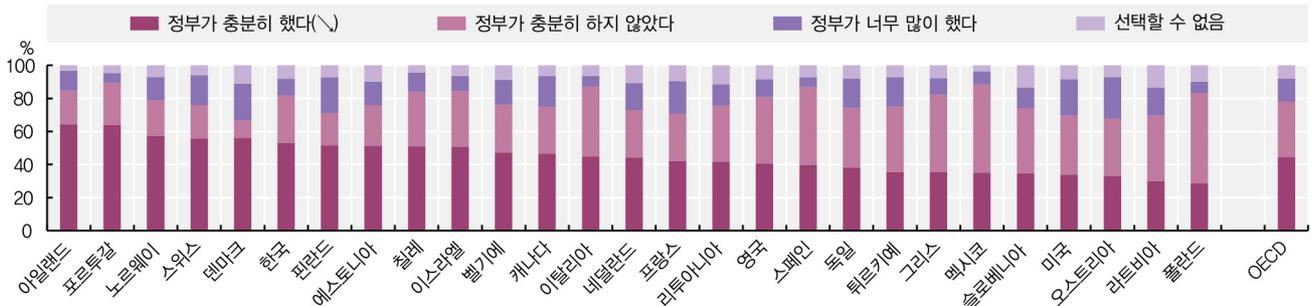
OECD (2021), *Brick by Brick: Building Better Housing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53b043-en>.

OECD (2021), *Main Findings from the 2020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9e85cf5-en>.

OECD (2019), *Main Findings from the 2018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266e48a-en>.

그림 3.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조치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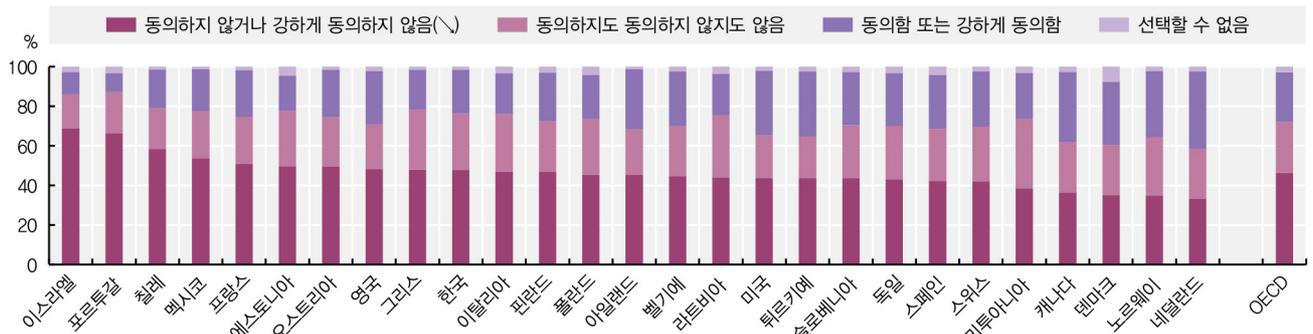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너무 적게 또는 충분히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vxjmch>

그림 3.4. 필요할 때 공공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거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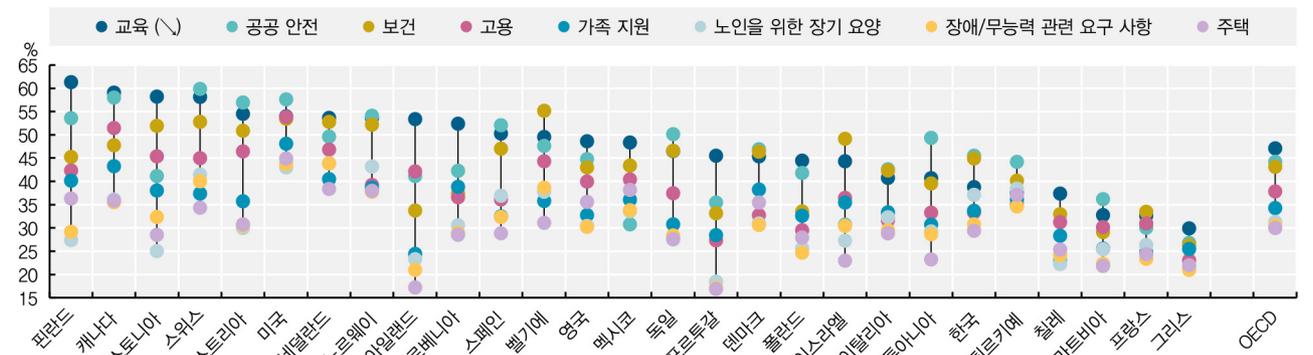
해당 문항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필요한 경우 공공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pev5na>

그림 3.5. 교육, 공공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나는 필요한 경우... 분야에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동의함 또는 강하게 동의함, 국가별 응답자 비율,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giwfmz>

정부 개입 및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도

이전 RTM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많은 응답자가 사회 보호 분야에서 더 많은 정부 개입을 지지했습니다. RTM은 또한 응답자들이 긴급한 과제와 정책 영역별 장기 투자 모두에 대한 정부 개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명합니다.

현재 자국이 직면한 긴급한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질문에 RTM 응답자의 대다수는 정부가 2022년 생활비 위기에 대처하는데 더 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림 3.6). 응답자의 73%는 내년에 정부가 '국민들이 생활비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정부가 생활비 위기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취약한 노인과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는 '시사 모듈'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분야로 꼽혔으며, 응답자의 59%가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고 부모가 자녀의 불안정한 학교 및 보육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 등 코로나19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는 우선순위가 낮았습니다(그림에 포함되지 않음).

정부가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필수품(식량, 주택, 에너지, 부채 상환)을 걱정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그림 3.7). 마찬가지로, 2022년에는 사회 안전망이 역사적으로 취약한 국가에서 생활비를 걱정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에서 보건 서비스, 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응답자들이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을 원하는 분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그림 3.8).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43%는 보건 서비스를, 37%는 노령 연금을, 30%는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고, 소득의 2% 추가 세금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개선 재원을 마련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은 여전히 가장 많이 선택된 정책 분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5개국에서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위해 소득의 2%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

연금 시스템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다른 사회 정책 영역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없는 국가에서도 상대적으로 큼니다. 스위스, 독일, 리투아니아. 스위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의 생산연령인구 간 빈곤율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응답자의 46%가 더 나은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소득의 2%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그리스(46%)와 비슷한 수준이며 다른 두 RTM 국가의 지원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칠레(51%)와 슬로베니아(48%)입니다(그림 3.8).

정의 및 측정

그림 3.6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24. "현재 글로벌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귀국 정부는 내년에 다음 중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는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5가지 우선순위 범주에 대해 "더 우선시한다" 또는 "훨씬 더 우선시한다"고 답한 응답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그림 3.7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22. "2022년 생활비를 생각했을 때, 귀 가구의 지불 능력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필수 식료품, 주택 비용, 주택 에너지 비용, 부채 상환/상환 비용의 증가". 데이터는 네 가지 응답 항목 모두에 '어느 정도 우려된다' 또는 '매우 우려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응답자들에게도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Q17. "귀하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는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또는 "정부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림 3.8의 경우 응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Q19. "[...]의 제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득의 2%를 세금/사회공헌금으로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 그림은 국가별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5가지 정책 분야를 보여줍니다.

출처: Background Questionnaire from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설문 조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2장을 참고하세요.

참고문헌

OECD (2023),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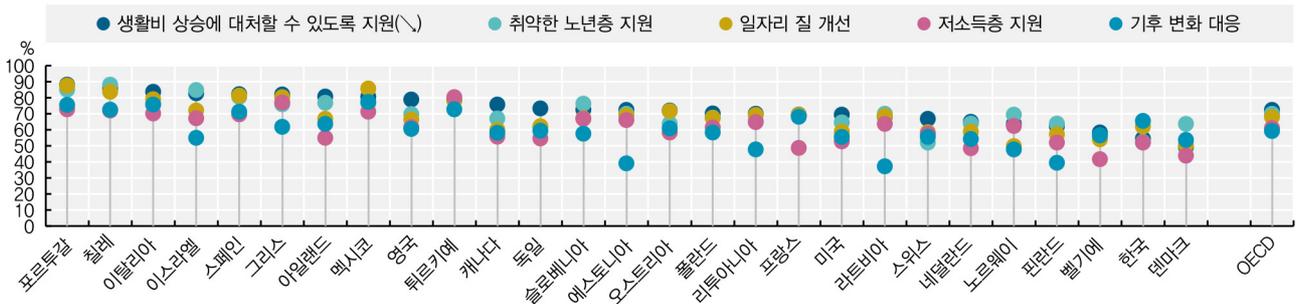
<https://doi.org/10.1787/70aea928-en>.

OECD (2019), Poverty rate (indicator).

<https://doi.org/10.1787/0fe1315d-en>.

그림 3.6. 올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비 위기 극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부가 각 카테고리의 우선순위를 더 많이 또는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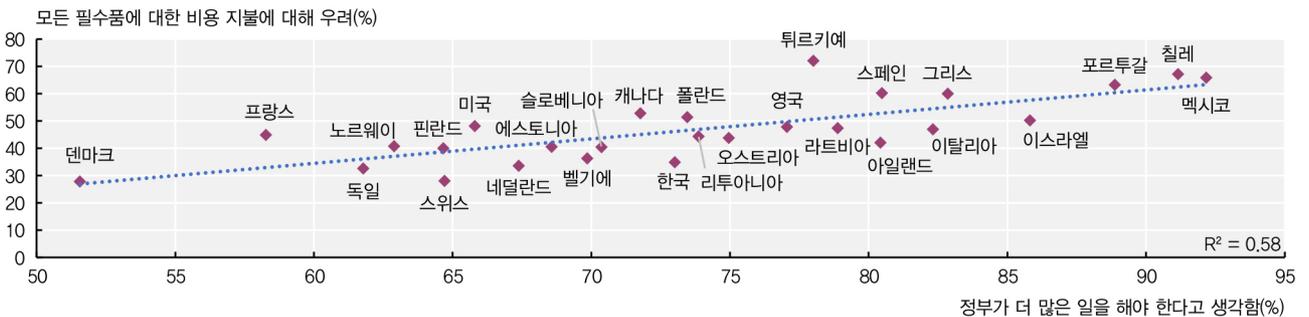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1i76z9>

그림 3.7. 생필품 비용 지불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는 곳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4대 필수품(식량, 주거, 주택 에너지, 부채) 모두에 대한 가구의 지불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정부가 경제 및 사회보장, 웰빙을 위해 더 많이 또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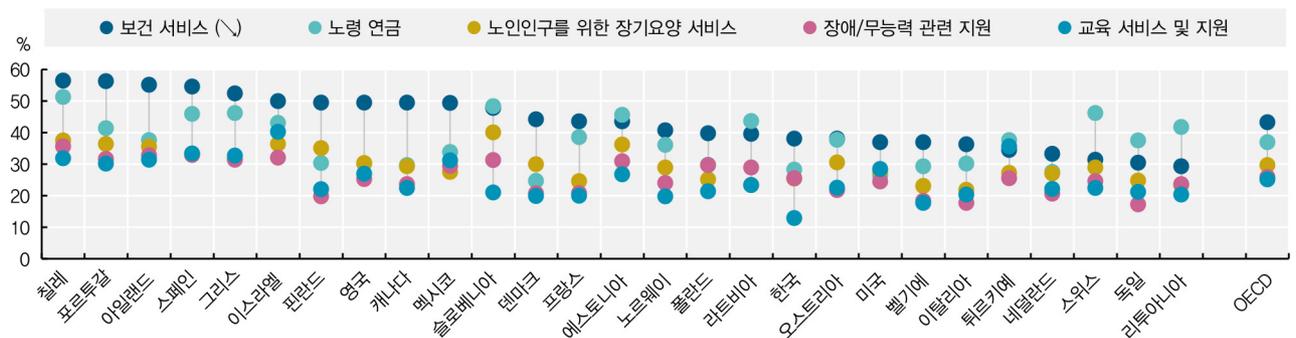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koqwts>

그림 3.8. 응답자들은 더 나은 접근성을 위해 소득의 2%를 세금 및 사회 공헌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의료 및 고령자 지원에 대한 지출을 더 늘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5개 공공 서비스의 제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득의 2%를 세금/사회 공헌금으로 추가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국가별,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ytcu9>

4 일반 지표

가구소득

가처분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물질적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빈곤과 불평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매력 평가(PPP)를 사용하여 각국의 통화를 달러로 환산하면 국가 간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2021년 룩셈부르크의 중위 가처분 소득은 멕시코보다 8배, 에스토니아보다 약 2배 높았습니다(그림 4.1). 중위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로는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 등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미국은 가처분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국가입니다. 주요 협력국의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OECD 회원국보다 낮습니다.

장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중위 소득은 1990년대 이후 분배 하위 소득보다 빠르게, 상위 소득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 4.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증가율은 이 기간에 공공 현금 이전과 개인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십 년보다 분배 전반에 걸쳐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는 평균적으로 분포 전반에 걸쳐 실질 소득이 규칙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코로나19)까지는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전례 없는 대응책을 마련한 덕분에 하위 10%의 실질 소득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 평균 및 중위소득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2020년에는 실질 최상위 소득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4분기 사이에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자료가 있는 22개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1인당 명목 가계 가처분 소득의 전년 대비 변화를 2% 포인트 앞질렀습니다(그림 4.3). 이 격차는 특히 칠레(명목 가계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와 미국에서 높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에서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을 앞질렀습니다.

정의 및 측정

연간 균등화 가계 가처분소득 중위값 데이터는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처분 소득은 공적 현금을 제외한 시장 소득(근로 및 자본 소득)입니다. 받은 이체금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포함합니다. 정부 및 민간

기관이 가구에 제공하는 현물 서비스, 소비세, 주택 소유로 인한 소득 이전은 제외됩니다. 세금을 빼고 현금 이전을 더한 가구소득은 가족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눈 등가 척도를 사용하여 가구 규모별 필요의 차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런 다음 조정된 소득은 가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물가 및 구매력 평가(PPP) 통계에서 가져온 민간 소비 환율에 대해 구매력 평가(PPP)를 사용하여 국가 통화로 측정된 소득을 미국 달러(USD)로 환산했습니다. 이러한 PPP는 미국에서 1달러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각 국가에서 필요한 자국 통화의 양을 반영합니다. 소득 및 PPP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 오류의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 간 5% 이하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인당 명목 가계소득은 1인당 실질 총 가처분 가계소득과 소비자 물가지수(CPI)로 계산합니다.

참고문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Caisl, J., et al. (2023), "The uneven impact of high inflation",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No. 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9e2b8a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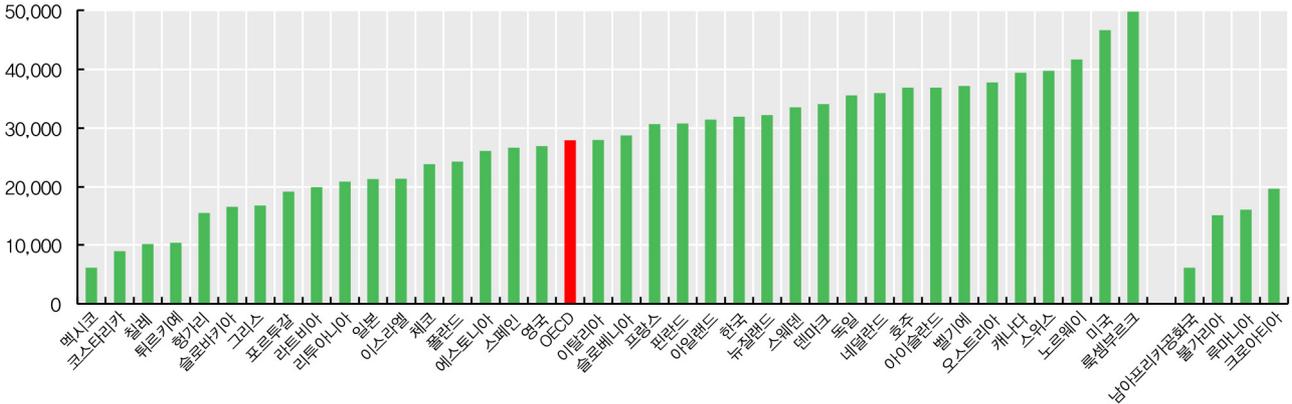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1: 콜롬비아에 대한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음.

그림 4.2: OECD-20은 장기 소득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20개 OECD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호주,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2012년부터 가구소득 표준 방법론의 변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자료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림 4.1. OECD 회원국 간 중위 소득의 8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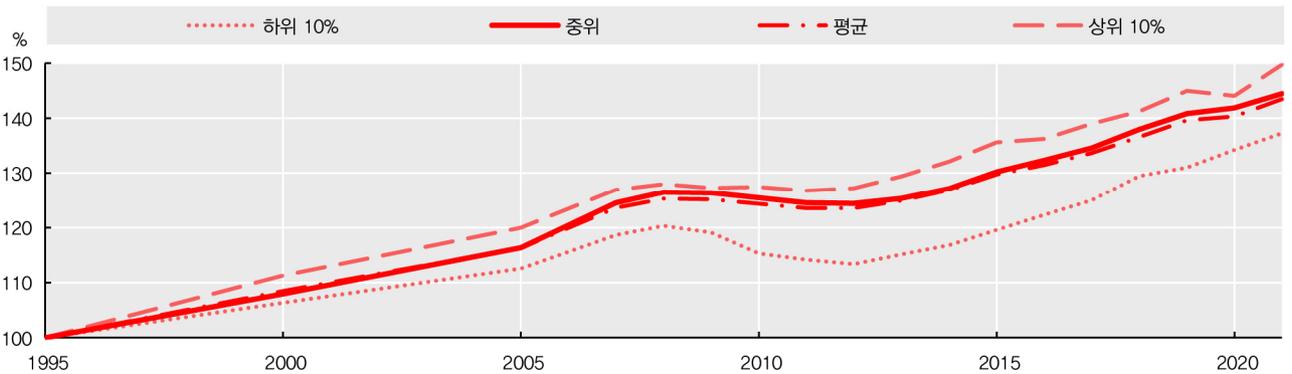
연간 균등화 가처분 소득 중위, 2021년, PPP 환율 기준 USD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1or2b8>

그림 4.2. 지난 30년 동안 하위 10%의 소득은 평균, 중위, 상위 소득보다 더 느리게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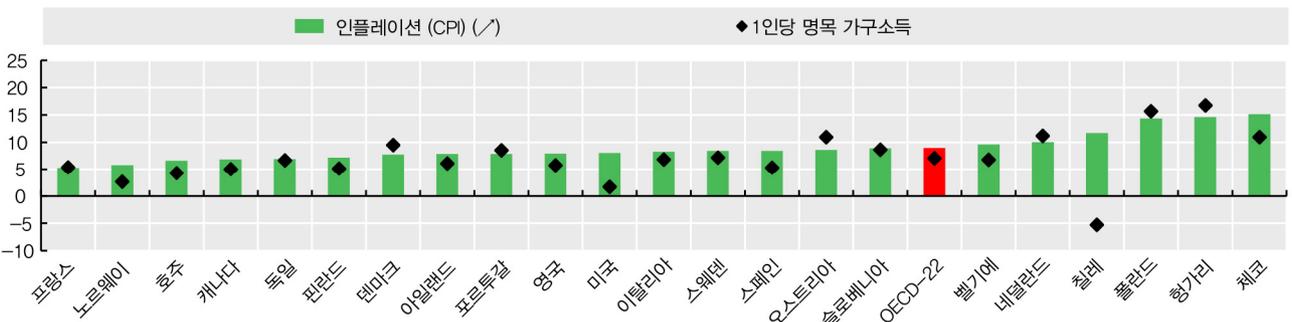
소득분위별 실질 소득 증가율, OECD-20 평균(1995년=100%)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6jn1k>

그림 4.3. 202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질렀다.

연간 물가(인플레이션) 및 1인당 명목 가계소득 성장률, 2021-4분기~2022-4분기



출처: OECD (2023), OECD Household Dashboar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OECD (2023), OECD Consumer Price Indices (CPI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RICES_CPI.
StatLinks <https://stat.link/y8dbzu>

출산율

합계 출산율(TFR)은 가임기 여성 사망률이 없다고 가정할 때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을 감안할 때 여성 1인당 평생 동안 태어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냅니다. 여성 1인당 약 2.1명의 자녀를 낳는 합계 출산율로 인구가 대체됩니다.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감소하여 1960년 가임기 여성 1인당 평균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그림 4.4). 특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한국, 멕시코, 터키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들 국가는 과거 여성 1인당 평균 4~5명의 자녀를 낳았던 국가들입니다. 2020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2021년에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소폭 증가했고, 2022년에는 뉴질랜드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33개 OECD 국가 중 31개국에서 다시 감소했습니다.

2022년 이스라엘이 2.9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체 출산율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유일한 OECD 회원국입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으며, 영미권과 북유럽 국가들도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남유럽과 일본이며, 한국은 여성 1인당 0.78명으로 가장 낮은 TFR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협력국의 출산율은 대체로 OECD 회원국보다 높으며,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체 수준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2022년 사이 모든 주요 배우자 경제에서 출산율이 감소했습니다.

피임에 대한 접근성, 여성 교육의 증가, 노동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시간,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벽, 낮은 주택 경제성 등이 모두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를 갖는 시기가 늦어지는 현상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30세 미만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그림 4.5). 지난 10여 년 동안 30~34세 여성의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5~29세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넘어섰고, 35~39세 여성의 출산율도 20~24세보다 높았다. 나아가 최근에는 40~44세 여성의 OECD 평균 TFR이 청소년 출산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산율은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00명당 2명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50명 내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늦게 가족을 시작한다는 사실은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OECD 평균 26.4세에서 29.5세로 3세 상승했습니다(그림 4.6). 2022년 여성의 평균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로바키아와 터키의 첫 출산 연령은 약

27세로 가장 낮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약 32세, 한국은 33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의 및 측정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사망률이 없다고 가정하고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을 기준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입니다. 이는 5년 간격으로 정의된 연령별 출산율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순 이민이나 사망률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총 출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1인당 2.1명의 자녀는 폭넓은 인구 안정성(‘대체율’)을 보장합니다.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5년 연령대별로 표시됩니다.

출산율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시민 인구 등록부나 기타 행정 기록에서 가져옵니다. 이 데이터는 유엔 및 유로스탯의 권고에 따라 조율됩니다.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은 유로스탯 인구 통계 및 국가 통계청을 기반으로 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OECD (2023),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OECD (2023), *Exploring Norway’s Fertility, Work, and Family Policy Trend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0c7bddf-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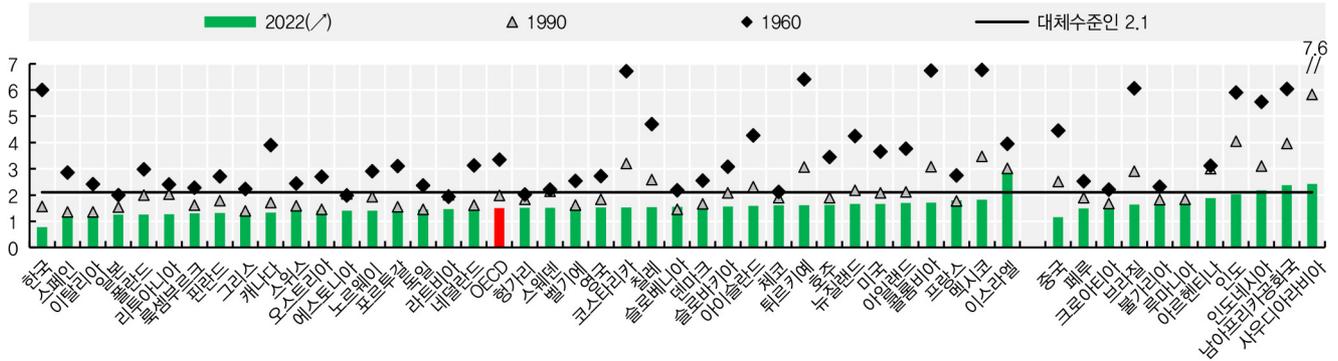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4: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영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2022년이 아닌 2021년 자료입니다.

그림 4.6: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대상으로 하며, 호주와 칠레는 2022년, 영국은 2020년, 캐나다는 2016년이 아닌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4.4. OECD 전체의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대체율보다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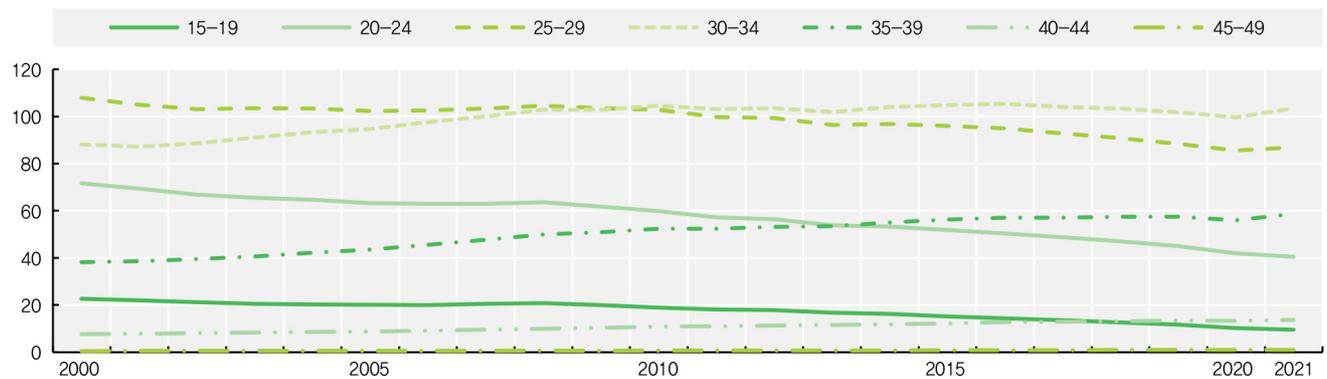
1980년, 2000년,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15~49세 여성 1인당 자녀 수



출처: OECD (2023), "SF2.1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6h1btc>

그림 4.5. 젊은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했지만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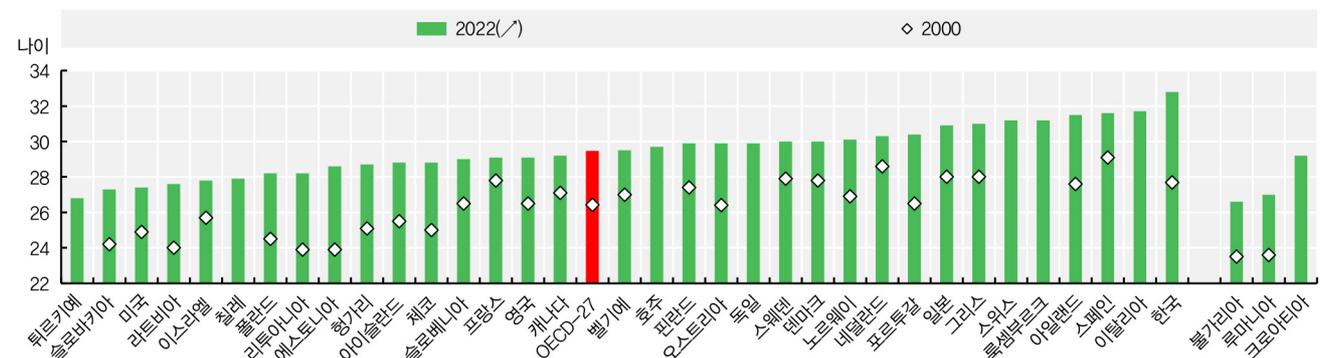
5년 연령대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OECD 평균



출처: OECD (2023),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based from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DEMO_FRATE/default/table?lang=en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tatLinks <https://stat.link/w8uoz9>

그림 4.6.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20년 동안 3세 증가했습니다.

첫 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 2000년과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2023), "SF2.3 Age of mothers at childbirth and age-specific fertility",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based from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product/view/DEMO_FIND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tatLinks <https://stat.link/afg357>

이민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연간 신규 영주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그림 4.7). 영구 이민자 유입이 1.5%를 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며, 이 중 3개국은 뉴질랜드(3.0%), 스위스(1.7%)와 함께 OECD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입니다(에스토니아(2.4%), 아이슬란드(3.6%), 룩셈부르크(4.4%). 일본, 멕시코, 슬로바키아는 OECD 회원국 중 영주 이민자 수가 전체 인구의 0.1% 미만인 유일한 3개국입니다.

OECD 회원국 전체에서 2022년 영주 이민자 수는 26% 증가했으며, OECD 국가로의 영주 이주는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구 이민은 인도주의적 이민과 노동 이주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후자는 많은 OECD 회원국이 겪고 있는 노동력 및 기술 부족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인구 대비 영주 이민은 2013~19년보다 2022년에 더 높았습니다(그림 4.7). 2013~19년과 2022년 사이에 신규 영주 이민 유입이 1% 포인트 이상 증가한 국가는 지난 몇 년간 유입이 증가한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였으며, 뉴질랜드는 2022년 특정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에 대한 일회성 거주 비자 제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영주 이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2022년 인구의 10% 이상이 외국 태생이었습니다(그림 4.8).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에서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4명 중 1명 이상이 외국 태생이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외국 태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 이스라엘, 발트 3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전체 인구에서 외국 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이민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반면, 3% 미만인 국가는 일본, 멕시코, 폴란드 3개국뿐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민자의 17%는 모국에서 최대 5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외국 태생 여성이 자국 태생 여성보다 출산율이 높지만, OECD 회원국의 3분의 2에서 이주민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2.1명)이 대체율(2.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림 4.9). 자국민 여성과 외국 태생 여성 간의 출산율 수준 차이는 OECD 회원국마다 다릅니다.

코스타리카가 2.3명으로 자국민(여성 1인당 1.4명)과 외국 태생 여성(여성 1인당 3.7명)의 합계출산율 격차가 가장 큰 반면, 네덜란드가 0.04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호주,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슬로바키아, 터키 등 9개 국가에서만 모국 출생 여성의 TFR이 외국 출생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정의 및 측정

영구 이동은 노동, 가족, 인도주의 또는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장기 거주자의 입국을 의미하며 외국인만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입에는 신분 변경, 즉 임시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이 표준화된 정의는 데이터가 있을 때 국가 간 이민의 규모와 구성을 가장 비슷하게 비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민자는 우선 출생 시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태생의 인구는 내국인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는 부모의 모국에서 외국 태생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태생인 혼혈인 경우, 외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도착한 경우, 외국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경우 등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민자의 체류 기간에 따른 데이터도 제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을 온 여성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현지 국가에 정착한 직후까지 첫 출산을 연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 태생 여성의 출산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TFR은 “평생 출산율”(lifetime fertility, 특정 코호트의 가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태어난 자녀 수)보다 기계적으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TFR)의 정의는 “출산율”을 참조하세요.

참고문헌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0f40584-en>.

OECD/European Commission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23: Settling I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d5020a6-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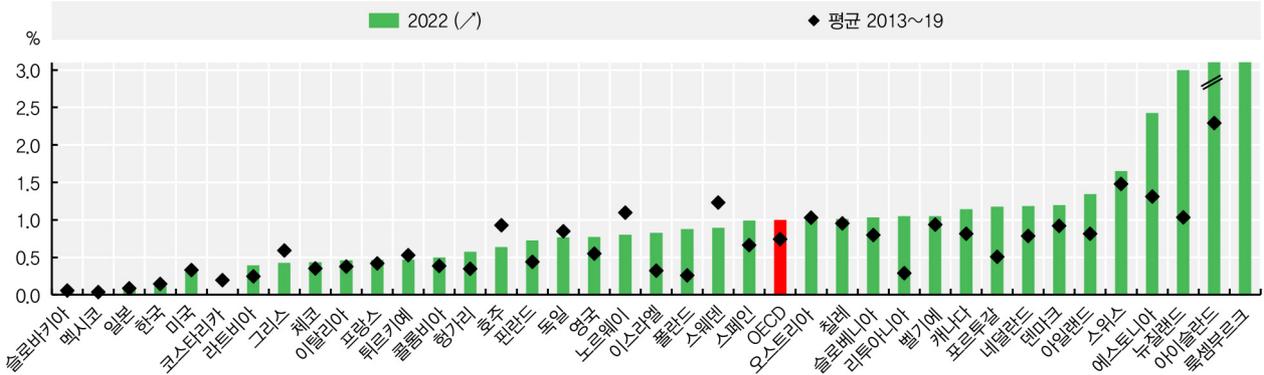
그림 4.7: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터키의 자료는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4.8: OECD 평균은 가장 평균을 나타냅니다. 자료는 201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와 2022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자료는 외국 태생 인구가 아닌 외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의 체류 기간별 자료는 현지에 5년 이하로 체류하는 이주민과 6년 이상 체류하는 이주민을 구분합니다. 한국의 자료에는 최근 5년 내 귀화한 이민자가 포함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최근 이민자를 5년 전에 다른 나라에 거주한 이민자로 정의합니다.

그림 4.9: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일본, 한국, 미국(2020년), 프랑스(2021년), 영국(2018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자료는 2019년 기준입니다. 일본에 대한 자료는 어머니의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출산율 척도로서의 TFR과 관련된 편향은 가족(배우자) 이민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프랑스의 경우 특히 강합니다.

그림 4.7.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연간 이민자 수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OECD 회원국의 영구 이민자 수,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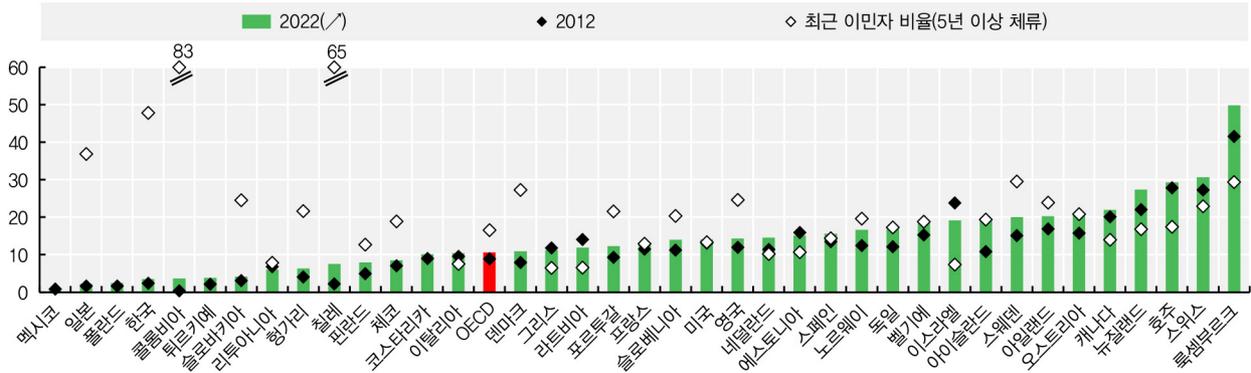


출처: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https://doi.org/10.1787/b0f40584-en>.

StatLinks <https://stat.link/wsl9hg>

그림 4.8. OECD 인구의 10명 중 1명은 해외 출생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 태생 비율, 2012년 및 2022년, 15~64세 최근 이민자 비율,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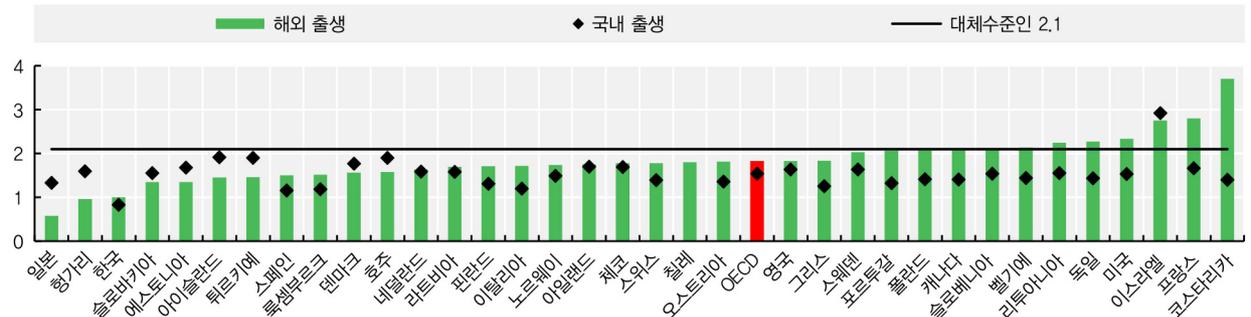


출처: OECD/European Commission (2023),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2023: Settling In*, <https://doi.org/10.1787/1d5020a6-en>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https://doi.org/10.1787/b0f40584-en>.

StatLinks <https://stat.link/zgy3h9>

그림 4.9. OECD 회원국 중 3분의 2에서 이주민의 출산율이 대체율보다 낮습니다.

국내 및 해외 출생 여성의 합계 출산율(TFR), 2020년 또는 최근 연도 가능



출처: OECD (2023),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3*, <https://doi.org/10.1787/b0f40584-en>.

StatLinks <https://stat.link/g8xp5n>

결혼과 이혼

결혼과 이혼율은 관계, 가족 구조, 개인과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웰빙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 동향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2년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1,000명당 3~5건이며, OECD 평균은 4.3건입니다(그림 4.10). 콜롬비아의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1.4건으로 매우 낮은 반면 헝가리, 라트비아, 터키, 미국은 1,000명당 6건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1990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인구 1,000명당 5~7건의 혼인율을 보였습니다. 헝가리와 아이슬란드만이 1990년과 2022년 사이에 혼인율이 증가했습니다.

조이혼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국가별로 다음과 같이 낮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인구 1,000명당 0.6건의 이혼이 2022년 칠레에서는 1,000명당 3.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90년과 2022년 사이에는 13개 OECD 회원국에서는 이혼율이 증가했지만 16개 국가에서는 감소하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감소는 미국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증가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규모 제한, 여행 제한 등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에 시행된 제한 조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0년 혼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OECD 회원국 35개국의 평균적으로 혼인율은 25% 감소했습니다. 2021년에는 혼인율이 다시 10% 증가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2020년 이혼율은 10% 감소했습니다.

결혼을 감소와 이혼을 안정화는 결혼 연령 상승을 동반합니다. OECD 전체에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크게 높아졌습니다(그림 4.11). 1990년대 초, OECD 회원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25세, 남성 28세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 평균 연령이 여성의 경우 32세, 남성의 경우 34세로 높아졌습니다. 초혼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눈에 띄는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지중해와 북유럽 국가에서는 평균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터키에서는 평균 초혼 연령이 여성의 경우 25세, 남성의 경우 28세 미만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형성을 향한 다양한 전환 경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동거가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형태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결혼을 연기하고 종종 동반자 관계의 표준으로 결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동성 배우자의 결혼을 허용한 OECD 국가는 없었지만, 2022년까지 25개 OECD 회원국 또는 적어도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표 4.1). 이용 가능한

자료가 있는 OECD 회원국 20개국의 평균적으로 동성 결혼은 2021/22년 전체 결혼의 2.2%를 차지했으며, 아이슬란드에서는 1.2%부터 호주와 영국에서는 3%가 넘었습니다. 4개국(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2020년대 초반에는 남성 동성 결혼보다 여성 동성 결혼이 더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성 결혼의 56%는 여성 간 결혼이었습니다.

정의 및 측정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 건수로 정의됩니다.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은 매년 인구 1,000명당 해산되는 혼인 건수로 정의됩니다.

초혼 평균 연령은 초혼 당시의 평균 연령(연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이 측정값은 성별에 따라 세분화 되어 남성과 여성의 평균을 따로 계산합니다.

특정 연도의 동성 결혼 비율입니다. 데이터는 각국 통계청에서 수집한 것으로, 대부분 OECD(2020), *Over the Rainbow? The Road to LGBTI Inclusion*, <https://doi.org/10.1787/8d2fd1a8-en>

참고문헌

OECD (2023),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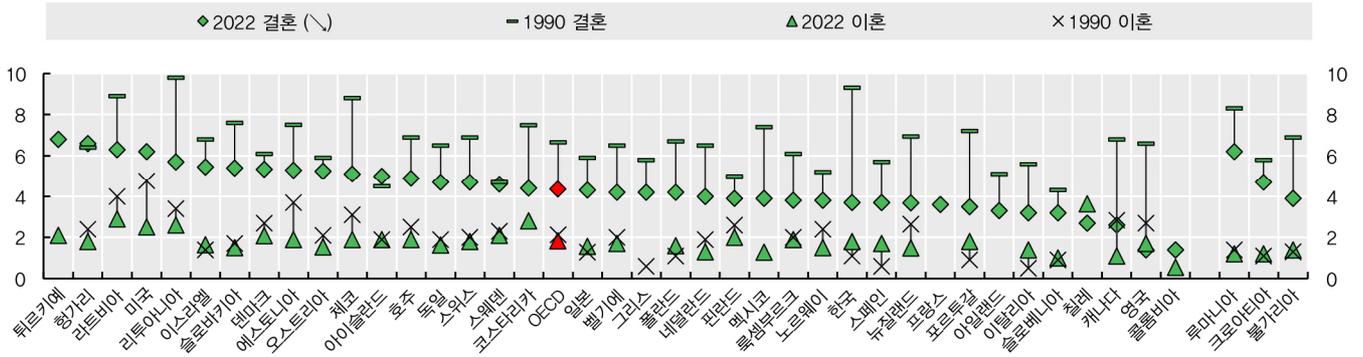
그림 4.10: 칠레, 이스라엘, 아일랜드는 2021년,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영국은 2020년입니다.

그림 4.11: 특정 연도는 StatLink를 참조하세요. 멕시코의 자료는 초혼이 아닌 모든 결혼을,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자료는 초혼 중위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표 4.1: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의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2020년 자료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2010년은 멕시코 시티를 기준으로 하며, 할리스코에서는 2016년, 베라크루스에서는 2021년, 멕시코 주에서는 2022년입니다. 현재 26개 연방 기관(32개 중)에서 허용됩니다.

그림 4.10. 지난 수십 년 동안 이혼율은 안정된 반면 결혼율은 감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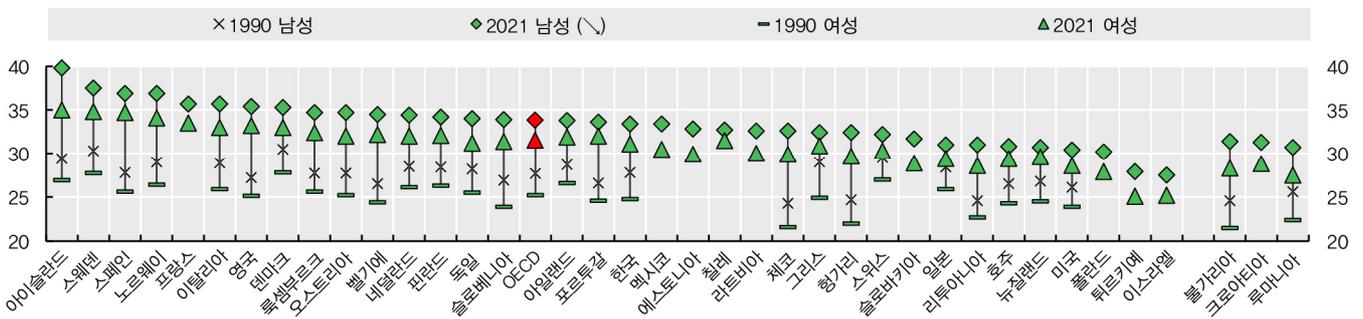
1990년과 2022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인구 1,000명당 조혼인율 및 이혼율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3.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vxuy5j>

그림 4.11. 1990년 이후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모두 6세 증가했습니다.

성별 평균 초혼 연령, 1990년 및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3.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9asbw8>

표 4.1. 2022년 OECD 회원국 25개국에서 동성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율

OECD 회원국의 동성 결혼에 대한 기본 통계,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법적 인정 날짜	전체 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성 동성 결혼의 비율	법적 인정 날짜	전체 결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여성 동성 결혼의 비율
호주	2017년	3.2%	62%	아일랜드	2015년	2.7%
오스트리아	2019년	1.7%	57%	룩셈부르크	2015년	1.9%
벨기에	2003년	2.9%	51%	멕시코	2010년 멕시코 시티	1.0%
캐나다	2005년	네덜란드	2001년	2.1%
칠레	2022년 3월	뉴질랜드	2013년	2.4%
콜롬비아	2016년	1.9%	..	노르웨이	2009년	2.1%
코스타리카	2020년 5월	3.4%	46%	포르투갈	2010년	1.9%
덴마크	2012년	1.5%	58%	스페인	2005년	3.4%
에스토니아	2024년 1월	-	-	슬로베니아	2022년 7월	..
핀란드	2017년	1.9%	69%	스웨덴	2009년	1.5%
프랑스	2013년	2.9%	..	스위스	2022년 7월	..
독일	2017년	2.6%	54%	영국	2014년	3.3%
아이슬란드	2010년	1.2%	45%	미국	2015년	..
				평균		2.3%
						56%

출처: OECD Family Database - Indicator SF3.1 - based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Eurostat,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인구 추이

연령 비율은 인구의 연령 구조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 비율의 추세와 전망은 과거 OECD 회원국의 과거 모습들을 특징짓고 미래에 예상되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OECD 인구는 고령화되었으며 향후 수십 년 동안 계속 고령화될 것입니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20~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30명으로, 1980년의 20%에서 증가했습니다(그림 4.13).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에서는 15% 미만,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는 40%, 일본에서는 55%에 이르는 등 국가 간 차이가 큼니다. 206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OECD 평균은 2배(59%)로, 한국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0년까지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일본 82%, 한국 96%에 달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멕시코는 45%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보건, 장기요양,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1980년과 2020년 사이에 청년인구와 노동 연령 인구의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 20~64세 인구 100명당 20세 미만 인구는 38명으로 1980년 64명에서 감소했습니다(그림 4.14). 2020년 생산연령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25~30%, 이스라엘과 멕시코에서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 비율은 감소세를 멈추고 2060년에는 평균 36%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은 교육과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평균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감소는 노인에 대한 공공 지출 증가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신흥 경제국,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OECD 회원국보다 일반적으로 노년층과 생산 연령층의 비율이 낮고, 청년층과 생산 연령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림 4.15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인 15~29세 청년층의 과거, 현재, 미래 비중을 전체 인구 대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비율은 1980년 25%에서 2020년 18%로 감소했으며, 캐나다, 한국, 폴란드,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평균 비율은 15%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한국과 같이 향후 수십 년 내에 상당히 고령화될 국가에서 2060년까지 전체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 및 측정

연령 부양비(Age-dependent ratio)는 일상생활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부양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노인 또는 청소년)의 수와 그러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의 수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64세 인구 대비 20세 미만 인구의 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추가 비율인 15~29세 청년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29세 청년인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2020년 이전 추정치와 2060년 전망치는 UN, 세계 인구 전망 - 2022년 개정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예측은 가장 최근의 "중위출산율(medium fertility variant)" 인구 예측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각 국가별로 각 인구 통계 구성 요소의 수천 가지 예상 궤적의 중위값에 해당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a401eb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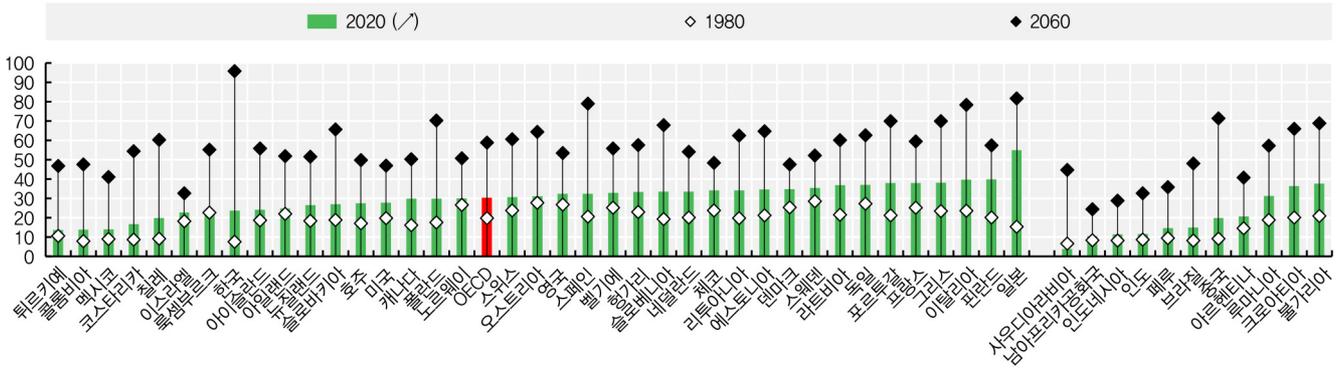
OECD (2023), *Beyond Applause?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7d33ab3-en>.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Revision*, Washington DC, <http://esa.un.org/unpd/wpp>.

그림 4.12. 향후 40년 동안 노동 연령 대비 인구 고령화 비율은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1980년, 2020년, 2060년 생산연령인구(20~64세) 100명당 은퇴연령인구(65세 이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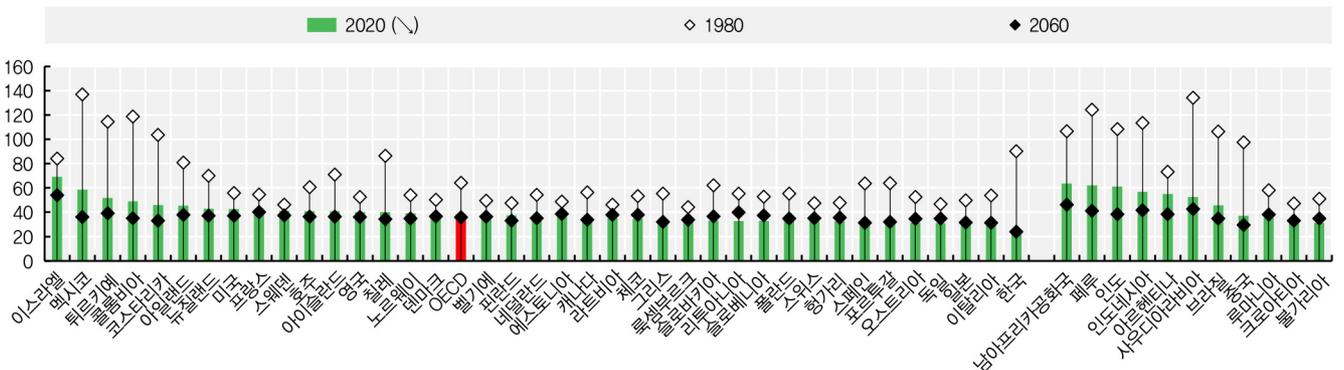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22 Revisions.

StatLinks <https://stat.link/uqrmty>

그림 4.13. 청년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감소세가 멈췄습니다.

1980년, 2020년, 2060년 생산연령인구(20~64세) 100명당 청년(20세 미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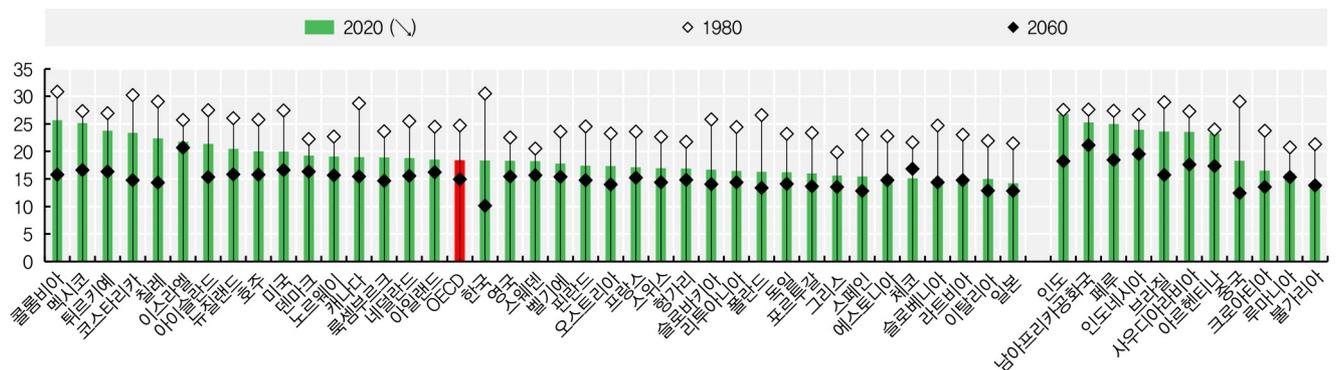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22 Revisions.

StatLinks <https://stat.link/kjlawc>

그림 4.14.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80년, 2020년, 2060년의 전체 인구 중 청년(15~29세) 수, 백분율



출처: Calculations from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s Prospects - 2022 Revisions.

StatLinks <https://stat.link/41vwit>

5 자활 지표

고용

고용은 자활(self-sufficiency)의 핵심 요소입니다. 2023년 마지막 분기에 OECD 지역의 노동 가능 연령 성인 10명 중 7명이 평균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그림 5.1).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는 노동 가능 연령 인구 10명 중 8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반면, 터키는 10명 중 5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고용 수준은 일반적으로 북유럽과 영미권 국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고, 지중해, 라틴 아메리카 및 비회원국에서는 평균보다 낮습니다.

2023년 4분기에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약 0.5% 포인트 높은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3% 포인트 미만으로 가장 작았습니다. 그 격차는 터키(35% 포인트 이상)에서 가장 컸고, 코스타리카와 멕시코(25% 포인트 이상)에서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강력한 영향 이후 노동 시장 여건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OECD 평균 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분기에는 위기 이전 수준보다 1.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4% 포인트 이상)에서 고용 수준이 증가했지만,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2.5% 포인트 미만)에서는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습니다.

OECD 전체에서 어머니의 고용률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아 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림 5.2).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막내 자녀가 0~2세인 어머니의 고용률은 막내 자녀가 3~5세인 어머니와 6~14세인 어머니보다 낮지만, 그 격차의 크기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체코의 경우 막내 자녀가 0~2세인 어머니의 고용률은 2021년 21%인 반면, 3~5세와 6~14세인 어머니의 고용률은 각각 75%와 92%에 달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최연소 연령대별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핀란드에서는 그보다 약간 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디지털화로 인해 일상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숙련도 초급 및 고급 업무와 문제 해결 및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적으로 27%의 직업이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5.3). 이 연구에 따르면 숙련도 고급 직종이 자동화 위험이 가장 낮고, 중저숙련 직업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유럽 3개국에서는 35% 이상에서 룩셈부르크와 영국에서는 20% 미만에 이르기까지 국가별로 위험도가 다양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질병, 휴일, 노사분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결근한 경우에도 주당 1시간 이상 임금, 영리 또는 가족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용의 기본 지표는 15~64세 인구 중 기준 주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입니다.

ILO 가이드라인에 따라 25~54세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특정 기준 기간 동안 유급 고용 상태이거나 1시간 이상 자기 고용 상태였던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기록된 고용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정 출산휴가 또는 유급 육아휴직(법적 또는 계약상) 중인 많은 사람을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유럽 노동력 조사에서는 부모가 업무 관련 소득이나 수당을 받고 있거나 휴직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별 정의는 대체로 이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하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employment/database의 www.oecd.org/els/emp/LFSNOTES_SOURCES.pdf를 참조하세요.

자동화 고위험 직업의 비중은 98개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동화 정도를 평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화 위험도는 직업별로 해당 직업에서 사용되는 각 기술 또는 능력에 대해 모든 전문가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한 평균 등급 또는 O*NET에서 평가한 해당 직업에서 능력의 중요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8785bba-en>.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 LMF1.2 Maternal employment, <https://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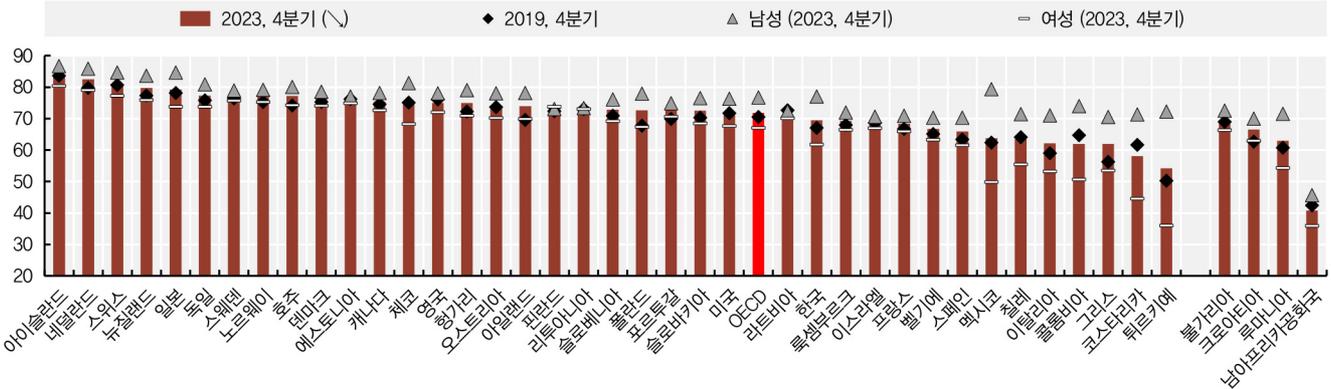
Lassebie and Quintini (2022), "What skills and abilities can automation technologies replicate and what does it mean for workers?: New evidence", <https://doi.org/10.1787/646aad77-en>, based on OECD Expert Survey on Skills and Abilities Automatability and O*NET.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2: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자료는 0~17세 자녀를 둔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막내 자녀의 연령대는 0~5세와 6~17세, 이스라엘의 경우 0~1세, 2~4세, 5~14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0~2, 3~5, 6~17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2020년, 불가리아의 경우 2019년, 영국의 경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참조합니다.

그림 5.1. 2023년 말 고용률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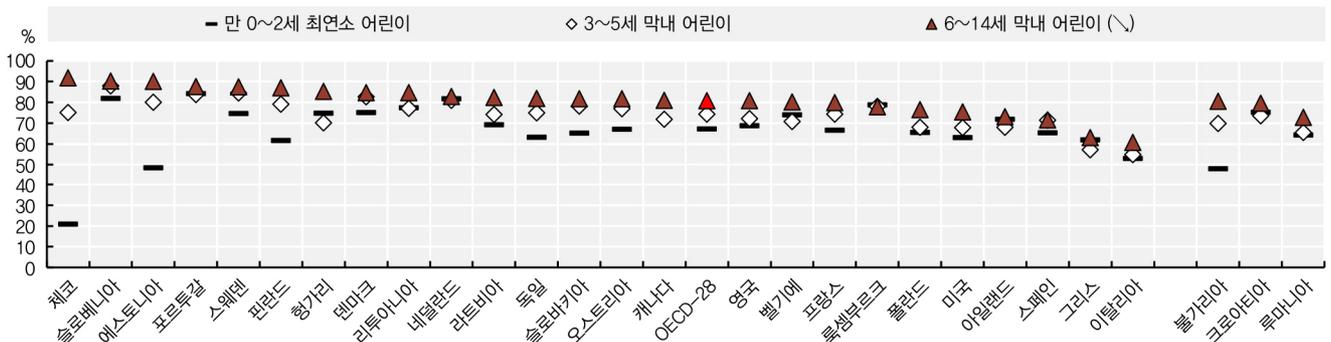
고용률, 노동 연령 인구(15~64세) 비율, 성별, 2019년 4분기 및 2023년 4분기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and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en/> StatLinks <https://stat.link/s8z3dw>

그림 5.2. 막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모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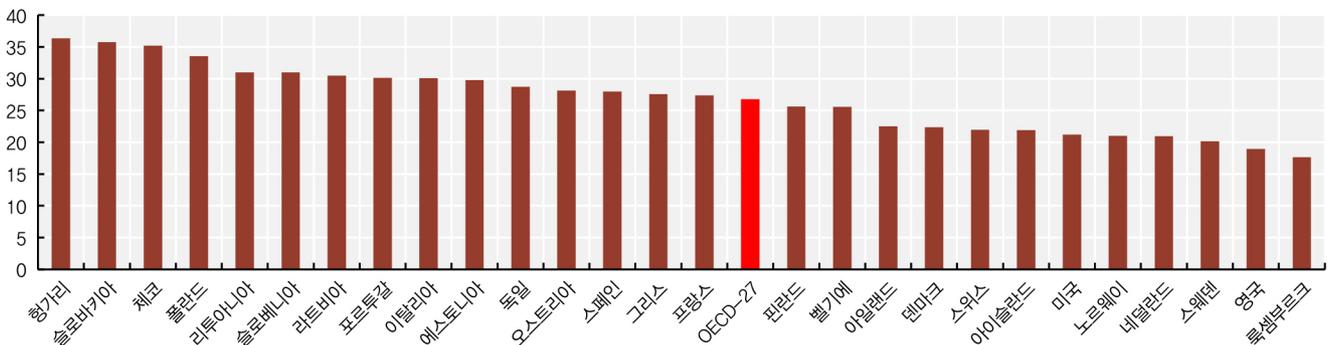
자녀(0~14세)가 있는 여성(25~54세)의 고용률(%), 막내 자녀의 연령별, 2021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indicator LMF1.2, <https://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based on national and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s <https://stat.link/d31qj7>

그림 5.3. OECD 평균적으로 27%의 일자리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자동화 고위험 직업의 비율, 2021



출처: Lassebie and Quintini (2022), "What skills and abilities can automation technologies replicate and what does it mean for workers?: New evidence", <https://doi.org/10.1787/646aad77-en>, based on OECD Expert Survey on Skills and Abilities Automatability and O*NET. StatLinks <https://stat.link/cr8jf2>

실업률

실업은 가계와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력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OECD 전역에서 실업률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이 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4년 1월 OECD 평균적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5.5% 이상이 실직했습니다(그림 5.4).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의 실업률은 3% 미만이며, 많은 국가가 4%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콜롬비아, 그리스, 스페인에서 두 자릿수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2020년 봄 코로나19 위기가 정점을 찍은 이후 실업률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실업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척도는 “광범위한 노동 저활용”으로, 이는 가용 노동 자원이 활용되지 않거나(즉, 실업),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즉, 불안전 고용)과 같이 활용되지 않는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 8명 중 1명 이상(12%)이 “저활용된다”고 답했습니다(그림 5.5). 이 비율은 폴란드가 5% 미만으로 가장 낮고 칠레, 스페인, 터키가 20% 이상으로 가장 높습니다. 2019년 마지막 분기(코로나 19 위기 이전)와 비교하면 2023년 3분기 에스토니아는 4%포인트, 체코와 영국은 5%포인트 더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호주와 이탈리아(4%포인트 및 5%포인트), 그리스(8%포인트)에서는 특히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실업 또는 비활동적 상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2년 15~29세 중 고용되지도, 교육 또는 훈련 중이지도 않은 니트(NEET)의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2.5%로 2019년의 13.3%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그림 5.6). 니트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니트(실업 니트)와 그렇지 않은 니트(비활동 니트)로 구분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니트가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숙련도 초급 이하의 교육을 받은 청년이 대학 수준의 학위를 받은 청년보다 니트일 가능성이 3배 더 높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을수록 청년들은 실업 또는 비활동성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 및 측정

실업률은 생산연령인구 중 취업자 또는 실업자 대비 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데이터는 회원국의 노동력 조사를 통해 수집됩니다. 이 조사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ILO 정의에 따르면, 실업자는 조사 기준 주에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현재 일할 수 있고 조사 기준 주를 포함한 4주 동안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체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취업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의 ‘노동력 저활용된다’는 실업자와 한계단념자(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원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불안전취업자(경제적 이유로 조사 기준 주 동안 평소보다 적게 일한 풀타임 근로자와 풀타임 일자리를 원했지만 찾지 못한 파트타임 근로자)를 분자에 포함해 노동력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NEET 인구는 고용 상태에 있지 않거나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인구(15~29세)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무직 상태(실업 또는 비활동적)에 따라 NEET 비율을 표시합니다. 데이터는 국가별 노동력 조사에 기반한 OECD 추정치를 참조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8785bba-en>.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13bef63-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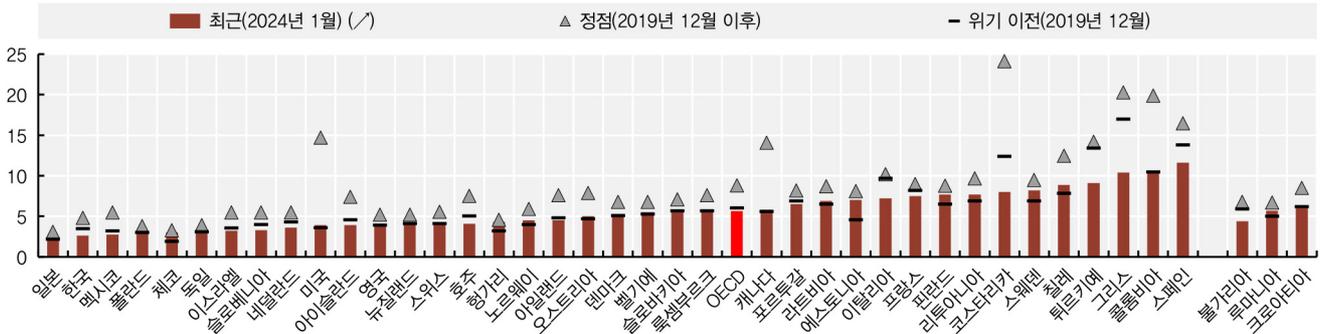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4: 칠레, 아이슬란드, 영국의 경우 2024년 1월이 아닌 2023년 12월의 자료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24년 1월이 아닌 2023년 마지막 분기 자료입니다. 캐나다, 한국, 미국의 경우 2024년 2월 자료입니다.

그림 5.5: 아이슬란드의 경우 3분기가 아닌 2023년 2분기 자료입니다.

그림 5.4. OECD 회원국 전반에서 낮은 실업률 유지

실업률, 노동력(15세 이상) 비율, 계절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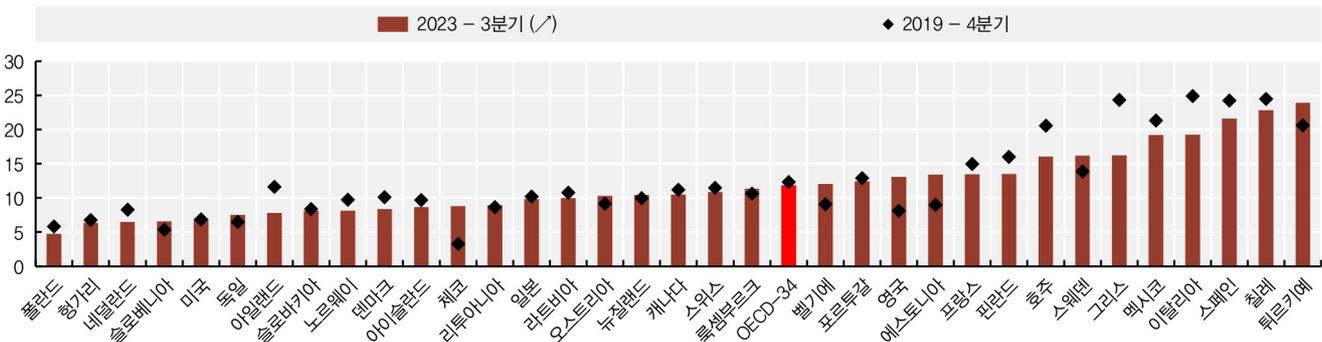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database.

StatLinks <https://stat.link/hv76wp>

그림 5.5. 평균적으로 인력 8명 중 1명(12%)이 “저활용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 저활용률, 노동력(15세 이상) 비율, 계절에 따라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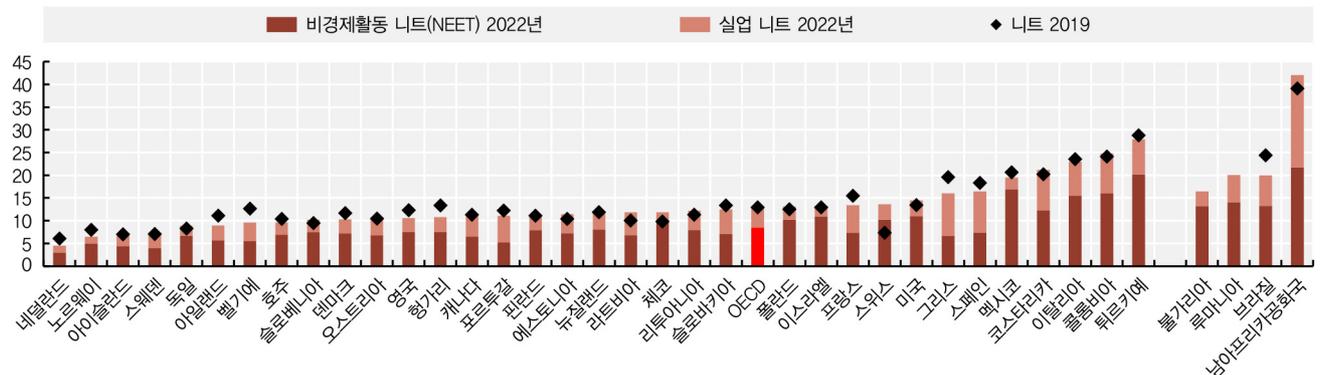


출처: OECD online Household Dashboard,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based on National and European Labour Force surveys.

StatLinks <https://stat.link/c0xpif>

그림 5.6. 평균적으로 청년 8명 중 1명(12%)은 고용되지 않았거나 교육 또는 훈련 중입니다.

고용,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NEET) 비중, 2019년 및 2022년



출처: OECD Education Statistics,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0953>.

StatLinks <https://stat.link/ntfwy7>

기술

세계화, 기술 발전,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일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mega-trends)는 일자리의 수와 질, 일자리 수행 방식, 그리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앞으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기술(Skills for Job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총원이 어려운('부족') 일자리 10개 중 5개 이상이 숙련도 고급 직종에서 발견됩니다(그림 5.7). 이러한 직업은 관리직부터 의료, 교육, ICT 분야의 숙련도 고급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개인 서비스 종사자나 전기 및 전자 기술직 종사자와 같은 중숙련 직종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OECD 전체에서 총원이 어려운 일자리의 약 41%)의 직업적 부족이 발견됩니다. 대신 OECD 전체에서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1개 미만은 숙련도 초급 직종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직업 부족의 강도는 OECD 회원국마다 크게 다릅니다. 벨기에와 에스토니아에서는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9개 이상이 '숙련도 고급' 직종입니다. 멕시코에서는 고숙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낮아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1개 미만이 '고숙련'이고, 대신 부족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급'에서 '숙련도 초급'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4개 국가 평균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요구하는 온라인 채용공고의 비중은 2022년 미국에서 0.84%로 매우 적었고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국가별 평균적으로 AI 관련 온라인 채용공고의 비중은 33% 증가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웨덴만 이 기간 동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그림 5.8). AI 관련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전문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료와 정보 간의 기본 관계를 종합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기술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ECD 회원국에서 인터뷰 전 4주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그림 5.9).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이 성인 학습에 참여할 확률은 3.5%포인트 더 높습니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에서는 그 격차가 10% 포인트를 넘어 여성이 더 유리합니다. 슬로바키아와 터키는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 및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한 유일한 두 국가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임금과 고용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직업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 및 측정

직무에 필요한 기술(OECD Skills for Jobs)에 대한 데이터베이스(www.oecdskillsforjobsdatabase.org)는 기술을 구하기 어려운(부족) 또는 구하기 쉬운(과잉) 것으로 정의합니다. 직종 부족 지표는 임금 증가율, 고용 증가율, 근로 시간 증가율, 실업률, 과소 자격 변화 등 5가지 하위 구성 요소를 분석해 각 국가 내 부족 또는 과잉 직종의 순위를 매기는 종합 지표다. 각 직업의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는 800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범주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O*NET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합니다.

AI 기술이 필요한 공식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일반 AI 기술 또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AI 관련 기술이 필요한 공식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전 식별된 AI 키워드를 기반으로 식별되었습니다(전체 목록은 Borgonovi et al. (2023) 참조). 일반 기술에는 AI 시스템의 개발이나 유지보수를 주로 다루지 않는 직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AI 관련 기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 학습”,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기계 번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정 기술에는 “그라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딥 러닝(deep learning)” 등 AI 관련 직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방법 또는 도구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이 포함됩니다.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은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성인(25~64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공식 교육 및 훈련은 2011 국제 표준 교육 분류에 따라 “공공 기관 및 공인된 민간 기관을 통해 제도화되고 의도적이며 계획된 교육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국가의 공식 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교육”으로 정의됩니다. 비공식 교육 및 훈련은 현장 실습을 제외한 세미나, 워크숍 또는 개인 레슨과 같은 모든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학습 활동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

Borgonovi, F., et al. (2023), “Emerging trends in AI skill demand across 14 OECD countries”,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No. 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c691b9a-en>.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8785bb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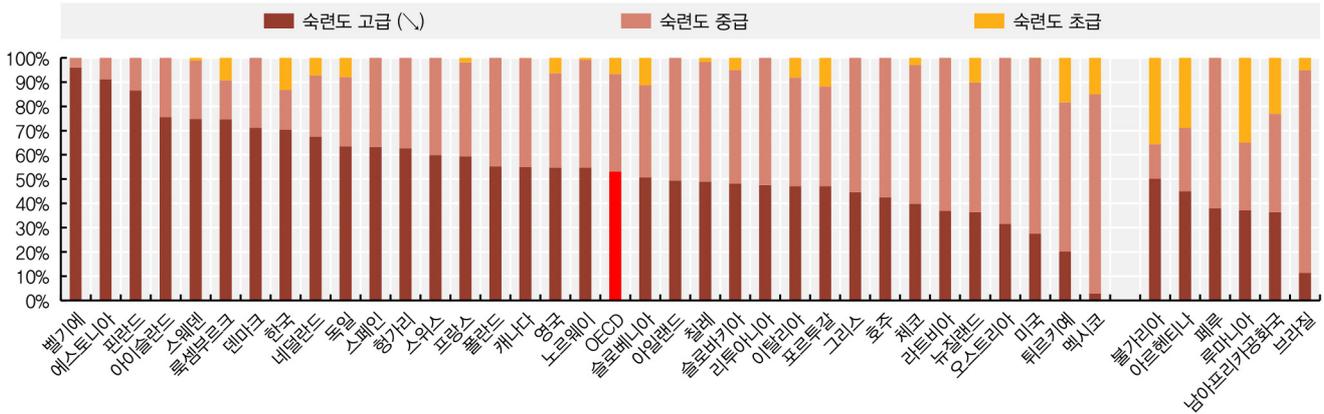
OECD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ee00155-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8: 영국의 자료는 2019년, 터키의 자료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5.7. 부족한 일자리 10개 중 5개 이상이 숙련도 고급 직종에서 발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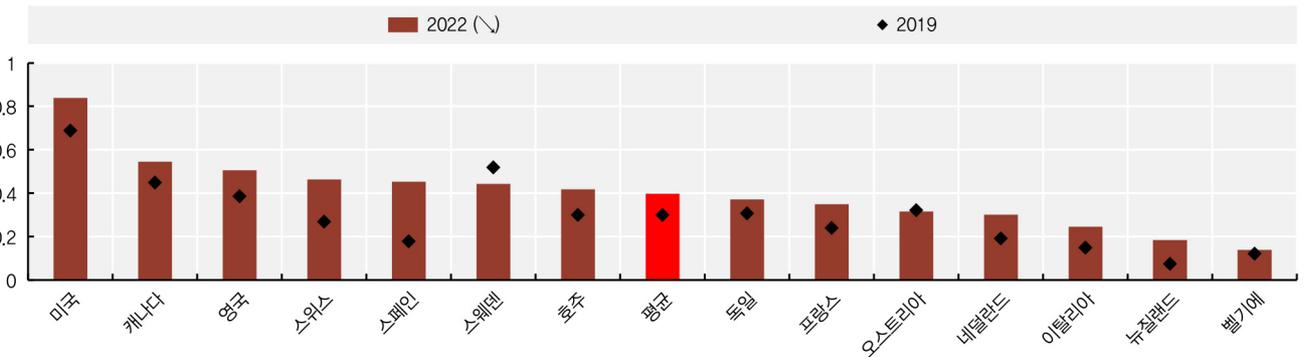
2019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숙련도 고급 기술 분야 고용 비율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Skills for Jobs database, www.oecd.org/employment/skills-and-work.htm.
StatLinks <https://stat.link/xm45f1>

그림 5.8. AI 기술을 요구하는 온라인 채용공고의 비중은 작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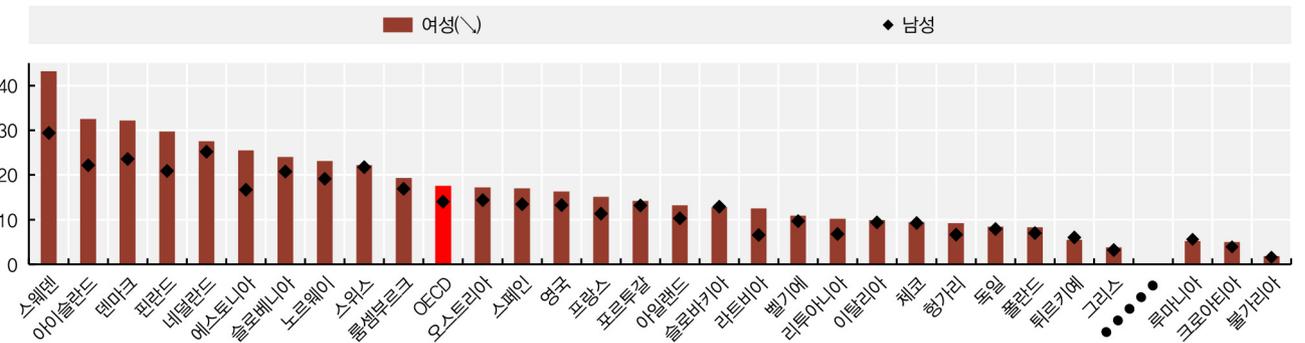
AI 기술이 필요한 온라인 구인 광고 직책의 비율, 2019년 및 2022년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Lightcast (2022), Lightcast™, <https://lightcast.io/> (accessed December 2022), in Boronovi et al. (2023), "Emerging trends in AI skill demand across 14 OECD countries", <https://doi.org/10.1787/7c691b9a-en>.
StatLinks <https://stat.link/vhkj1d>

그림 5.9.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및 훈련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한 25~64세 인구의 성별 참여율(%), 2022년 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Eurostat (2023),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https://ec.europa.eu/eurostat/web/main/data/database?node_code=employ.
StatLinks <https://stat.link/iyoct7>

학생의 학업성취도

15세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장기적으로 자활(self-sufficiency)에 영향을 미칩니다. OECD PISA 시험의 학생 성적은 15세까지 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교육적 투입의 누적 효과를 반영합니다.

2022년 PISA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실시된 시험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2018년과 2022년 사이 평균 점수는 수학에서 약 15점, 읽기에서 10점 하락한 반면 과학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5.10, 패널A, B, C). 수학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2018년과 2022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그림 5.10, 패널A),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은 두 해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읽기 및 과학의 국가별 점수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학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읽기(그림 5.10, 패널B)에서 2018년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캐나다와 핀란드는 2022년에 5위와 10위로 떨어졌습니다. 과학에서는 네덜란드가 2018년에 비해 15점 하락했습니다(그림 5.10, 패널C).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는 2018년과 2022년 모두 OECD 회원국 중 읽기 및 과학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비OECD 국가 중에서는 마카오(중국)와 홍콩(중국)이 같은 기간 수학, 읽기, 과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격차는 교육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2022년 OECD 회원국 전체에서 남학생은 수학에서 여학생보다 9점, 여학생은 읽기에서 남학생보다 24점 앞섰으며 과학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그림 5.11). 26개 OECD 회원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점수 격차(15점 이상)를 보인 국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학과 달리 읽기에서는 모든 PISA 참여 국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이 좋았지만 칠레와 코스타리카에서는 남녀 간 읽기 성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OECD 국가 중 여학생의 읽기 성적이 가장 큰 격차(40점 이상)를 보인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로 나타났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과학 성취도 차이는 12개 OECD 국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OECD 전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OECD 비회원국에서는 마카오(중국)가 수학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 차이를 크게 앞선 반면, 과학과 읽기에서 각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점수 차이를 크게 앞선 국가는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입니다. 이는 PISA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ESCS) 지수를 통해 측정됩니다. OECD 평균적으로 2018년 이후 ESCS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 간의 수학, 읽기, 과학 성적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그림 5.12).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학생과 불리한 학생 간의 성적 격차가 더 커졌음을 나타냅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미국에서는 특히 과학 분야에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2022년의 결과는 2018년의 결과와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8년 이후 세 과목 모두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 간의 성적 차이가 감소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OECD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의 결과를 통해 평가됩니다. 1997년에 시작된 PISA는 80여 개국에서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설문 조사로, 사회 및 경제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지식과 기술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전통적으로 수학, 읽기, 과학의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더 광범위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창의적 사고가 평가의 하위 범주로 포함되었습니다.

수학, 읽기, 과학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 격차는 남학생의 평균 점수에서 여학생의 평균 점수를 뺀 값으로 계산됩니다.

PISA에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ESCS)에 대한 PISA 지수로 측정됩니다. ESCS의 값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SCS는 부모의 최고 교육 수준, 부모의 최고 직업 상태, 주택 소유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정보를 하나의 점수로 결합한 종합 점수입니다. 각 학생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이 PISA 인지 평가를 완료한 후 응답하는 설문조사인 학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학생 샘플을 추출한 모집단에서 실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그러한 차이가 관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점수(또는 PISA의 다른 모집단 수준 성과 추정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The State of Learning and Equity in Education,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3f23881-en>.

OECD (2023), PISA 2022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fc0bf9c-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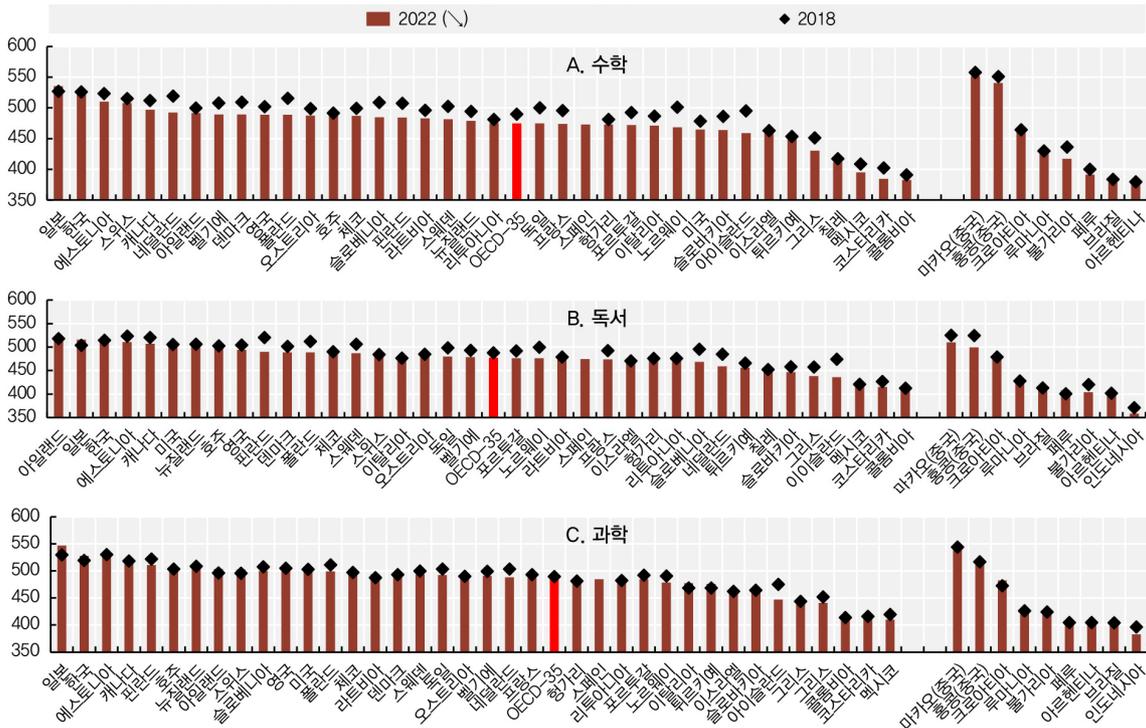
그림 5.10, 그림 5.11 및 그림 5.12: 호주,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및 홍콩(중국)의 경우 하나 이상의 PISA 표본 추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읽기, 수학 및 과학 추정치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Reader's Guide, Annexes A2 and A4 참조).

그림 5.10 및 그림 5.12: OECD 평균-35는 코스타리카, 룩셈부르크, 스페인을 제외한 OECD 회원국 평균을 의미함).

그림 5.11 및 그림 5.1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컬러로 표시되며, 흰색 배경으로 표시된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림 5.12: ESCS는 경제, 사회, 문화적 상태에 대한 PISA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림 5.10. 2018년과 2022년 사이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수학 및 읽기 성취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2018년과 2022년 읽기, 수학, 과학 분야의 평균 학생 PISA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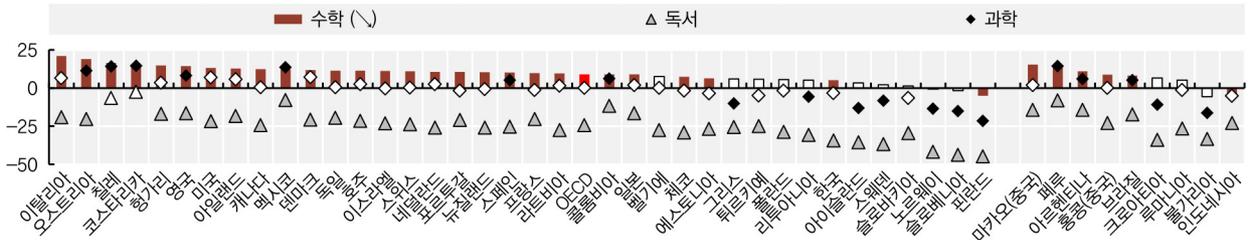


출처: Table I.B1.5. Changes in performance and equity in education and long-term trends annex tables in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https://doi.org/10.1787/53f23881-en>.

StatLinks <https://stat.link/d8ci9g>

그림 5.11. OECD 회원국의 과목별 성별 성과 격차 비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읽기, 과학 점수 차이, PISA 2022(남학생-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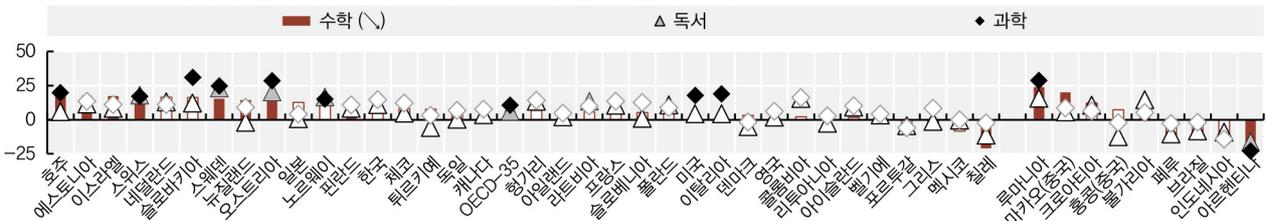


출처: Table I.B1.5. Changes in performance and equity in education and long-term trends annex tables in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https://doi.org/10.1787/53f23881-en>.

StatLinks <https://stat.link/0pc9n5>

그림 5.12. 2018년 이후 수학, 읽기, 과학에서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점수 차이가 확대되었지만, 그 유의성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2018년과 2022년 사이의 상위 및 하위 분기 ESCS의 평균 실적 변화



출처: Table I.B1.5. Changes in performance and equity in education and long-term trends annex tables in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https://doi.org/10.1787/53f23881-en>.

StatLinks <https://stat.link/o2wvx9>

은퇴 후 기대 여명

은퇴 후 기대여명 지표는 노동시장을 떠난 연령부터 남은 평균 기대여명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인구 고령화의 맥락에서 은퇴와 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적 압박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 후 4년 이상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여성 22.8년, 남성 18.4년)(그림 5.13).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에서는 성별 격차가 최소 6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기대여명은 더 높고 노동시장 퇴출 연령은 더 낮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은 노년 빈곤에 노출됩니다.

비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은퇴 예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OECD 국가보다 낮습니다. 남성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9년에서 브라질, 중국, 크로아티아에서는 15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여성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11년에서 중국과 크로아티아는 약 24년으로 후자의 두 국가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은퇴 후 기대여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1980년 OECD 회원국 남성은 평균 14년의 은퇴 기간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이 평균이 18년으로 늘어났습니다(그림 5.14, 패널A). 여성도 1980년 평균 18년에서 2022년에는 거의 23년으로 늘어나는 등 은퇴 후 기대여명의 증가는 비슷했습니다(그림 5.14, 패널B).

정의 및 측정

노동시장 은퇴 후 기대여명은 남성과 여성의 유효 노동력 은퇴 시점부터 남은 기대여명을 계산한 것입니다. 추가 수명 연수의 추정치는 UN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개정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평균 유효 노동력 은퇴 연령은 최초 40세 이상 근로자의 5년 동안 연령대별 노동시장(순) 은퇴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인구 연령 구조의 구성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노동력 수준보다는 노동력 참여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노동 인력 은퇴를 추정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5년 단위로 나눈 각 가상 코호트(Synthetic Cohort)에 대해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ECD(2023)를 참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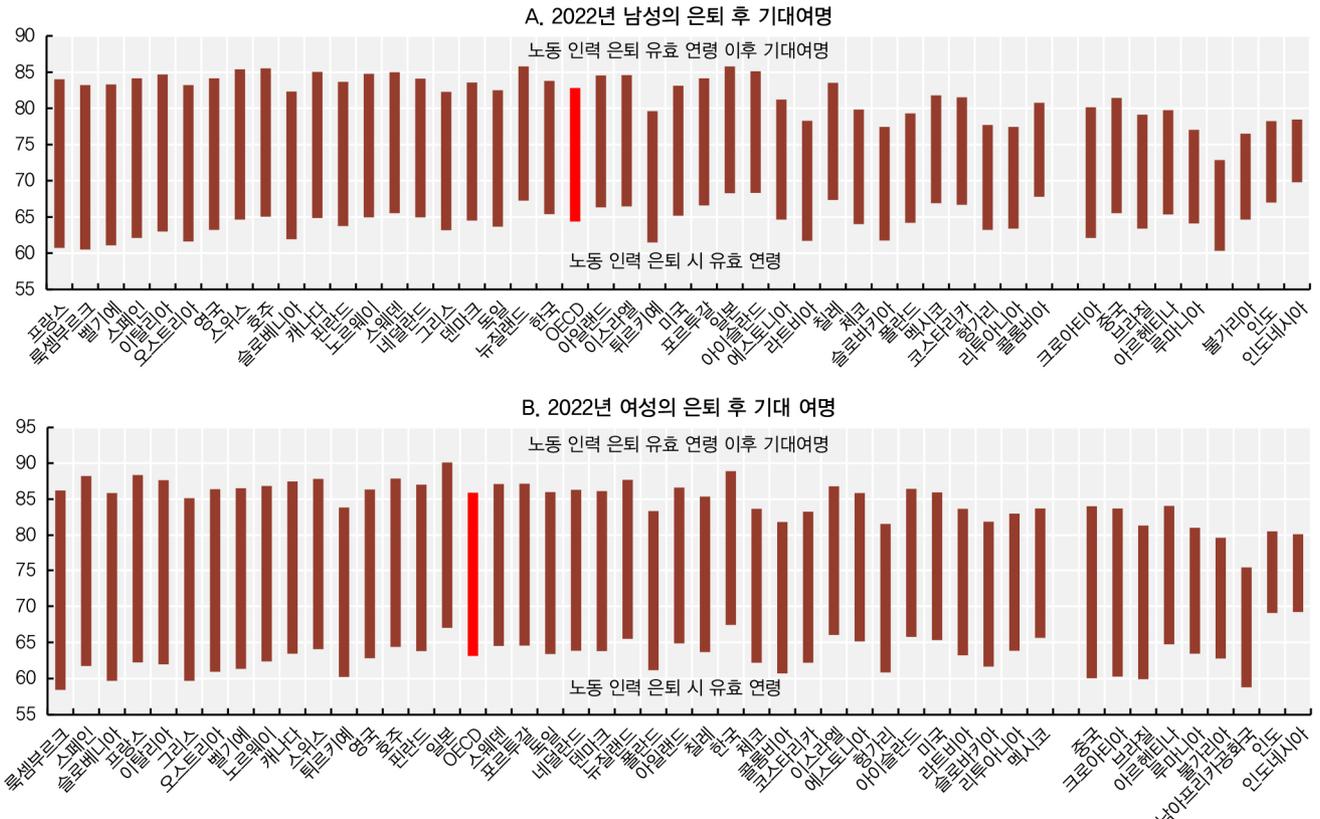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a401ebd-en>.

United Nations (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Revision*, Washington DC, <http://esa.un.org/unpd/w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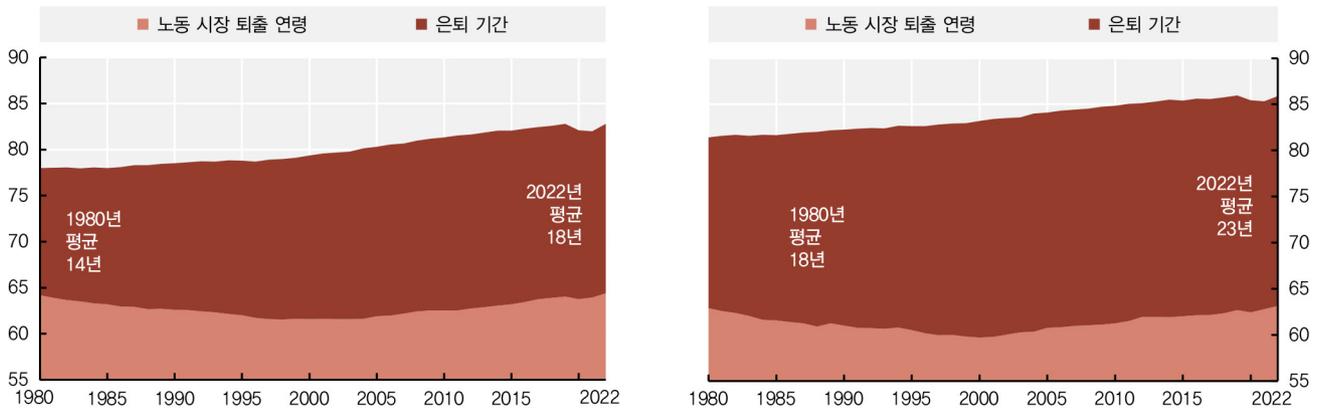
그림 5.13. 여성은 남성보다 은퇴 후 4.5년을 더 보낸다.



출처: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https://doi.org/10.1787/ca401ebd-en>, StatLinks <https://stat.link/0g79bj>

그림 5.14. 2022년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평균 수명은 1980년보다 4.5년 더 길어집니다.

은퇴 연령 및 은퇴 후 연도별 추이, 1980~2022년, OECD 평균



출처: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https://doi.org/10.1787/ca401ebd-en>, StatLinks <https://stat.link/9tnbgp>

6 **형평성 지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소득과 자산과 같은 사회적 성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불평등이 심해지면 빈곤층과 취약 계층의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OECD 회원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2021년에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0.22 정도였으며 칠레와 코스타리카에서는 그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그림 6.1). 북유럽과 일부 중부 유럽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았고, 소득 불평등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터키, 미국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도 비슷한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평균 소득 비율은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 8.4대 1로,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5대 1, 칠레와 코스타리카에서는 20대 1이 넘었다.

소득 불평등은 또한 배우자경제에 따라 다릅니다. 지니 계수는 크로아티아의 0.29(OECD 평균 이하)에서부터 불가리아는 0.32, 루마니아는 0.38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2017년 지니계수가 0.62를 기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두드러집니다.

가계 자산은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산 분포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자산의 절반 이상(52%)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 비중이 79%에 달합니다(그림 6.2). 이에 비해 소득 상위 10%의 부유층은 평균적으로 전체 소득의 25%에 가까운 소득을 얻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모두에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높지만,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가 반드시 자산 집중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2022 OECD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의 기획 모듈은 가계소득 및 자산 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자국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너무 높거나 너무 크다고 답했습니다(그림 6.3).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개인의 평균 우려 수준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이 두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너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산 불평등보다 15%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정의 및 측정

사용되는 소득 분배의 주요 지표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입니다. 지니계수의 값은 '완전 평등'(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받는 경우)의 경우 0, '완전 불평등'(모든 소득이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경우 1까지 다양합니다. 지니계수는 가처분 균등화 가계소득(즉, 세금 및 사회적 현금 이전 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가구의 필요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가구소득을 가구 규모의 제곱근으로 나눈 등가 척도를 사용하여 크기가 다릅니다. 또 다른 지표로는 등가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부유한 인구나 가장 가난한 인구의 평균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S90/S10 소득 십분위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데이터는 OECD 소득 분배 데이터베이스(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산 데이터는 특정 시점(여기서는 2018년경)에 한 가구가 소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에서 모든 부채의 가치를 뺀 값인 순 개인 가계 자산을 의미합니다. 국가별 차이는 분배 최상위 가구를 포함하는 범위나 순 개인 가계 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 및 직역연금의 비중 차이와 같은 방법론적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OECD 자산 분배 데이터베이스(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OECD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 2022의 기획 모듈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다음 각 항목이 귀하의 국가에서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및 3장을 참조하세요.

참고문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OECD (2021), 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nd Financial Insecurity of Households, Policy Insights,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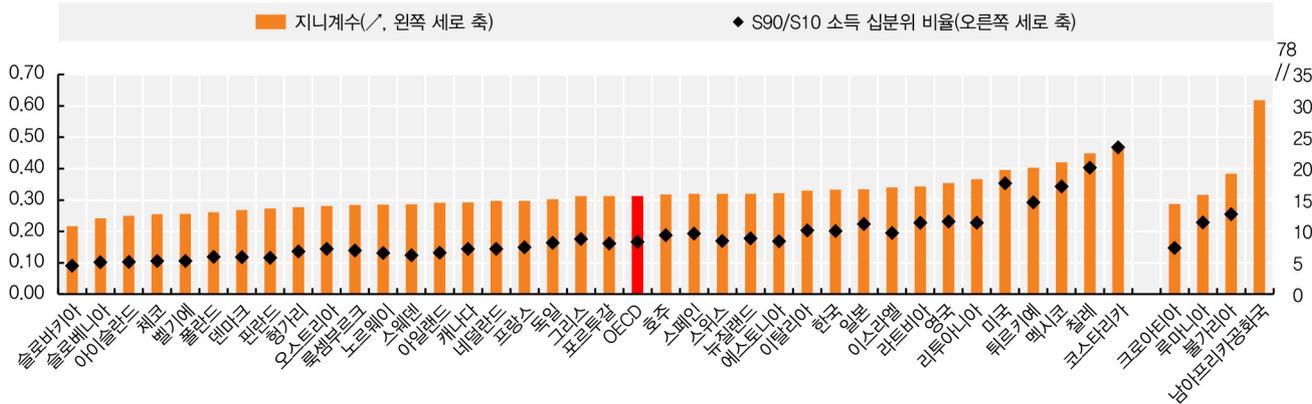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2022년), 호주,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터키(2020년), 덴마크(2019년), 일본(2018년), 아이슬란드 및 남아공(2017)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최신 자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6.2: 상위 10% 소득에 대한 최신 자료는 위를 참조하세요. 상위 10% 자산 점유율에 대한 최신 자료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2016년: 핀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2017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2018년: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2019년: 캐나다, 덴마크, 일본, 네덜란드, 미국.

그림 6.1. OECD 국가 간 소득 불평등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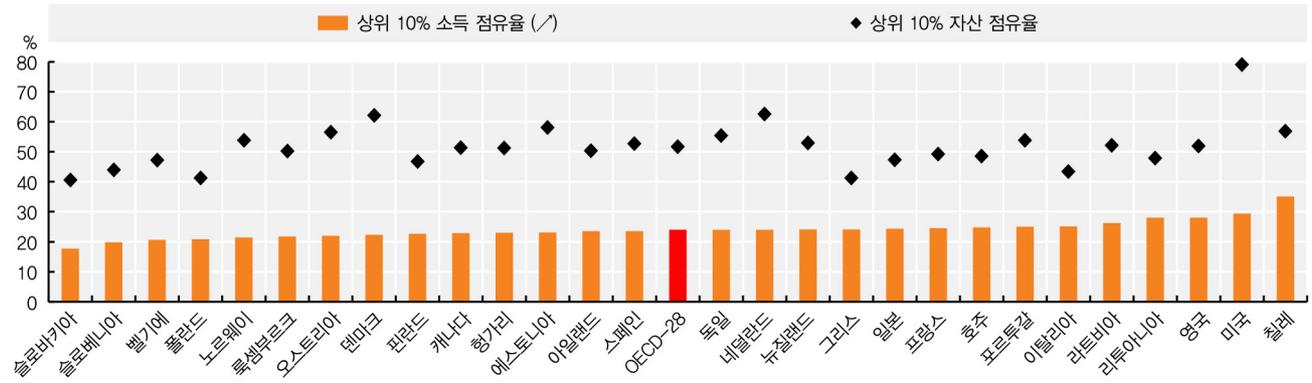
2021년 가계 가처분 소득의 지니 계수와 부유층 10%와 빈곤층 10% 사이의 격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3f18vc>

그림 6.2. 소득보다 자산이 상위층에 더 집중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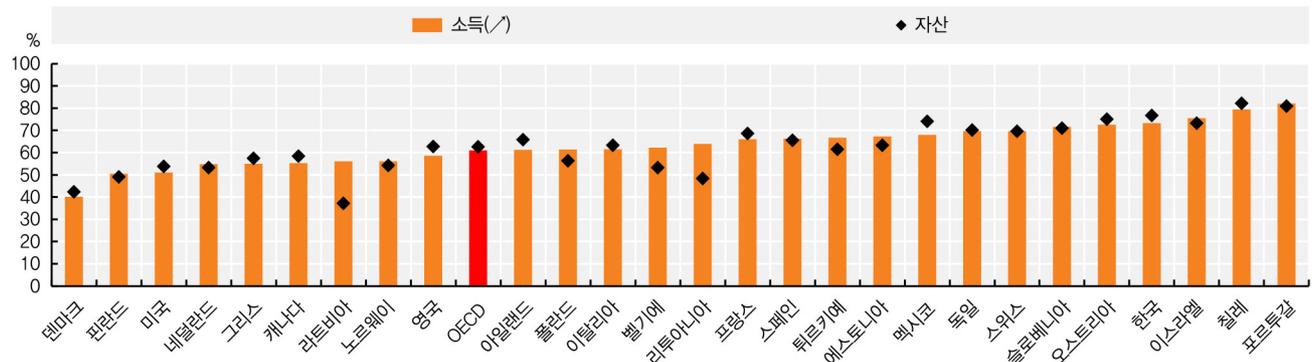
2010년대 후반 가계 가처분 소득 상위 10% 및 가계 순자산 상위 10% 비중



출처: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s6mipk>

그림 6.3. 응답자의 60% 이상이 평균적으로 소득 및 자산 격차가 너무 크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자국의 불평등이 너무 높거나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출처: OECD (2023), "Working hand in hand? Exploring people's views of the role of different actors in fighting inequality", <https://doi.org/10.1787/dbd54315-en>. StatLinks <https://stat.link/5pnka4>

소득 빈곤

소득 빈곤율은 소득 분포의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사회의 형평성(equity)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빈곤 측정은 소득 불평등 측정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제한적인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자국 중위 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 비중)은 11.4%였습니다(그림 6.4). 빈곤율은 미국(18%)과 코스타리카(21%)가 가장 높았고, 체코,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에서는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5~7%에 불과했습니다. 지중해 국가, 발트해 연안 국가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습니다. 협력국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여성의 평균 빈곤율은 12.1%인 반면 남성은 10.7%였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 및 주요 협력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 위험이 더 높습니다. 성별 빈곤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4~5% 포인트 높습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근로 연령 성인(26~65세)의 빈곤율은 약 10%로 가장 낮은 반면, 아동과 청소년은 12%, 노인은 거의 15%로 더 높습니다(그림 6.5). 아동 빈곤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낮지만 칠레,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스페인, 터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아동 5명 중 1명 이상이 소득 빈곤층입니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청소년 빈곤율이 높는데, 이는 청소년이 일반적으로 18세 전후로 부모의 집을 떠나는 시기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책의 제1장 참조).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에스토니아와 한국이 약 40%, 라트비아가 30%를 넘었습니다. 반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5% 미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수치는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주택 등)의 상당한 국가별 차이는 소득 빈곤율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빈곤 위험을 평가하는 또 다른 OECD 지표는 '재정적 불안정'입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은 소득 빈곤층은 아니지만 실업, 장애, 가족 해체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은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 시 3개월 이상 빈곤선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이 부족합니다. 2018년 OECD 회원국 전체에서 34%의 개인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며(그림 6.6),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인구의 45% 이상이, 한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인구의 15% 미만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정의 및 측정

소득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빈곤 측정의 출발점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개념입니다('가구소득' 또는 '소득 불평등' 지표의 '정의 및 측정' 참조).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각 국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상대적 소득 기준선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유한 국가일수록 빈곤 기준선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유한 국가의 빈곤 임계값이 높다는 것은 빈곤을 피한다는 것은 특정 국가에서 관습 또는 표준으로 간주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연령대별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은 소득 빈곤층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소득 빈곤선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동금융자산이 부족한 사람, 즉 유동 금융자산이 전국 중위소득의 25%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유동 금융 자산은 현금, 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에서 비법인 기업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참고문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8055d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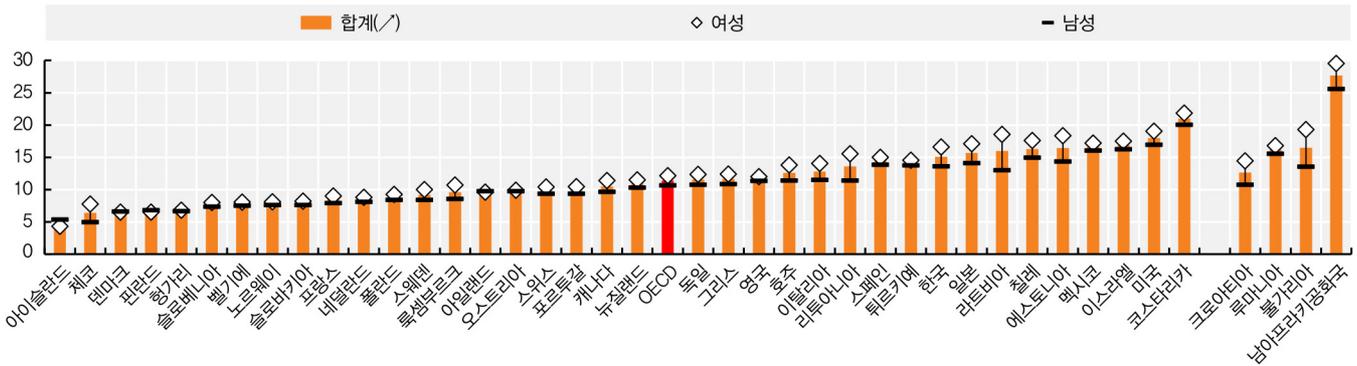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4 및 그림 6.5: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2022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2021년, 호주,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터키(2020년), 덴마크(2019년), 일본(2018년), 아이슬란드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2017년)의 최신 자료를 참조합니다. 네덜란드의 2021년 자료는 잠정적이며, 미국의 2021년 및 2022년 자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림 6.6: 사용 가능한 최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핀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2017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2018년: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2019년: 캐나다, 덴마크, 일본, 한국, 네덜란드, 미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 터키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6.4. OECD 국가 간 상대적 빈곤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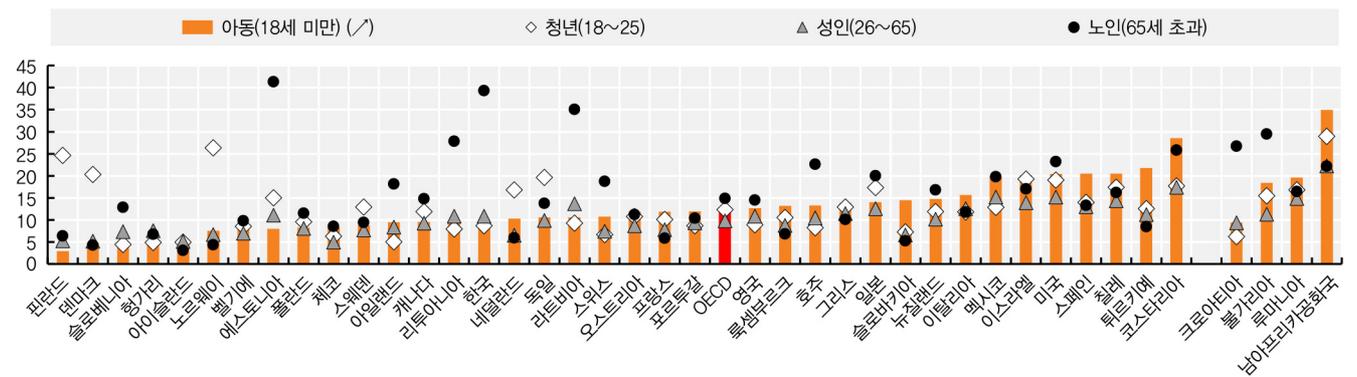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성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백분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IDD),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ula4dt>

그림 6.5. OECD 평균적으로 빈곤은 노년층에서 가장 높고 근로 연령 성인에서 가장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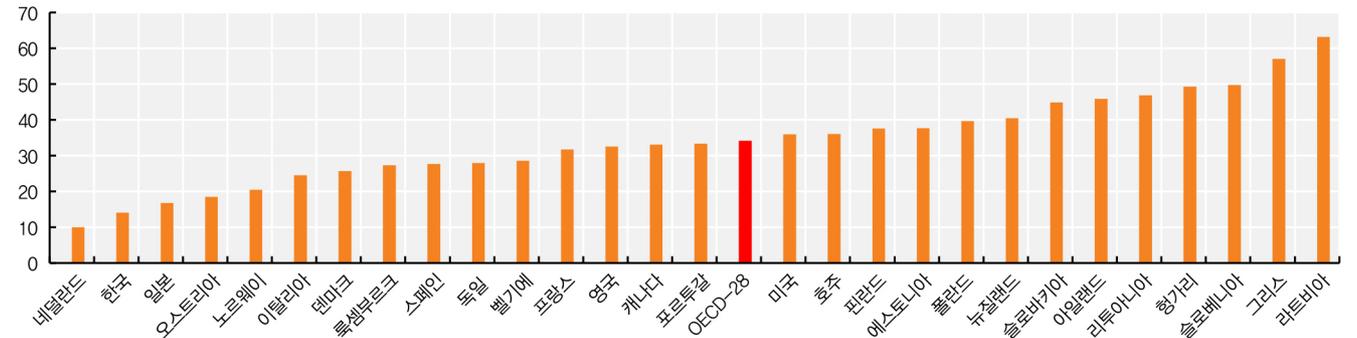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연령대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IDD),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xk07y5>

그림 6.6. OECD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의 비율,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출처: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WDD),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g87iq2>

실업 및 사회 안전망 혜택

공공 현금 이전은 실업 시 소득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기여형) 실업 보험 급여와(비기여형) 사회 안전망 급여라는 두 가지 계층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실업 보험 급여의 지급률은 일반적으로 사회 안전망 급여보다 훨씬 높습니다(그림 6.7). OECD 평균적으로 실업 시 순대체율(NRR), 즉 일정 기간 실업 후에도 유지되는 순근로소득의 비율은 자녀가 없고 평균 임금으로 이전 소득이 있는 독신자의 경우 실업 초기 단계에서는 58%이지만, 장기간 실업자가 되면 37%로 떨어진다.

사회 안전망 혜택은 때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 기준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그림 6.8).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미국에서는 실업 보험 수급 자격이 소진된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실업 지원 및 주택 수당의 지급률이 중위 가구소득의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대 수당과 같은 주택 관련 급여가 추가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일본과 네덜란드의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비기여형 사회안전망 혜택만으로는 빈곤을 탈출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으로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은 국가와 가족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OECD 평균적으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는 자녀가 없는 독신자가 빈곤에서 탈출하려면 주당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10시간을 일해야 한다(그림 6.9). 자녀가 둘인 부부 중 한 명이 실직 상태인 경우 17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는 체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영국에서는 부부가 외벌이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의 및 측정

순 대체율(NRR)은 실업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근로 순소득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이는 실직 상태의 순소득을 재직 중 순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NRR은 실직하기 전 평균 임금을 받고 풀타임으로 일하던 자녀가 없는 40세 독신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기 단계”의 실업은 대기 기간 이후 두 번째 급여 수급 달을 의미하며, ‘장기간 실업’은 24번째

급여 수급 달을 의미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주택 급여는 평균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임대료를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가족 소득은 OECD 세금 혜택 모델(www.oecd.org/social/benefits-and-wages.htm)을 사용하여 계산했습니다.

한 국가의 사회 보호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최대 사회 안전망 급여 수급권을 가져분 소득 분포 중위의 50% 또는 60%로 계산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빈곤 기준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최대 사회안전망 급여 수급권은 다른 소득원이 없고, 자산이 없으며, 실업 보험 등 기여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 연령 성인 1~2명이 있는 실직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 수준입니다. 급여 자격에는 평균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가정하여 계산된 세입자를 위한 주택 급여가 포함됩니다. 모든 혜택 수급액은 소득세 납부액 및/또는 의무적 사회 공헌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결과는 평균 테스트된 혜택과 세금 및 혜택 간의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OECD 조세-혜택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가져분 소득 분포의 중위값(주거비 제외)은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 급여(주택 급여 및 임시 ‘취업’ 급여, 즉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포함)를 받는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주당 시간은 평균 지급을 가정하여 두 가지 가족 유형으로 계산됩니다. 빈곤선은 균등화 가져분 소득 중위값의 50%로 계산됩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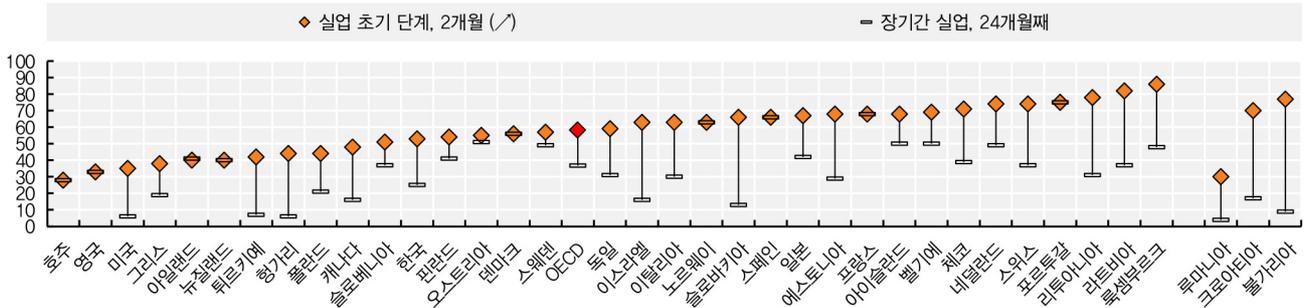
OECD Tax-Benefit models,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7, 그림 6.8, 그림 6.9: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미국의 경우 자료는 2023년이 아닌 202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에 대한 최신 정보는 OECD 세금 혜택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없음.

그림 6.7.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 기간이 길수록 급여 소득이 크게 감소합니다.

실업 시 순소득, 취업 시 순소득의 비율(“실업 시 순 대체율”), 이전 소득이 평균 임금과 동일한 독신자,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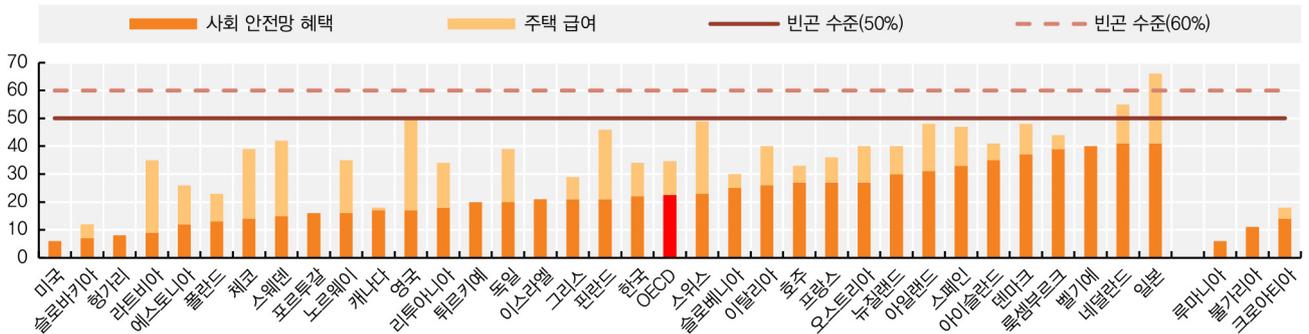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Links <https://stat.link/qetyb2>

그림 6.8. 사회안전망 혜택만으로는 소득 빈곤을 예방할 수 없음

2023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 혜택으로 제공되는 순 소득 수준(중위 가처분 소득 대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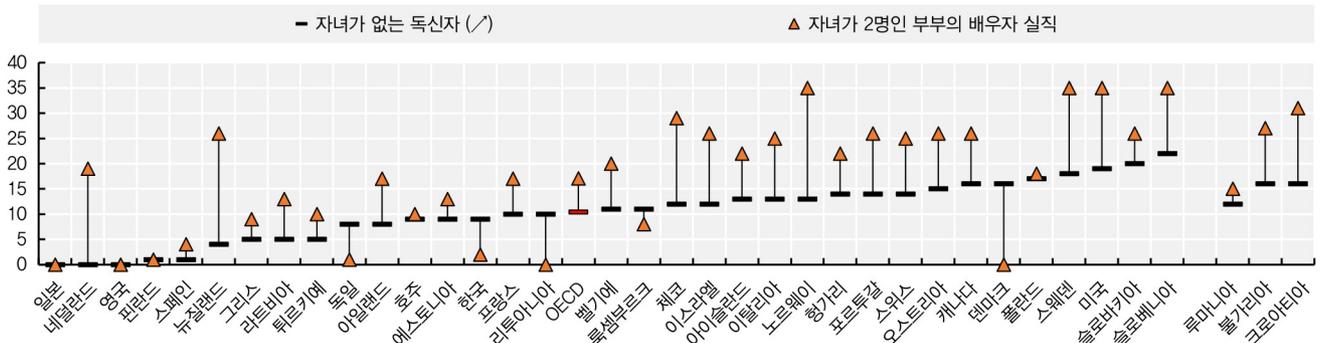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Links <https://stat.link/xiqc6l>

그림 6.9. 배우자가 실직 상태인 두 자녀를 둔 부부는 일반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신자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3년 사회안전망 급여 수급자의 빈곤 탈출에 필요한 주당 근로 시간(중위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50%), 가족 유형별 평균 시급 기준, 2023년



출처: OECD Tax-Benefit model, www.oecd.org/els/soc/benefits-and-wages.htm.

StatLinks <https://stat.link/t97kmi>

사회 지출

최근 몇 년간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OECD 평균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2019년 약 20%에서 2020년 23%로 약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그림 6.10). 3% 포인트 변화 중 2.5% 포인트는 공공 사회 지출의 증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0.5% 포인트는 GDP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초기 상승 이후 GDP 대비 지출 비율은 증가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감소하여 공공 사회 지출은 2020년 23%에서 2022년 OECD 평균 2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국가별 경험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캐나다, 스페인, 미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6% 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반면,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은 가장 낮은 증가율(1% 포인트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공공 사회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노령 및 유족 연금(GDP의 7.7%)과 보건(GDP의 5.8%)입니다(그림 6.11). 이 두 분야는 총 지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공적 연금 지출은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GDP의 15% 이상으로 가장 높고 칠레가 가장 낮으며,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는 GDP의 3% 정도를 연금에 지출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보건 공공지출은 GDP의 8% 이상이며,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는 GDP의 3% 미만입니다.

조세와 민간 사회지출 혜택의 영향을 고려하면 국가별로 GDP 대비 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 수렴합니다(그림 6.11). 약 절반의 국가에서 순 총 사회 지출은 GDP의 20~26%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가진 민간 사회 지출과 세금 감면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큰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은 GDP의 거의 30%로 더 높습니다. 총(세전) 및 총 순 사회지출 측면에서 프랑스는 GDP의 30%로 OECD에서 가장 큰 사회 지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현금 혜택이 항상 국민층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 근로연령층이 받은 공공 현금 이전 중 평균 23%만이 소득분포 하위 20% 가구에 지급되었고, 20%는 소득분포 상위 20% 가구에 지급되었습니다(그림 6.12). 이러한 비중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편으로 다양한 소득 검증 급여를 시행하는 국가인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에서는 현금 급여의 40% 이상이 최하위 20%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대부분의 급여가 과거 소득과 관련된 사회보험적 성격이 강한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에서는 현금 급여의 15% 미만이 최하위 20%에게 돌아갑니다.

정의 및 측정

사회 지출은 일반 정부가 재정 흐름을 통제할 때 공공 지출로 분류됩니다.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의무 부담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질병 급여는 “공공”으로 간주되는 반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질병 급여는 “민간”으로 분류됩니다. 그림 6.10에 표시된 지출은 이러한 혜택에 부과되는 직간접 세금을 공제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세금 지출을 추가하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조세 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 지출의 영향을 고려한 데이터(전체 순 사회지출)는 그림 6.11에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방 국가에서는 하위 정부 계층의 지출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회지출 프로그램 데이터에 관한 기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최빈곤층 20%’와 ‘부유층 20%’는 소득분배 최하위와 최상위 5분위 근로연령층 가구가 받는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Social Expenditure (SOCX) Update 2023: Private social expenditure and the influence of tax systems, OECD, Paris,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2023), “The rise and fall of public social spend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Social Expenditure (SOCX) Update 2023 OECD, Paris,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2022), Income support for working-age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OECD, Paris,

<https://www.oecd.org/social/Income-support-for-working-age-individuals-and-their-families.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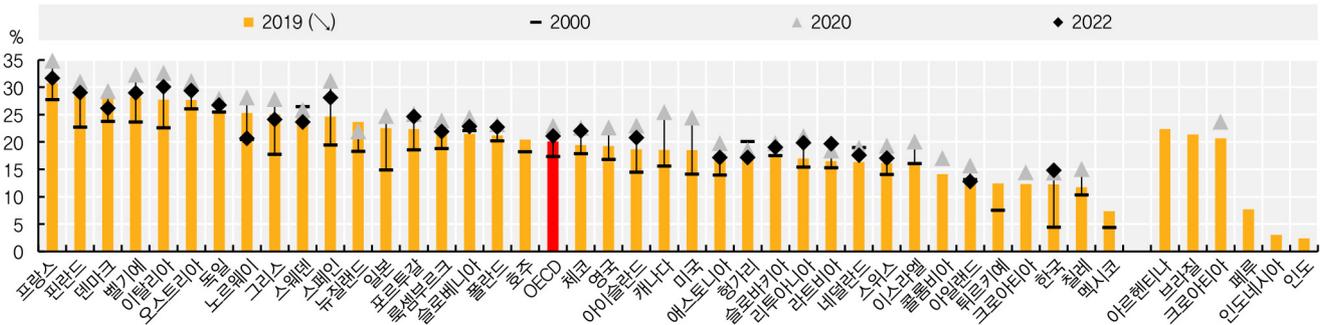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0: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의 경우 2019년이 아닌 2018년입니다. 2020년 및 2022년 자료는 OECD 추정치입니다.

그림 6.12: 코스타리카, 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미국(2021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위스, 터키(2019년), 일본(2018년), 칠레, 아이슬란드(2017년), 브라질(2016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2020년 자료입니다.

그림 6.10. 2022년 공공 사회 지출은 OECD 평균적으로 GDP의 2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별로 그 수준은 크게 다릅니다.

2000년, 2019년, 2020년 및 2022년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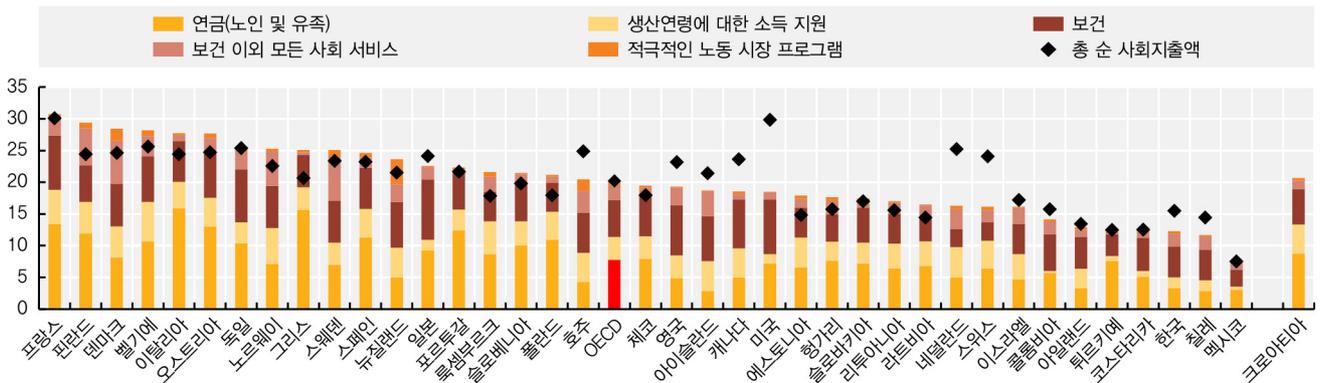


출처: OECD (2023),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OECD (2022),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22*, <https://doi.org/10.1787/7ef894e5-en>; ECLAC, CEPAL STAT Public and private social spending (SOCX methodology).

StatLinks <https://stat.link/8I09xh>

그림 6.11. 대부분의 지출이 연금과 보전에 사용됨

2019년 광범위한 정책 분야별 공공 사회 지출 및 전체 순 사회지출, 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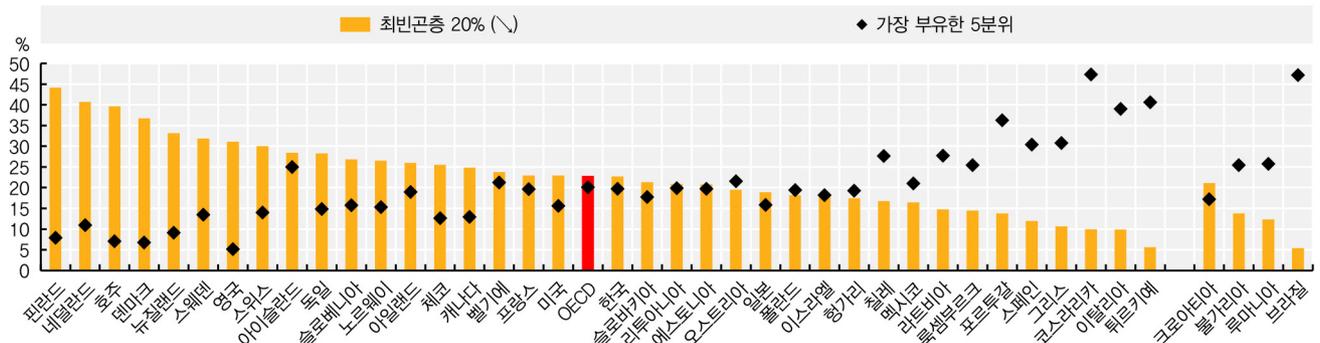


출처: OECD (2023), "Private social expenditure and the influence of tax systems", Social Expenditure (SOCX) Update 2023,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s <https://stat.link/ybvxrs>

그림 6.12. 현금 지원이 항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 및 고소득 그룹의 근로 연령 개인이 받은 공공 현금 이체 비율, 2020년



출처: Calculations based on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StatLinks <https://stat.link/kemgdb>

구매 가능한 주택

주택 동향(trend)은 거주 기간, 경제성 및 품질 측면에서 OECD 회원국 전반에 걸쳐 상당히 다양하며, 이는 국가별로 다양한 역사적 맥락, 가구 선호도 및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OECD 평균적으로 2022년 전체 가구의 71%가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소유한 반면, 민간 임대 시장이나 보조금 지원 임대 주택을 통해 임차한 가구는 24%에 그쳤습니다(그림 6.13).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다수의 중앙 및 동유럽 국가에서는 1990년대 국유 주택의 역사적인 매각으로 인해 70% 이상의 가구가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매우 높은 주택 소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기반 소유자가 전체 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반면, OECD 평균적으로 2022년에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약 24%에 불과했습니다. 스위스와 독일만이 임차인의 과반수(각각 62%,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각각 40% 이상의 임차 가구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임대주택(사회임대주택)은 31개 OECD 회원국에 존재하지만, 사회주택 재고 규모는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OECD 구매 가능한 사회주택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에서는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구매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의 지표 PH4.2 참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역의 많은 가구가 구매 가능한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상당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8개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기반 저소득 소유자의 40% 이상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에 지출했습니다. 13개 OECD 회원국의 민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인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그림 6.14). 자료가 있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저소득 세입자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할 가능성이 민간 시장 세입자보다 낮았습니다.

개인이 저렴한 주택 마련과 유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연령대별,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OECD 평균적으로 18~29세 개인의 60%가 저렴한 주택 마련과 유지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거나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반면, 30~54세는 49%, 55~64세는 38%만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그림 6.15). 자료가 있는 국가 중 에스토니아에서만 30~54세 인구가 18~29세 인구보다 저렴한 주택 마련과 유지에 대해 더 걱정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47.45% 대 46.5%). 마찬가지로 터키에서는 55~64세 인구의 73%가 이러한 걱정을 하는 반면, 18~29세 인구는 63%만이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 및 측정

주택 경제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주로 주택 비용과 가구소득의 비율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일반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가처분 가구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 또는 모기지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인 주거비 부담(여기서 사용), ②가구의 전체 최종 소비 지출 대비 주거 관련 지출(주택,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다른 지표는 주거지를 적절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는 가구의 비율과 같은 다른 차원의 주택 경제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임대 시장은 사회 임대 주택이라고도 하며,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되고 특정 규칙에 따라 할당된 주거용 임대 숙소로 정의됩니다(Fitzpatrick, S. and H. Pawson, 2014 참조). 민간 임대 시장은 임대 주택이 시장 가격으로 제공되는 임대 시장의 영리 부문으로 정의됩니다.

주택 관련 걱정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위험(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향후 1~2년을 생각했을 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저렴한 주택 마련/유지 불가능”. 응답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걱정한다”, “매우 걱정한다”, “선택할 수 없음/ 해당 없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6.15는 “어느 정도 우려된다” 또는 “매우 우려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참고문헌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

OECD (2023), *Main Findings from the 2022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0aea928-en>

Salvi del Pero, A. et al. (2016), “Policies to promote access to good quality affordable housing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76,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jm3p5gl4djd-en>.

Fitzpatrick, S. and H. Pawson (2014), “Ending Security of Tenure for Social Renters: Transitioning to ‘Ambulance Service’ Social Housing?”, *Housing Studies*, Vol. 29/5, pp. 597-615, <http://dx.doi.org/10.1080/02673037.2013.803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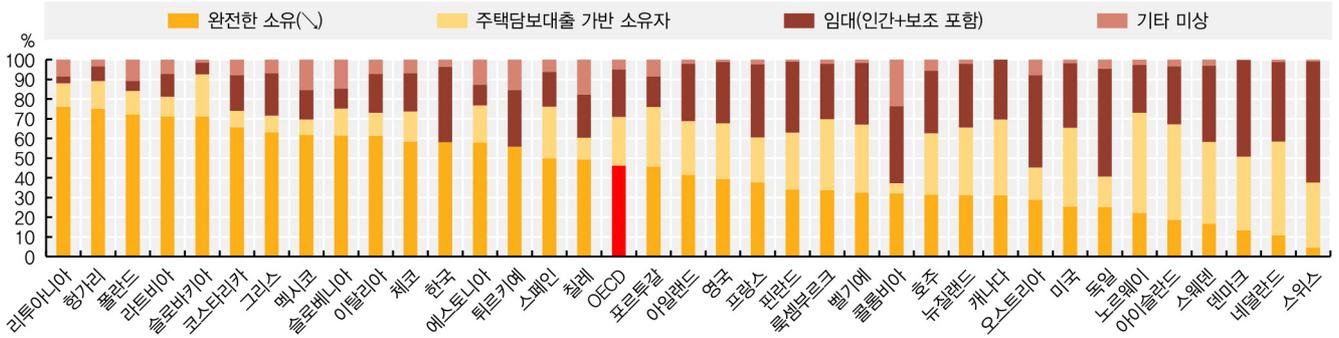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3: 스웨덴의 경우, 보조금 및 개인 임대료로 임차하는 세입자는 보험 적용 범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한국과 터키에서는 주택을 직접 소유한 세입자와 주택담보대출 기반 소유자를 한데 묶습니다.

그림 6.14: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한국, 미국에서는 가처분소득 대신 총소득을 사용합니다.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에서는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가 민간 시장 임대료 범주에 포함됩니다. 두 수치 모두 호주, 스위스, 영국, 미국의 자료는 2021년, 노르웨이는 2020년, 캐나다와 터키는 2019년, 아이슬란드는 2018년, 이스라엘과 뉴질랜드는 2017년, 한국은 2012년을 참조했습니다.

그림 6.13.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임대보다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다양한 임차 유형에 속한 가구의 비율(백분율), 2022년 또는 최근 연도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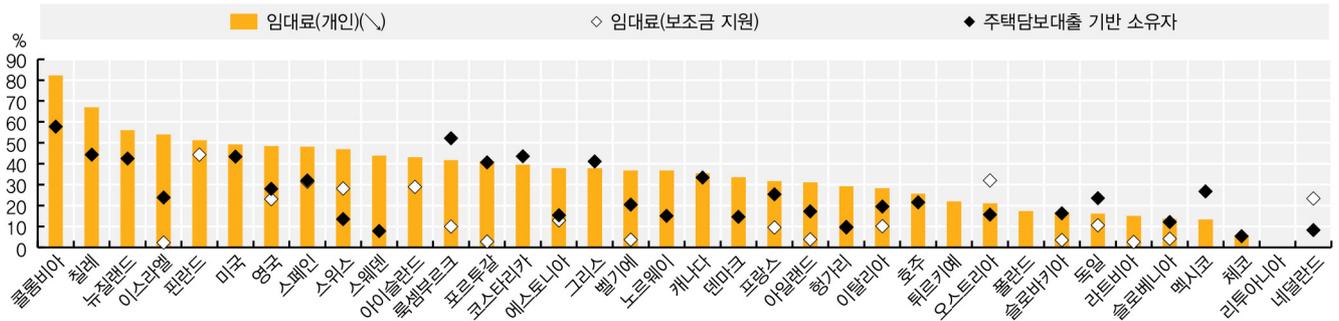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Indicator HM1.3.

StatLinks <https://stat.link/lx8iym>

그림 6.14. 저소득층은 상당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모기지 및 임대료로 지출하는 소득 분포 하위 5분위 인구의 비율, 주택점유 형태, 백분율, 2022년 또는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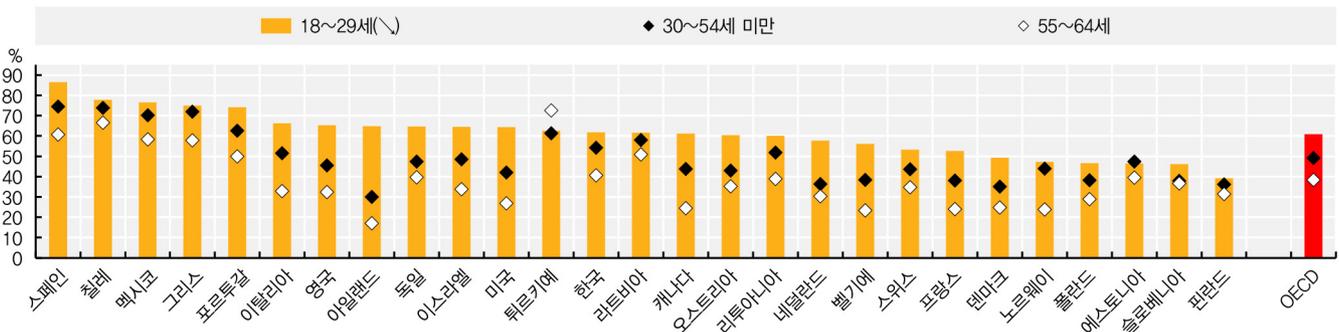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Indicator HC1.2.

StatLinks <https://stat.link/9s8lpe>

그림 6.15. 청년들의 주요 걱정거리인 주거 문제

2022년 연령대별로 저렴한 주택 마련/유지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2022년



출처: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2022, <https://www.oecd.org/social/risks-that-matter.htm>.

StatLinks <https://stat.link/f9qths>

7 보건 지표

기대여명

2021년 출생 시 기대여명은 OECD 회원국 평균 80.3세로 집계되었습니다(그림 7.1). OECD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에서 출생 시 기대여명이 80세를 넘었으며, 일본, 한국, 스위스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일부 중앙 및 동유럽 국가의 기대여명은 75세에서 80세 사이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기대여명은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75세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모든 협력국에서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65.3세), 인도네시아(68.8세), 인도(70.2세)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출생 시 기대여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볼 때 여성은 83.0세, 남성은 77.6세입니다(그림 7.1). 그 격차는 평균 5.4년에 이릅니다. 이러한 기대여명의 성별 차이는 부분적으로 남성의 위험 요인, 특히 흡연, 과도한 음주, 덜 건강한 식습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은 자살이나 사고와 같은 폭력적인 사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중부 및 동유럽 국가에서는 기대여명의 성별 차이가 8년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성별 격차가 3년 이하로 비교적 좁은 편입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으로 인한 이례적인 사망자 수로 인해 기대여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모든 OECD 및 협력국에서 기대여명이 증가했으며, OECD 회원국 전체에서 평균 1.7년이 증가했습니다(그림 7.2).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기대여명은 OECD 회원국 전체에서 평균 0.7세 감소했습니다. 중앙 및 동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체코,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국 등 7개국은 코로나19 첫 2년 동안 지난 10년간 늘어난 기대여명만큼 또는 그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협력국인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1년 사이의 기대여명은 모든 국가에서 감소하지 않았지만, 증가하더라도 그 폭이 작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지난 10년간 많은 OECD 회원국에서 기대여명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둔화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그림 7.2).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 증가 속도가 더 느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여명 증가가 둔화되는 원인은 여러 측면에 걸쳐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만과 당뇨병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각국은 이러한 순환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있어 이전의 진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65세 인구는 19.5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기대여명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3.3년 더 높습니다. OECD 회원국 중 2021년 65세 기대여명은 여성은 스페인(23.5년), 남성은 아이슬란드(20.5년)가 가장 높았습니다. 슬로바키아 여성(17.1년)과 라트비아 남성(12.7년)이 가장 낮았습니다(그림 7.3).

65세 건강수명은 OECD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1년 65세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10년, 남성은 9.6년으로 65세 일반 기대여명에 비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눈에 띄게 작았습니다. 65세 건강 기대여명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남녀 모두 14년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2위 국가(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보다 2년 가까이 높았다. 슬로바키아와 라트비아의 65세 건강 기대여명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약 5년 이하였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이 추가 수명의 거의 4분의 3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는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3분의 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정의 및 측정

출생 시 기대여명은 주어진 연령별 사망률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출생 코호트의 실제 연령별 사망률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연령별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면 실제 수명은 현재의 사망률로 계산한 기대여명보다 더 길어질 것입니다.

장애 없는 기대여명(또는 “건강수명”)은 활동 제한이 없는 기간의 수로 정의됩니다. 유럽에서는 이 지표가 매년 EU 국가와 일부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국가를 대상으로 유로스탯(Eurostat)에서 산출됩니다. 장애 측정은 EU-SILC 설문조사의 글로벌 활동 제한 지표(GALI)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EU-SILC의 문화적 요인과 질문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비교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23-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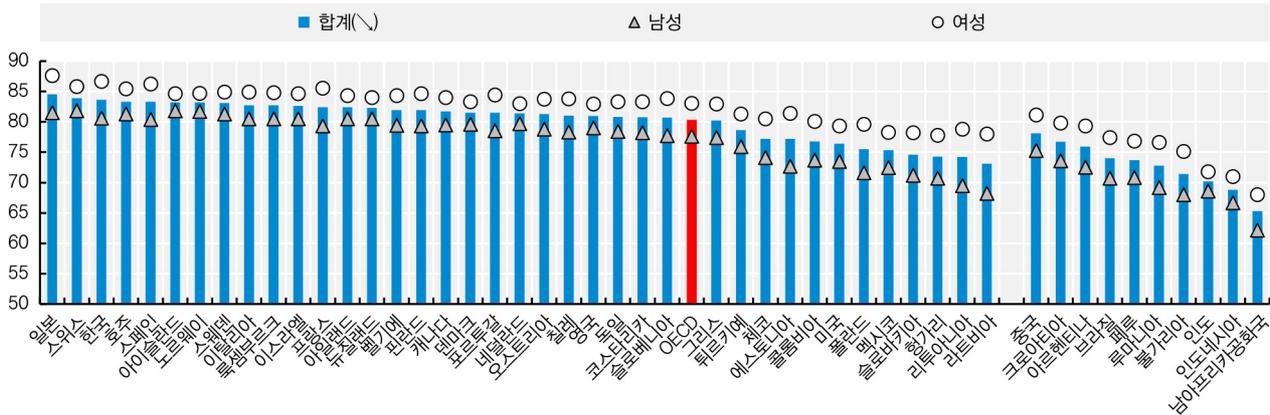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1: 터키의 자료는 2019년 기준입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자료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림 7.3: 아이슬란드 및 영국의 자료는 2018년 기준입니다. 노르웨이의 자료는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림 7.1.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년 이상 더 오래 사는 비율

출생 시 기대여명, 성별, 년 단위,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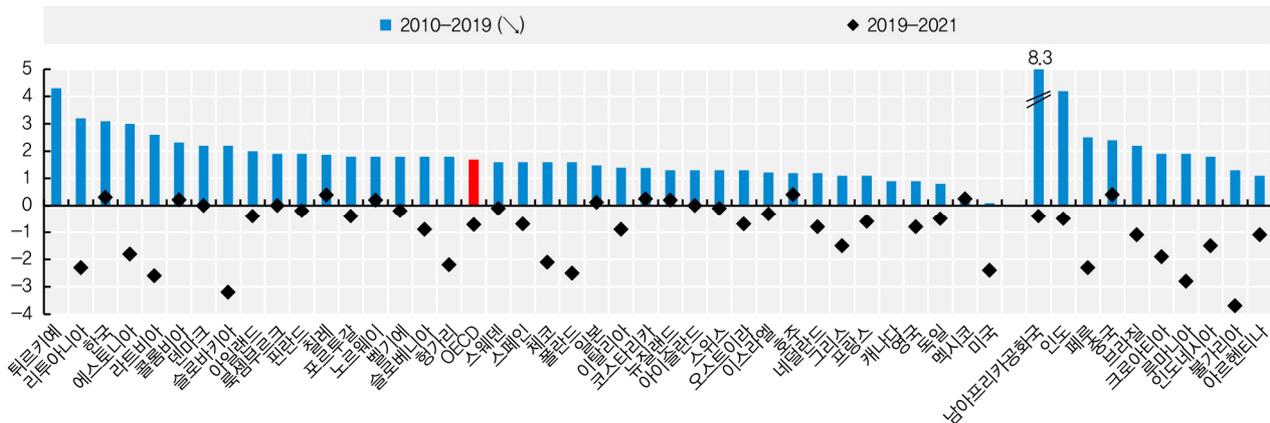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e4l3hg>

그림 7.2.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기대여명 감소

출생 시 기대여명 변화, 2010~19년 및 2019~21년, 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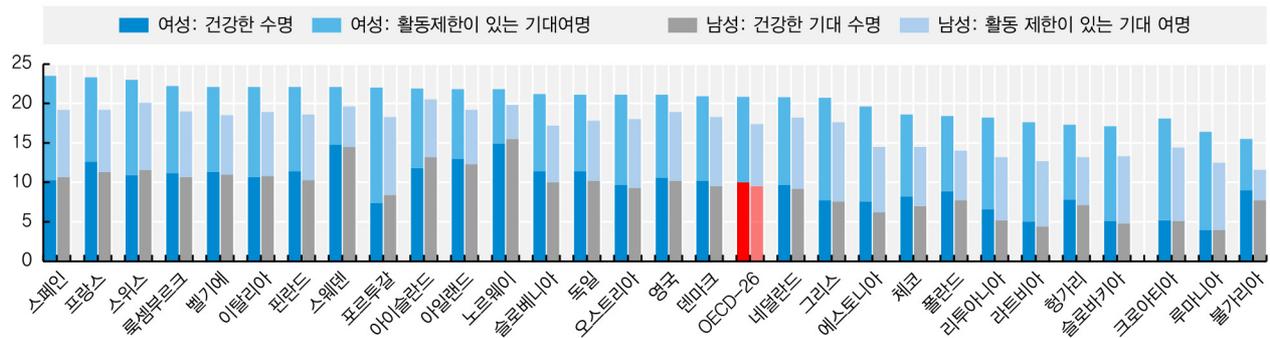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4 (forthcoming), provisional data,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i0qs45>

그림 7.3. 65세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10년, 남성은 9.6년으로 65세 일반 기대여명에 비해 남녀 간 차이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65세의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성별,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Eurostat.

StatLinks <https://stat.link/cbgzj1>

자살

자살은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2020년(또는 가장 최근 연도)에 15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약 11명이 자살한 수치입니다. 자살 행동의 원인은 복잡하며,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기 쉬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자살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팬데믹과 같은 충격, 재정적 위기도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1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은 그리스와 터키가 인구 10만 명당 5명 이하로 가장 낮았습니다(그림 7.4). 반면 벨기에, 일본,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한국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마다 평균 자살률은 매우 다양하지만, 항상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그림 7.4). 라트비아와 폴란드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최소 7배 이상 높습니다. 아이슬란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성별 격차가 더 작지만 남성의 자살률은 여전히 여성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자살률은 1980년대 초에 정점을 찍었습니다(그림 7.5).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살률은 감소했으며 덴마크, 룩셈부르크, 헝가리에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멕시코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맞물려 평균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자살률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항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지난 10년간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경우 자살률이 2010년 10만 명당 2.4명에서 2019년 4.4명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2010년 6.7명에서 2020년 8.4명으로 증가했으며 칠레, 그리스,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됩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살률이 크게 감소한 좋은 예이지만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5세 이상은 10만 명당 18명이 자살하는 반면, 15~29세는 10만 명당 10명이 자살하는 등 노년층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그림 7.6). 연령별 자살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와 포르투갈로, 7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자살률이 청소년(15~19세)보다 9배나 높습니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등 일부 OECD 회원국에서는 10대 청소년이 노인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페루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미만의 자살률은 한국, 뉴질랜드, 일본,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높으며 청소년 10만 명당 17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비올 지중해 유럽 국가, 이스라엘,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낮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 차이는 특히 75세 이후 고연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7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패턴은 고령 남성이 고령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고립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및 측정

세계보건기구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예상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실행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국가 간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은 자살 의도를 확인하는 방법, 사망 진단서 작성 책임자, 법의학 조사 실시 여부, 사망 원인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 등 여러 보고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는 자살 행위와 관련된 낙인 또는 보고 기준과 관련된 데이터 문제로 인해 자살 건수가 과소 보고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차이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률은 특정 연도에 한 국가에 등록된 사망자 수를 해당 인구 규모로 나눈 값입니다. 이 비율은 국가 간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연령 구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를 제거하기 위해 2015년 OECD 인구를 연령 표준화되었습니다.

사망률의 출처는 WHO 사망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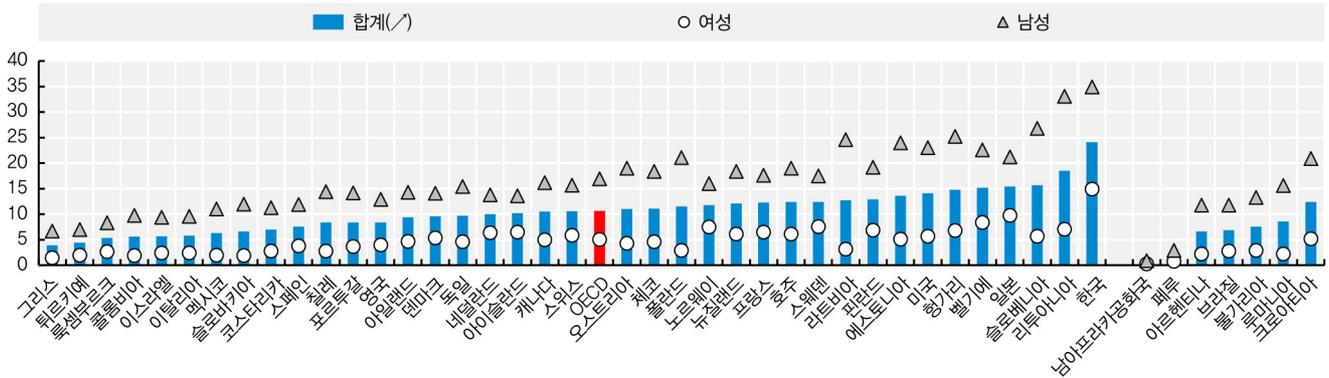
OECD/European Union (2022), *Health at a Glance: Europe 2022: State of Health in the EU Cyc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07433b0-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4: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는 2016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17년, 벨기에,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은 2018년, 캐나다,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터키는 2019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미국은 2020년 데이터를 참조했습니다.

그림 7.4. OECD 회원국에서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8배 더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된 자살률, 성별,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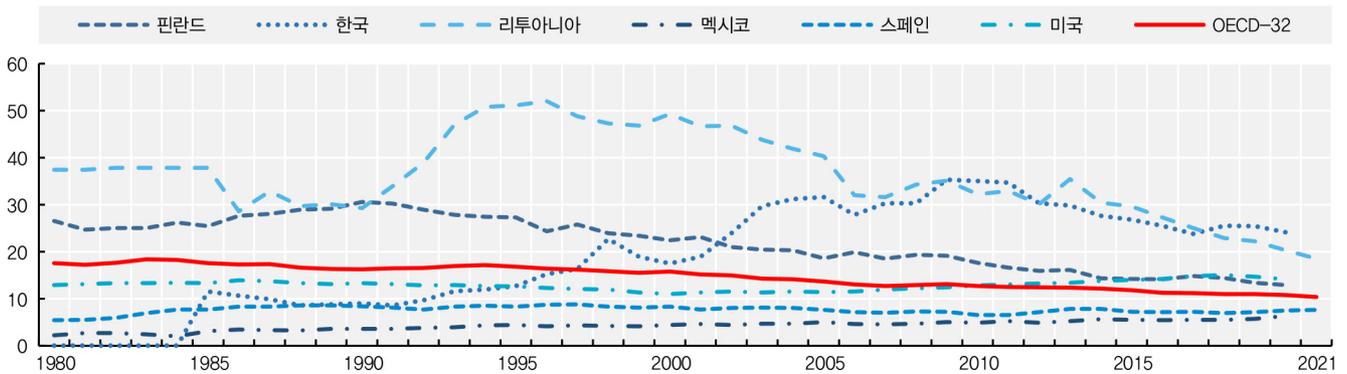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h5f1cr>

그림 7.5. 자살률은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국가별 추세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된 자살률 추이, 일부 OECD 회원국, 198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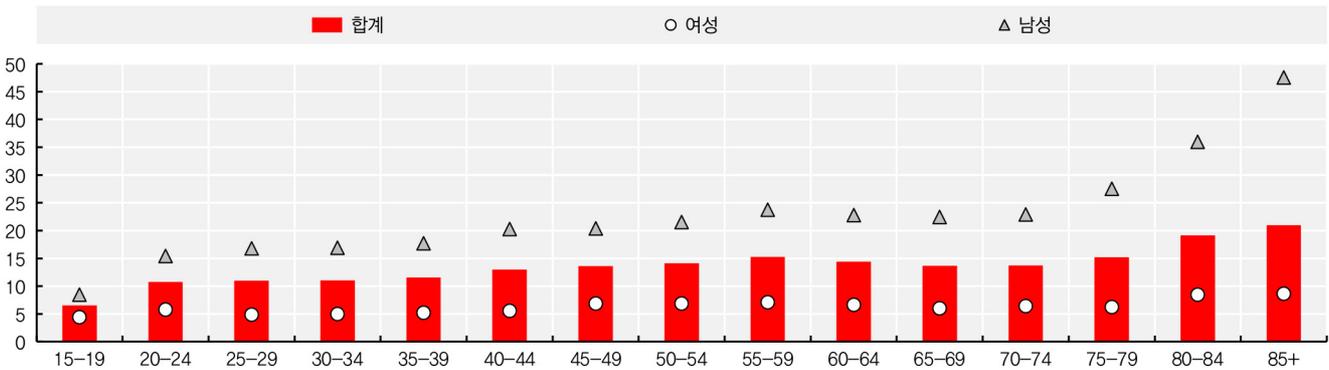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http://dx.doi.org/10.1787/health-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89ioqv>

그림 7.6. 자살률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연령대 및 성별, OECD 평균,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Secretariat calculations from WHO Mortality database, www.who.int/healthinfo/mortality_data/en.

StatLinks <https://stat.link/k7x41w>

보건 지출

국가가 보건에 지출하는 금액과 그 지출이 한 해에서 다음 해로 증가하는 비율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각국의 다양한 재정 및 보건 시스템 조직 구조를 반영합니다.

2022년 미국은 1인당 1만2,555달러를 보건에 지출하여 다른 모든 OECD 회원국을 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그림 7.7). 이 수준의 보건 지출은 OECD 평균(5,000달러)의 2.5배에 달하며, 다음으로 지출 규모가 큰 스위스보다 55% 높은 수준입니다. 약 4분의 3의 국가가 1인당 의료비 지출 범위인 3,000~8,000달러에 속합니다. 3,000달러 미만을 지출하는 국가에는 터키와 함께 여러 중앙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OECD 회원국이 포함됩니다. 1인당 보건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1인당 1,200달러(OECD 평균의 24%)를 지출했습니다. 주요 신흥 경제국 중 2022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의 1인당 보건 지출은 각각 OECD 평균의 20%, 8%, 4%에 불과했습니다.

그림 7.7은 또한 재정 조달 제도의 유형에 따른 보건 지출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전체 보건 지출의 약 4분의 3이 정부 제도(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또는 일종의 강제적 보험(독일,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에서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민간 자발적 의료보험이나 가계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자발적 제도를 통한 보건 지출은 전체 지출의 22%를 차지합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1인당 보건 지출과 GDP 추이는 2008년의 경제 및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두 가지 충격을 반영합니다(그림 7.8). 2008년과 2009년에 OECD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치가 시행되면서 단기적으로 보건 지출 증가율이 유지되다가 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후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건 지출과 GDP 모두 다소 높은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에는 경제활동과 소비자 지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광범위한 봉쇄 및 기타 공중 보건 조치로 인해 많은 OECD 경제가 자유 낙하했습니다. 2021년에는 1인당 GDP가 평균 5.8% 증가하면서 반등했습니다. 동시에 각국이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함에 따라 1인당 실질 보건 지출은 2020년 4%에서 2021년 8%로 급증했습니다.

국가별 팬데믹의 급성기에서 벗어난 2022년에는 1인당 평균 보건 지출이 실질 기준으로 1.5%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몇 년 동안 OECD 회원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2.6% 증가했습니다(그림 7.9). 2020년 코로나19의 출현으로 보건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각국 정부가 팬데믹의 영향을 늦추고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동원하면서 보건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ECD의 1인당 평균 지출 증가율은 연 3.3%로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에 국가별로 보건 지출 증가 패턴에서 다양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역별로 다양한 파동의 심각성과 봉쇄 정책의 범위 및 기간으로 인해 관찰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팬데믹 기간에 직전 해보다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였으며, 멕시코만 최근 3년 동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의 및 측정

보건 지출은 보건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를 측정합니다. 이 측정에는 의료 서비스 및 상품, 공중 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과 행정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출처의 지출이 모두 포함되지만 자본 형성(인프라, 기계 및 장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출은 제외됩니다.

국가별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1인당 보건 지출을 공통 통화(미국 달러)로 환산하고 구매력 평가(PPP) 환율을 사용하여 국가별 통화 구매력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실질 성장률 계산에는 경제 전반 디플레이터(economy wide deflators)가 사용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23-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7: 비OECD 회원국의 경우 2022년이 아닌 2020년입니다.

보건 및 의료 인력

보건의료제도와 장기요양제도는 OECD 회원국 전체 노동력의 약 10%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제도의 중심 역할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장기요양(LTC)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2021년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7명 이었습니다(그림 7.10). 멕시코, 콜롬비아, 터키에서는 2.5명 이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그리스에서는 5명 이상이었습니다(포르투갈의 그리스 의사 수는 비진료 의사를 포함하지만, 정의 및 측정에 대한 상차 참조).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 미만입니다.

간호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가장 큰 보건의료 종사자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개업 간호사 수는 9.2명으로, 이는 평균 개업 의사 수의 약 2.5배에 달합니다(그림 7.11). 그러나 국가 간 차이는 상당히 큼니다. 콜롬비아, 터키, 멕시코, 칠레, 그리스에서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4명 미만인 반면 독일, 미국, 일본, 아일랜드, 호주, 아이슬란드에서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12명 이상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18명을 넘었습니다.

2023년 OECD 회원국 전체 의사의 3분의 1, 간호사의 4분의 1이 55세 이상이었습니다(그림 7.11).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에서 55세 이상 의사의 비중이 40%를 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라트비아에서는 45%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55세 이상 간호사의 비율은 라트비아에서 거의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55세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향후 10년 이내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인력의 고령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신규 의사와 간호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 인력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 조건이 적절하고 연금 제도로 인해 65세 이후에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 및 의료 인력의 성별 분포는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이 의사의 절반(50%)을 차지했습니다(그림 7.12). 이 비율은 발트해 연안 국가(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서 70% 이상, 일본과 한국에서는 25%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이 장기요양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21년 OECD 평균적으로 장기요양 종사자의 최대 87%가 여성이었으며, 일본에서는 78%, 한국에서는 95%에 달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데이터는 환자에게 직접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 수로 정의되는 개업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벨기에와 프랑스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는 인턴과 레지던트(수련 중인 의사)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콜롬비아, 슬로바키아, 터키는 환자에게 직접 진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사도 포함하여 5~10%를 추가합니다. 칠레, 그리스, 포르투갈은 현재 진료 중인 의사뿐만 아니라 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 수를 보고하고 있어 진료 중인 의사 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 수에는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실무자)와 관리자, 교육자 또는 연구원으로 일하는 간호사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전문간호사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준전문간호사가 포함되며, 두 가지 범주와 수준의 간호사가 있는 국가에서는 준전문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33%에서 50%를 차지합니다(크로아티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에서는 준전문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33%에서 50%를 차지합니다).

LTC는 장기 의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건강 상태의 악화를 줄이거나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제공되는 다양한 의료, 개인 간호 및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며, 개인 관리를 돕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OECD (2023), *Beyond Applause?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7d33ab3-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7.10: 룩셈부르크의 경우 가장 최신 자료는 2017년입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업 의사 수가 과대 추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림7.11: 연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연도는 StatLink를 참조하세요.

그림7.12: OECD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는 차트에 표시된 25개 OECD 회원국의 가중치 없는 평균입니다. 자료는 호주와 일본의 경우 2016년, 뉴질랜드의 경우 2019년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료는 국가별 출처를 기반으로 한 OECD 추정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흡연 및 음주

담배와 술은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인 심혈관 질환과 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합니다.

2021년 성인 인구의 평균 약 16%가 매일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그림 7.13). 그러나 OECD 회원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와 아이슬란드에서는 성인 인구의 8% 미만에서 프랑스와 터키에서는 25%가 넘는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흡연율이 더 높습니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의 흡연율은 지난 10년간 현저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2011년 21%에서 2021년 16%로 5%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페루에서는 8%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판매량으로 측정된 알코올 소비량은 성인 1인당 8.6리터로,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은 8.6리터였습니다(그림 7.14).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성인 1인당 연간 12리터 이상으로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은 낮은 알코올 소비량을 기록했으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종교적,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일부 인구 집단에서 알코올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이후 많은 OECD 회원국에서 성인 1인당 평균 알코올 소비량이 0.3리터 감소했으며,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에서 2리터 이상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라트비아와 멕시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는 알코올 소비량이 1리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빨리 중독에 빠지며, 규칙적인 흡연과 음주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성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 성과, 폭력, 부상, 약물 사용, 위험한 성행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7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흡연을 보고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흡연을 보고할 확률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아이슬란드에서 약 4%에서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는 25%가 넘었습니다(그림 7.15). 핀란드에서는 남학생의 흡연율이 훨씬 더 높았고,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는 그 반대의 패턴이 우세했습니다.

음주의 경우, 평균적으로 15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평생 두 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7%에서 덴마크와 헝가리에서는 35% 이상의 비율을 보였습니다(그림 7.16). OECD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 경험이 있을 확률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7%포인트 이상 높은 비율로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5%포인트 이상 더 많은 비율로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매일 흡연자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이탈리아의 데이터에는 매일 흡연자와 가끔 흡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스너프(snuff)와 같은 다른 형태의 무연 담배 제품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소비량은 15세 이상 성인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판매량(리터)으로 정의됩니다. 알코올 음료를 순수 알코올로 변환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국가별 출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식 데이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관광객 소비와 국내 또는 불법 생산 등 기록되지 않은 알코올 소비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데이터는 관광객 소비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되었으며, 룩셈부르크의 알코올 소비량은 프랑스와 독일의 평균 소비량으로 추정됩니다.

15세 아동의 성별 흡연 및 음주율은 OECD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2021/22 학령기 아동의 건강 행동(HBSC) 연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표시된 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흡연한 15세 청소년과 두 번 이상 음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입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e3016b9-en>.

OECD (2021), *Preventing Harmful Alcohol Use*,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e4b4ffb-en>.

OECD (2015), *Tackling Harmful Alcohol Use: Economics and Public Health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doi.org/10.1787/9789264181069-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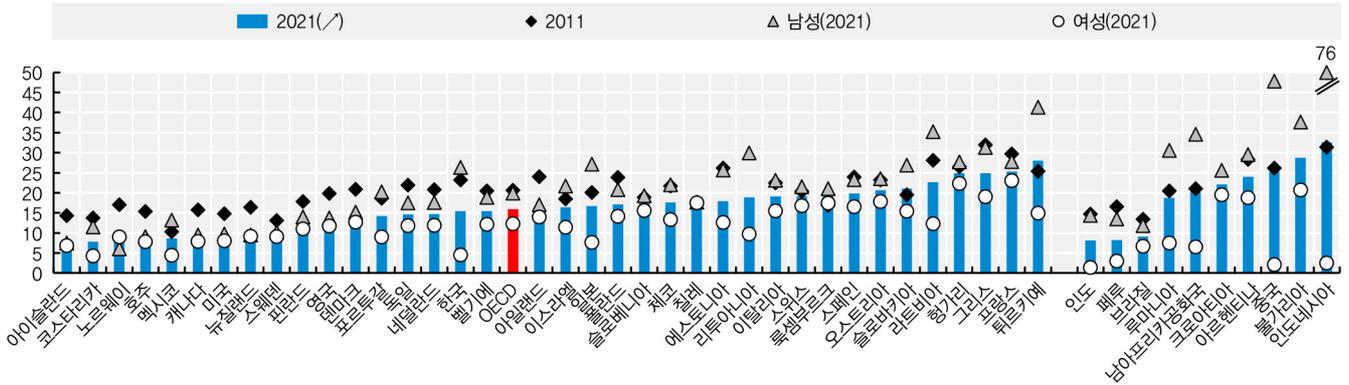
그림 7.13: 2021년 자료는 스위스의 경우 2017년, 벨기에의 경우 2018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터키의 경우 2019년, 핀란드의 경우 2020년, 호주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7.14: 2021년 자료는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페루, 포르투갈,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7.15 및 그림 7.16: 벨기에의 자료는 플랑드르(60%) 및 프랑스(40%)의 인구 점유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87%), 스코틀랜드(8%) 및 웨일즈(5%)의 인구 점유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그림 7.13.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성인 흡연율의 현저한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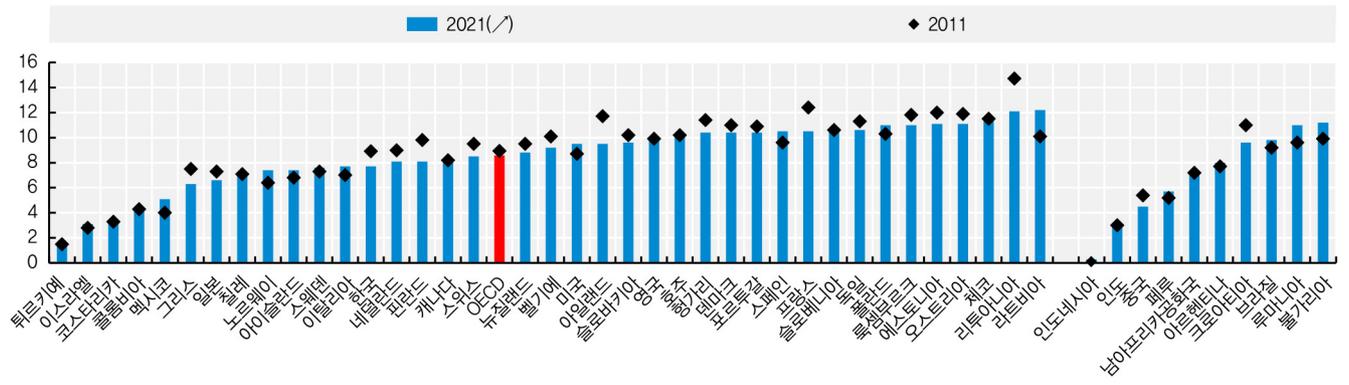
2011년과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의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성별 비율



출처: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https://doi.org/10.1787/7a7afb35-en>.
StatLinks <https://stat.link/b98ns4>

그림 7.14. 많은 OECD 회원국의 성인 알코올 소비량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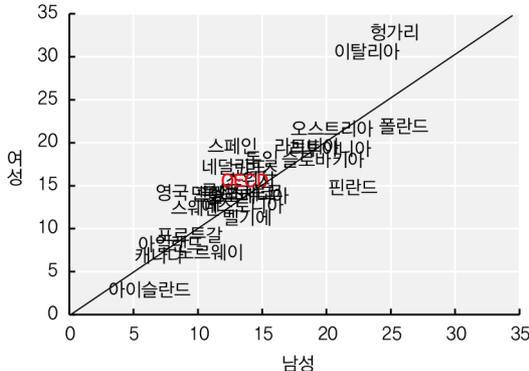
2011년과 2021년(또는 가장 가까운 연도), 15세 이상 1인당 순수 알코올 소비량(리터)



출처: OECD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https://doi.org/10.1787/7a7afb35-en>.
StatLinks <https://stat.link/cy8p46>

그림 7.15. 15세 청소년 7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담배를 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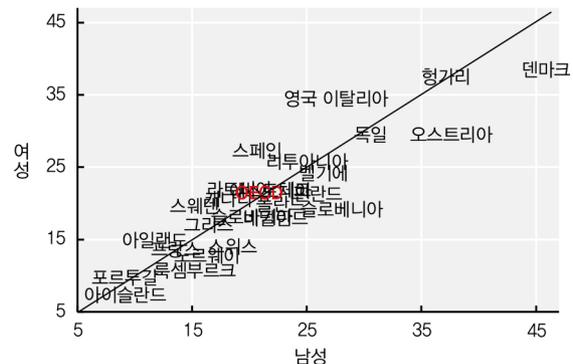
2021/22년 지난 30일 동안 흡연한 15세 인구의 성별 비율, 2021/22년



출처: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2021/22 survey.
StatLinks <https://stat.link/m6wkh4>

그림 7.16. 15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평생 두 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2021/22년 성별에 따라 음주 경험이 2회 이상인 15세 인구의 비율



출처: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2021/22 survey.
StatLinks <https://stat.link/fkj29o>

8 사회 통합 지표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삶의 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완하는 주관적인 지표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 척도로 평가하라는 질문에 OECD 평균은 2021~22년 6.7점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8.1).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1~22년 핀란드, 이스라엘,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삶의 만족도가 7.5점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그다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측정된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을 차지한 터키보다 약 3단계(정의 박스 참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다른 국가로는 콜롬비아와 그리스 등이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6점 이상부터 인도의 경우 4점 미만까지 신흥 경제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 인구학적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그림 8.2).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가별로 삶의 만족도에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와 리투아니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일본, 한국, 뉴질랜드, 터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젊은 층이 평균적으로 노년층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22년 이스라엘과 리투아니아의 젊은이들은 OECD 국가 중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터키의 50세 이상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정규직, 고등 교육,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느낌, 감정, 경험에 대한 스냅샷은 갤럽의 긍정 및 부정 경험 지수를 사용하여 그림 8.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긍정적 경험' 종합 지수는 코스타리카와 멕시코가 가장 높고 터키가 가장 낮으며, '부정적 경험' 종합 지수는 터키가 가장 높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가장 낮습니다. 이들 국가 전반에서 긍정적 경험 지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긍정적 경험 지수와 부정적 경험 지수 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 및 측정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응답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1단 사다리에서 하위 단계(0)는 최악의 삶을, 최상위 단계(10)는 최고의 삶을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섹션에서 사용된 주요 지표는 국가별 평균 점수입니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공통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하며 국가 전체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합니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는 긍정적 경험 지수와 부정적 경험 지수도 함께 발표합니다. 긍정 경험 지수는 응답자가 인터뷰 전 날 즐거움을 많이 느꼈는지, 많이 웃었는지, 잘 쉬었는지, 배운 것이 있는지, 흥미로운 일을 했는지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한 국가별 응답을 평균한 것입니다. 단, '관계 상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경험 지수는 응답자가 신체적 고통, 걱정, 스트레스, 슬픔, 분노를 많이 경험했는지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대한 국가별 응답을 평균한 것입니다. 지수 점수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모든 유효한 긍정 응답의 평균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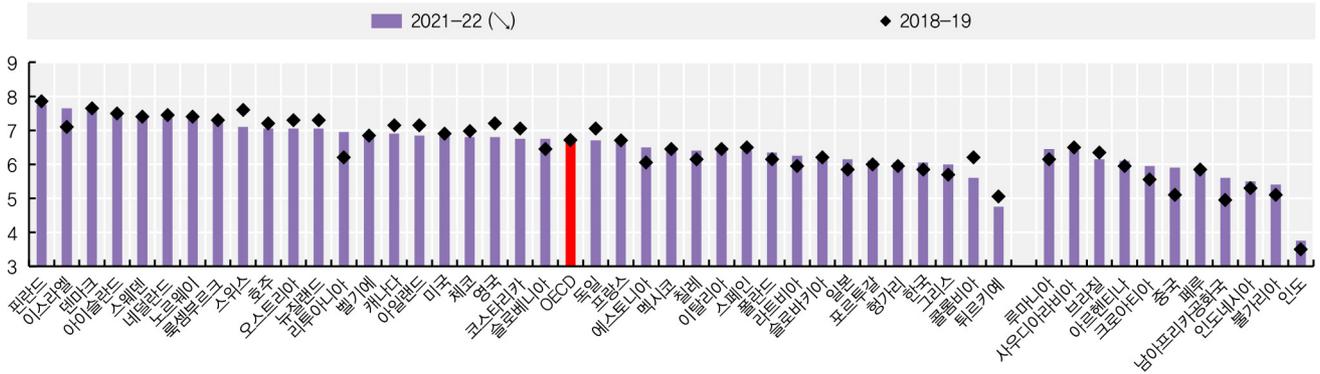
이 데이터 출처는 국가 간 높은 수준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 하지만, 결과는 샘플링 및 비샘플링 오류, 응답률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일부 사회 인구통계학적 그룹별로 제공됩니다. 결과는 전년 대비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동안 평균을 냈습니다.

참고문헌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 Mahoney, J. (2023), “Subjective well-being measurement: Current practice and new frontiers”,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No. 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e180f51-en>.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91655-en>.

그림 8.1. 삶의 만족도 수준과 추세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2021~22년과 2018~19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0~10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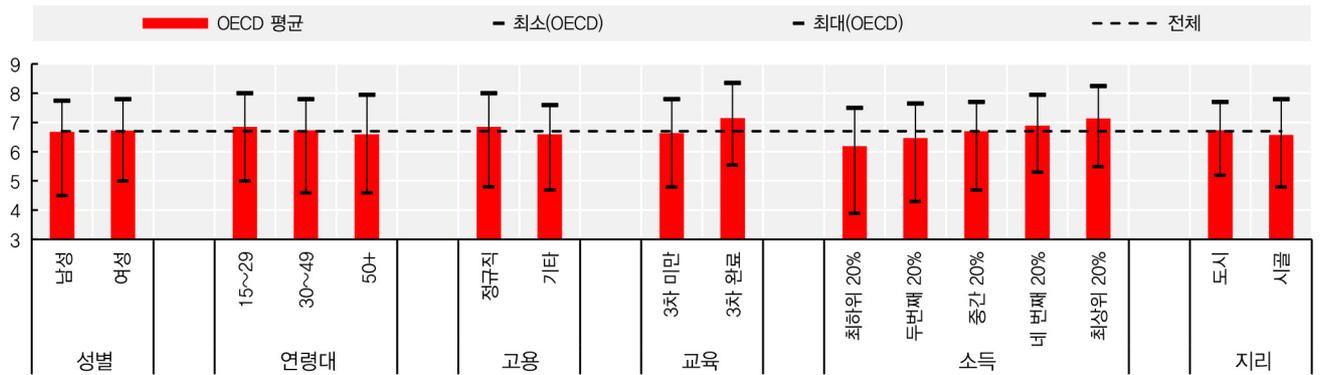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9z8lew>

그림 8.2. 사회 인구학적 그룹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만족도

사회 인구 통계 그룹별 0~10점 척도의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OECD 평균, 2021~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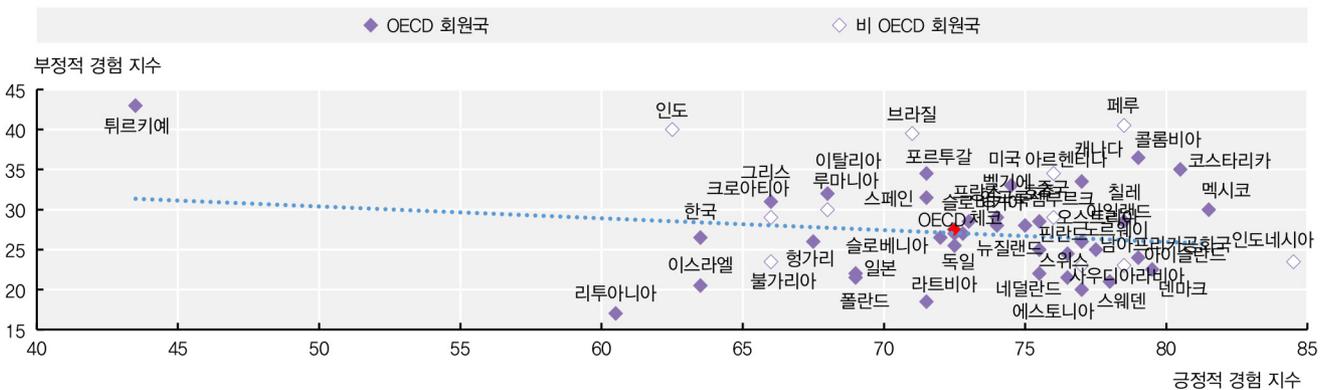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0akmy3>

그림 8.3. 사람들의 일상적인 느낌, 감정, 경험에 대한 스냅샷

2021~22년 긍정적 경험 지수 대 부정적 경험 지수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k72g1d>

기관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경제 기관이 부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사회적 신뢰 및 사회통합(social 응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원입니다.

2021년 조사에 참여한 OECD 회원국에서는 인구의 절반 미만(41%)이 평균적으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그림 8.4).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60% 이상의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프랑스, 일본, 라트비아에서는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도는 공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평균적으로 47%의 사람들이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 법원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지만(57%),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응답자 10명 중 4명만이 매우 높거나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인구의 하위 그룹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청년층과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그림 8.5).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 상태가 낮다고 인식하거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정부를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시스템에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3%포인트 높았습니다.

갤럽 세계 여론조사 자료는 정부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료를 보여줍니다(그림 8.6). 2021/22년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이 자국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가장 낮은 수준(20% 미만)을 보였고, 콜롬비아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이 가장 높은 수준(80%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패에 대한 인식은 모든 주요 협력국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불가리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80% 이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패에 대한 인식은 호주와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악화된 반면,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의 및 측정

OECD는 2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OECD 신뢰도 조사에서 국가별 대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2021년 11~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일부 국가는 2020년과 2022년 1~3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OECD 신뢰도 조사는 11점 척도형 응답(scale-response)으로 다음과 같이 집계됩니다: 0-4 = 낮음/가능성 낮음, 5 = 중립, 6-10 = 높음/가능성 높음.

OECD 신뢰도 조사는 상당한 국가 범위(보통 국가당 2,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어 하위 그룹 분석이 가능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설문조사 방법 및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governance/trust-in-government/에서 광범위한 방법론적 배경 문서를 참조하세요.

그림 8.5에서 정치적 목소리는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높음은 6~10점, 낮음은 0~4점의 응답에 해당합니다. 중립적인 응답(5에 해당)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정당 투표는 “지난 총선에서 투표한 정당(또는 투표하지 않았다면 투표했을 정당)이 현재 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상위 20%와 하위 20%를 의미합니다. 교육은 고학력과 저학력을, 나이는 50세 이상과 18~29세를 나타냅니다.

부패 인식에 대한 데이터는 이분법적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나라 정부 전반에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실시되는 갤럽 월드 여론조사에서 각 국가의 주요 언어로 번역된 공통 설문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표본은 확률에 기반하며 농촌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15세 이상 거주 인구를 전국적으로 대표합니다. 따라서 국가 간 높은 수준의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지만, 결과는 표본 추출 및 비표본 추출 오류, 응답률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전년 대비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의 평균값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문헌

OECD (2023), *Government at a Glance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d5c5d31-en>.

OECD (2022), *Building Trust to Reinforce Democracy: Main Findings from the 2021 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Building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07f99c-en>.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VAW)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 성폭력 및 학대,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괴롭힘이 포함됩니다. 여성에 대한 다른 형태의 폭력에는 괴롭힘, 강간 및 기타 형태의 폭행, 아동 결혼, 인신매매, 여성 생식기 절단, 재생산권 부족,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사회적 규범,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적 법률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국가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OECD 회원국 전체에서 22%의 여성이 지금까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4%에 달했습니다. 콜롬비아와 터키 여성의 30% 이상이 지금까지 파트너로부터 대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한국, 멕시코, 터키, 콜롬비아 여성의 8%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8.7). 그러나 생존자/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탈출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유형률은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ECD 사회제도 및 성인지 지수(SIGI) 2023에 따르면 사회 규범과 법적 프레임워크가 사회 변화의 과정을 주도하거나 여성의 역량 강화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IGI 2019 이후 여성의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28개국에서는 법적 예외 없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강간,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으로 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개 OECD 회원국에서는 폭력 생존자들이 여전히 법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6개 국가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거나 형사 처벌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규범은 또한 여성이 가해자를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강력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스스로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법적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덴마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에서는 2% 이하,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최대 30% 이상, 한국에서는 40% 이상이다(그림 8.8). SIGI 2023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작년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이나 원치 않는 행동에 노출되어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 상해를 입는다고 느낍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여성 3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반면, 남성은 5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그림 8.9).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에서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이 1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약 60%의 여성이,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70%가 넘는 여성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의 및 측정

그림 8.7은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15~49세 여성의 비율과 15세 이상 여성 중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는 OECD 성별, 기관 및 개발 데이터 베이스 2023(GID-DD 2023)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15~49세 여성과 소녀가 평생 동안 친밀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WHO에서, 지난 12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UN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두 출처 모두 행위 기반 질문이 포함된 가구 및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림 8.8은 지정된 이유 중 하나 이상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5세에서 49세 여성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즉,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남편과 다투거나, 말없이 외출하거나, 자녀를 방치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데이터는 GID-DD 2023의 주요 출처는 WHO이며,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및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의 데이터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소녀와 여성의 비율을 반영합니다. 유로바로미터의 데이터는 특정 상황 또는 모든 상황에서 가정 폭력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소녀와 여성의 비율을 반영합니다.

그림 8.9는 “밤이나 거주 도시 또는 지역에서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라는 갤럽 월드 여론조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갤럽 월드 여론조사(Gallup World Pol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지표를 참조하세요.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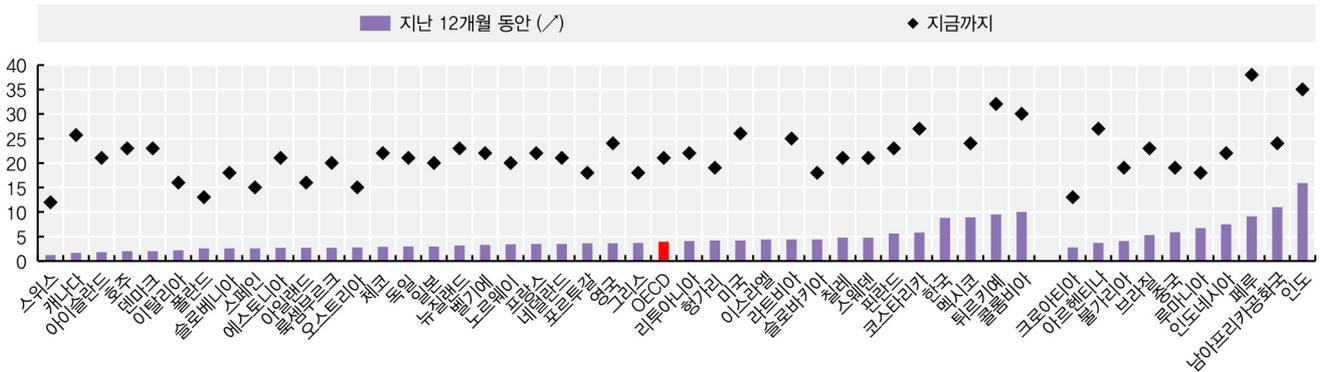
OECD (2023),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2023 Global Report*,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607b7c7-en>.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7: 독일의 12개월 친밀한 파트너 폭력 비율에 대한 자료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우 수명 자료(lifetime data)가 없습니다.

그림 8.7. 여성 25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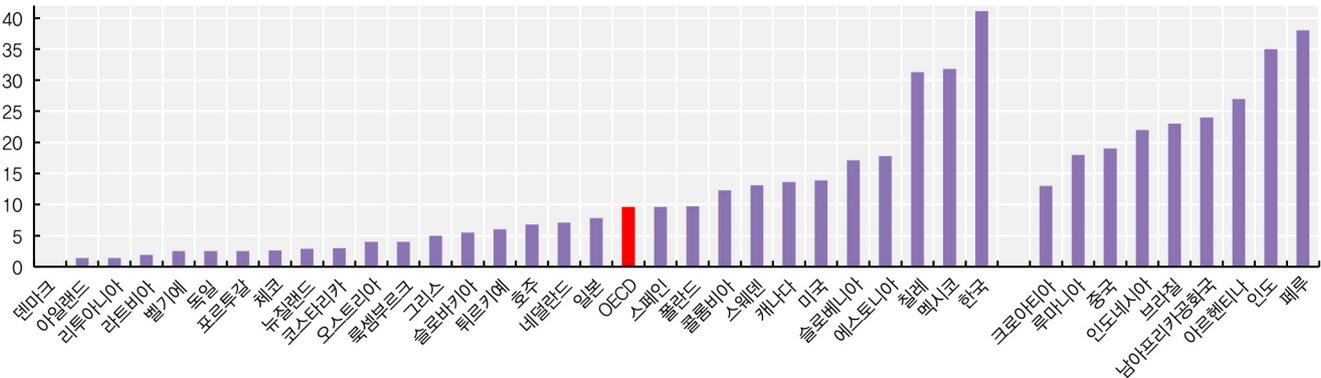
일생 동안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및/또는 성적 폭력을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보고한 여성의 비율, 2018년 기준



출처: OECD (2023),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doi.org/10.1787/7b0af638-en>.
StatLinks <https://stat.link/jgp1k9>

그림 8.8. OECD 여성 10명 중 1명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묵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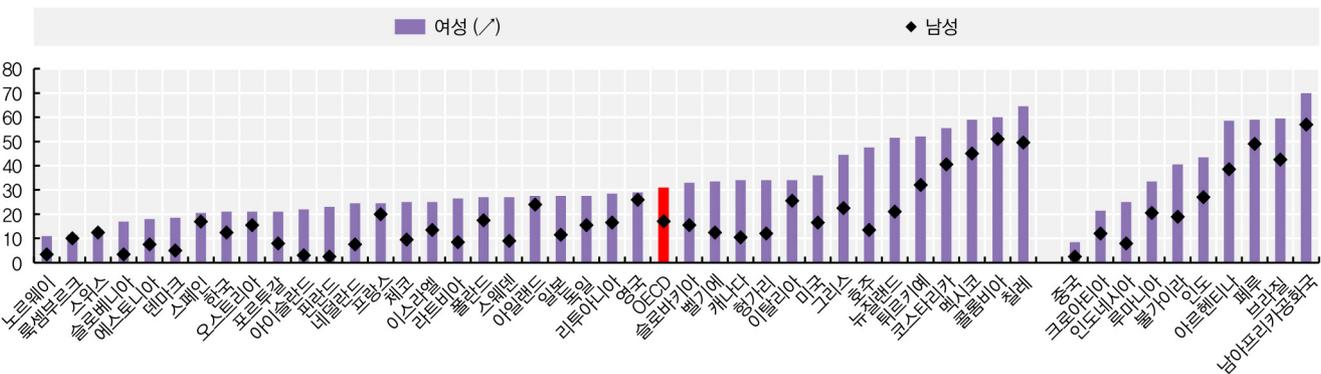
남편이 아내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5~49세 여성의 비율(2010~21년)



출처: OECD (2023),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 <https://doi.org/10.1787/7b0af638-en>.
StatLinks <https://stat.link/t7x290>

그림 8.9. 여성은 남성보다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2021/22년 거주 도시 또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별 비율(%)



출처: Gallup 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s <https://stat.link/b1nql8>

투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 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핵심 과제입니다.

투표율은 OECD 회원국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터키와 스웨덴의 의회 선거 투표율은 80% 이상이지만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는 50% 미만입니다(그림 8.10). 낮은 투표율은 등록된 유권자의 참여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유권자의 등록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선거 참여율이 감소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OECD 전체에서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은 평균 75%에서 65%로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보다 투표율이 낮습니다(그림 8.11). 18~24세의 투표율은 25~50세 성인의 투표율보다 평균 12% 포인트 낮습니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25~50세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호주, 벨기에, 이스라엘에서만 젊은 유권자가 25~50세보다 투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OECD의 젊은이 4명 중 1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변 반면, 모든 연령대의 경우 5명 중 1명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그림 8.12). 15~29세의 정치 무관심도는 칠레, 체코, 헝가리에서 50% 이상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는 전체 인구의 정치 무관심도가 가장 높은 반면, 일본과 노르웨이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의 무관심도를 보였습니다.

정의 및 측정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국민들의 시민 생활 참여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선거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는 회원국의 행정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투표 연령 인구 투표율', 즉 실제로 투표한 투표 연령 인구(VAP)의 비율입니다. 투표 연령에 해당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VAP는 추정치입니다.

투표율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는 법정 투표 연령, 유권자 등록 시스템(자동 또는 잠재적 유권자의 조치 필요), 투표 의무(또는 강제화) 여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16세), 그리스와 인도네시아(17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 및 유럽 국가에서 총선 투표 가능 연령은 만 18세입니다.

국가마다 제도적 구조와 지리적 관할권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의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보다 높을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 헌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운영 방식에 더 중요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투표율에 대한 데이터는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IDEA)에서 관리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IDEA는 유권자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습니다. 젊은 유권자 및 성별에 대한 정보는 선거 제도 비교 연구(CSES 모듈5: 2016~21)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CSES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으로, 선거 후 각국의 설문조사에 공통된 '모듈'의 설문 문항을 배치하고 그 결과의 공통 데이터를 나중에 병합하여 비교 가능한 하나의 국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합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데이터는 유럽 사회 설문조사(ESS10-2020 및 ESS9-2018)와 단어 가치 설문조사 7차: 2017~22(WVS)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두 설문조사의 질문은 응답자에게 네 가지 가능한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합니다: "매우 관심 있음", "어느 정도 관심 있음", "별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 데이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참조합니다.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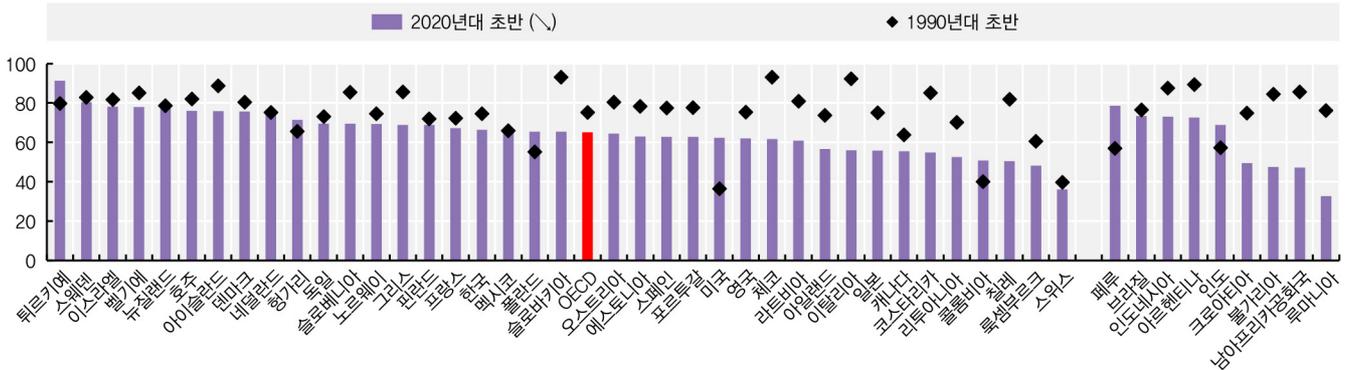
그림 8.10: 투표 연령 인구(VAP) 투표율 통계는 총 투표수를 추정 투표 연령 인구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투표 연령 인구(VAP)에는 법적 투표 연령 이상의 모든 시민이 포함됩니다. 투표율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또는 자치령의 입법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입법기관에 두 개의 상원이 있는 경우 두 번째(하원) 상원만 포함됩니다. 선거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경우(2라운드 시스템 TRS 사용), 두 번째 선거 라운드만 포함됩니다. 자료는 의회 선거를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는 참여율이 높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선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8.11: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스페인에 대한 자료 없음.

그림8.12: 코스타리카 및 룩셈부르크에 대한 자료 없음.

그림 8.10.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선거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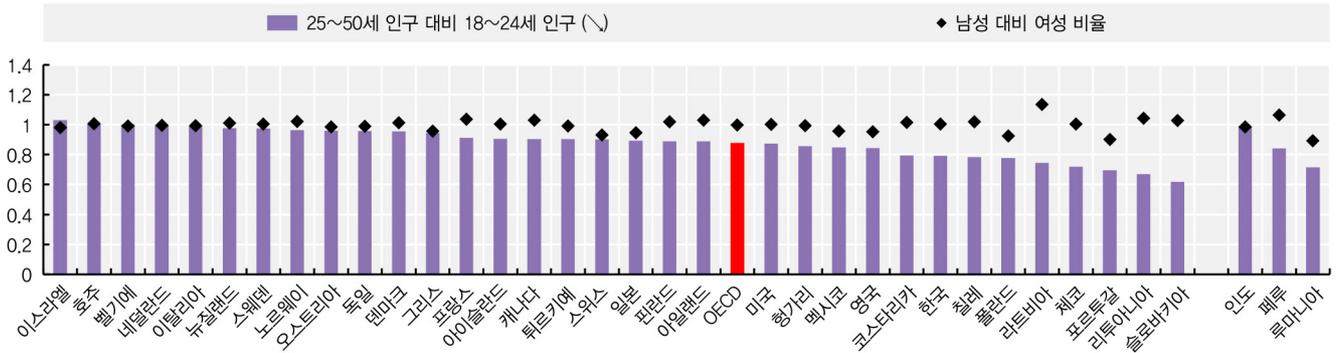
최근 국회의원 선거, 1990년대 초반 및 2020년대 초반 투표율, 투표 연령 인구 비율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Voter Turnout database, www.idea.int/
StatLinks <https://stat.link/7832dm>

그림 8.11. 젊은 층은 25~50세 성인보다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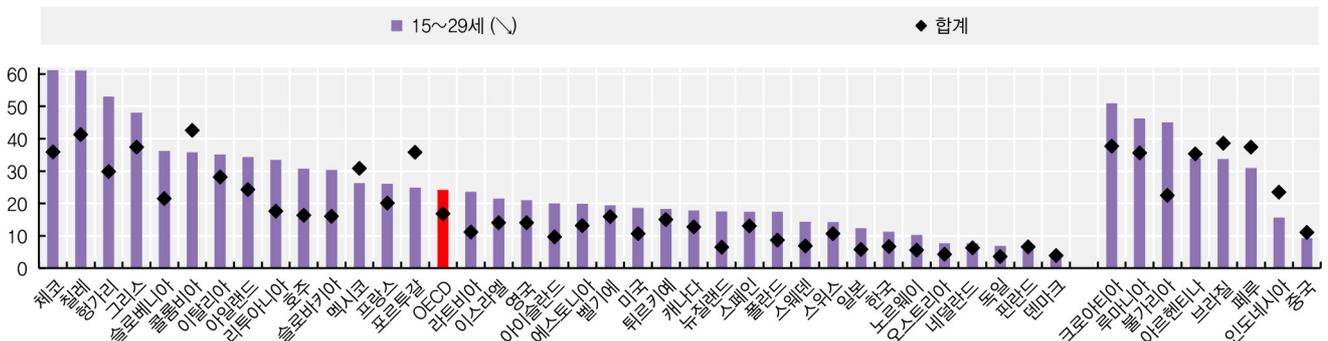
인구 집단별 투표율 비율, 2016~2021년 전후



출처: Module 5 of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 2016-21), <https://cses.org/>
StatLinks <https://stat.link/41yski>

그림 8.12. OECD 청년 4명 중 1명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 연령대별, 2022년 또는 작년 자료 없음



출처: European Social Survey ESS10-2020, ESS9-2018 and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2.
StatLinks <https://stat.link/9hyi0o>

온라인 활동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 사용은 정기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52%에 불과했던 16~74세 인구의 인터넷 사용률이 2022년에는 OECD 평균 약 92%에 달했습니다(그림 8.13). 2005년 이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OECD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했지만, 그리스, 멕시코, 터키의 인터넷 사용률이 60% 포인트 이상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의 차이는 주로 교육 수준과 연령과 관련이 있으며 소득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젊은 층의 인터넷 사용률은 거의 보편적이지만, 노년층의 경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그림 8.14). OECD 평균적으로 2022년 16~2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약 98%인 반면 55~7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약 81%에 그쳤습니다. 2022년 16~2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에서는 100%, 미국에서는 86%에 달했습니다. 반면 55~74세의 인터넷 사용률은 노르웨이에서 99%, 터키에서 53%에 그쳤습니다.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교육 수준과 소득 5분위가 높아질수록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사용률이 약간 더 높지만, OECD 평균적으로 성별 격차는 매우 적습니다.

OECD 국가 청소년의 약 15%가 지난 몇 달 동안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한두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그림 8.15). OECD 회원국 중 사이버폭력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캐나다, 영국으로,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사이버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청소년의 10% 미만이 사이버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청소년의 삶에 새로운 위험과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 노출되면 모욕적인 메시지나 댓글의 신속한 작성 및 공유, 루머 유포, 온라인 그룹에서의 피해자 배제 및 기타 형태의 괴롭힘 등 전통적인 괴롭힘과 비교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나며, 이는 피해자의(이후)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대 여학생이 10대 남학생보다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여학생의 사이버폭력비율이 남학생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남학생의 사이버폭력피해율은 리투아니아에서만 10%포인트 가까이 높았고, 폴란드에서는 2%포인트 미만으로 그보다 낮았습니다.

정의 및 측정

인터넷 사용 자료는 OECD 가구 및 개인의 ICT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모델 조사(OECD Model Survey on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http://oe.cd/hhind>)의 두 번째 개정 본을 기초로 하여 선택된 지표를 제공하는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 및 이용(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인터넷 사용자는 3개월의 회상 기간(recall period) 동안 정의됩니다. 학력은 1997년 국제 표준 교육 분류(ISCED 1997)에 따라 정의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 성취도는 ISCED 0~2,

중간 수준은 ISCED 3 또는 4, 높은 수준은 ISCED 5 이상에 해당합니다. 가구소득은 일반적으로 월 순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며, 이는 밴드(5분위)에 따라 재코드화 됩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데이터는 11세, 13세, 15세 청소년에게 지난 몇 달 동안 누군가 자신의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비열한 인스턴트 메시지, 벽 게시글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 또는 공유한 경험이 있는지 묻은 비율로, 응답 옵션은 전혀 없음에서 일주일에 몇 번까지 다양했습니다. 피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최소 한두 번 이상'이라는 기준이 사용되었습니다. 데이터는 2021~22년 세계보건 기구(WHO) 학령기 아동의 보건 행동(HBSC) 국가 간 공동 조사 (<https://iris.who.int/handle/10665/376323>)를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문헌

OECD (2021), "Children in the digital environment: Revised typology of risks",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30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b8f222e-en>.

Gottschalk, F. and C. Weise (2023), "Digital equity and inclusion in education: An overview of practice and policy in OECD countrie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29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cb15030-en>.

그림에 대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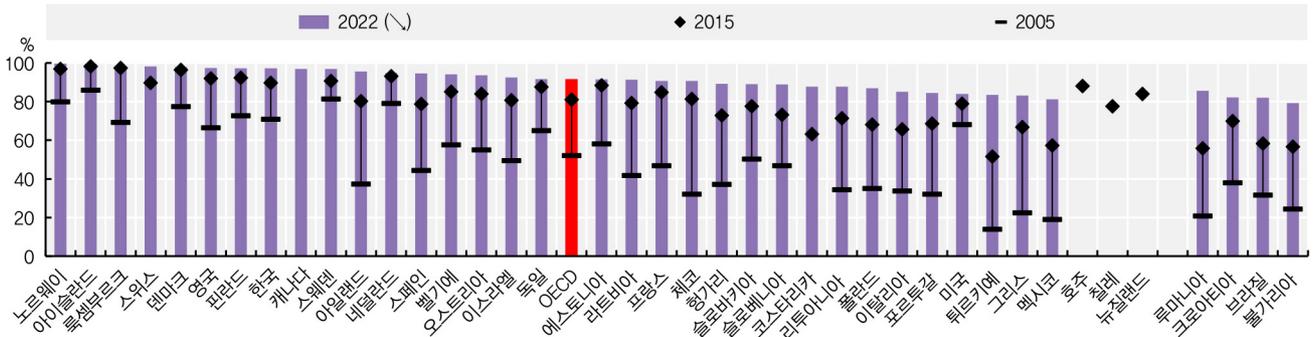
그림 8.13: 2022년 자료는 아이슬란드 및 이스라엘의 2021년 자료를 참조합니다. 2015년 자료는 호주,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2014년, 뉴질랜드의 2012년 자료를 참조합니다. 2005년 자료는 프랑스,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2006년, 미국과 크로아티아의 2007년, 브라질의 2008년 자료를 참조합니다. 호주(2014년), 멕시코(2015년), 뉴질랜드(2012년)의 경우 리콜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5~2022년 자료에 대한 회상 기간은 6개월이며 2015년 이전 자료에 대한 참고문헌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리콜 기간은 1개월이며 16~74세가 아닌 20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캐나다(2005년)와 코스타리카(2022년)의 자료는 18~74세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OECD 평균은 사용 가능한 31개 국가의 단순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 8.14: 교육, 연령, 성별에 대한 OECD 평균은 32개국의 단순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가구소득은 28개국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림 8.15: 벨기에의 자료는 플라망어(60%)와 프랑스어(40%)의 인구 점유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87%), 스코틀랜드(8%), 웨일즈(5%)의 인구 점유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그림 8.13. 지난 20년간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인터넷 사용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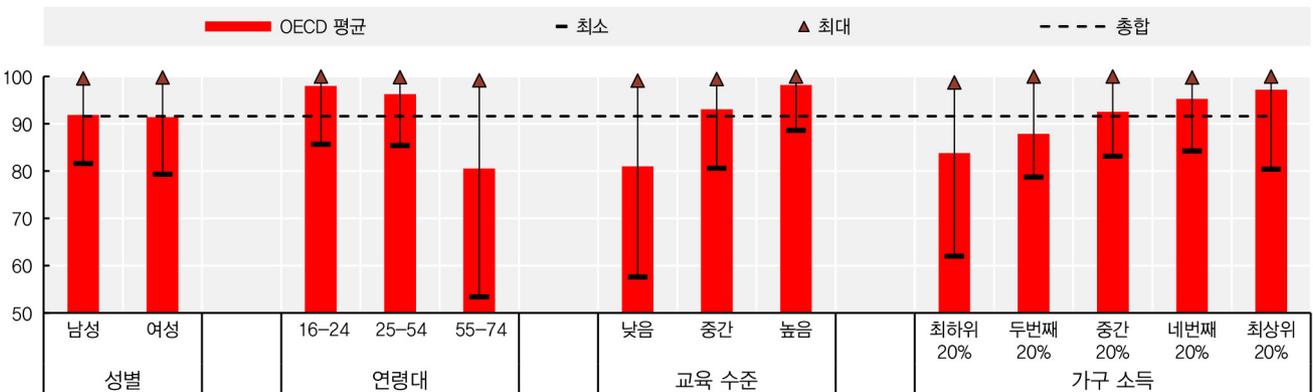
인터넷 사용자,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22년, 2015년, 2005년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database, <https://doi.org/10.1787/8e9d27ad-en> (accessed November 2023).
StatLinks <https://stat.link/xaeyung>

그림 8.14. 인터넷 사용은 학력,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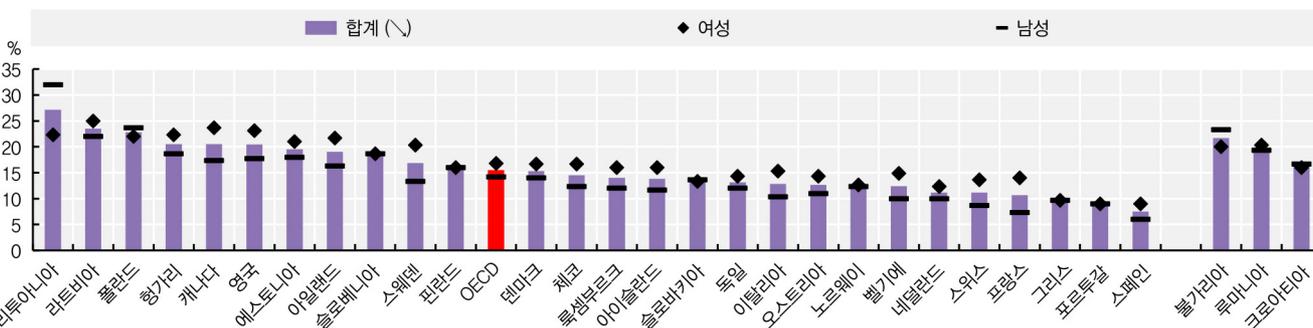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별 인터넷 사용자 수, 각 그룹별 비율, OECD 평균 2022년



출처: OECD, ICT Access and Usage by Households and Individuals database, <https://doi.org/10.1787/8e9d27ad-en> (accessed November 2023).
StatLinks <https://stat.link/tgdkux>

그림 8.15. 10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이버 폭력을 한 번 이상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11세, 13세, 15세 어린이의 성별 비율, 2021~22년



출처: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2024). A focus on adolescent peer violence and bullying in Europe, central Asia and Canada.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21/22 survey. Volume 2, <https://iris.who.int/handle/10665/376323>.
StatLinks <https://stat.link/ldvgfm>

한 눈에 보는 사회 2024

OECD 사회 지표

이 보고서는 격년으로 발행되는 *OECD 사회 지표* 개관 보고서의 10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점점 커져가는 사회적 웰빙과 그 추세에 대한 정량적 증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출산율 추세를 다루는 특별 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OECD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성과, 주거비용, 그리고 가족 정책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측면(예: 육아휴직, 보육, 재정적 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이번 판은 2022년 OECD 사회적 위험 조사(2022 OECD Risks that Matter) 결과를 바탕으로 한 특별 섹션도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적 위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다룬다. *한 눈에 보는 사회*는 일반,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 통합에 관한 각 장에서 5개씩 총 25개 사회 지표를 제시한다. 이 지표들은 38개 OECD 회원국의 데이터를 포함하며, 가능할 경우 가입 후보국 및 주요 파트너국(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브라질, 크로아티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G20 국가(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도 포함한다.

